

제 68권 제 2호 | 2025. 6

국방연구

- 한반도의 안정-불안정 역설 분석: 3각 억제구조의 간접 핵 억제 관점에서 _ 장재규
-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방안: 2024년 이스라엘 전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_ 유민규
- 한국 해군의 무인수상정 활용과 대응 방안: 최근 해상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_ 김태양, 하용훈
- 미국 군대의 항명 사례 연구 _ 임재강
- 러시아의 전략문화 및 군사전략의 특성과 우크라이나 침공 _ 우평균
- 러-우 전쟁 해양작전 교훈과 한국 해군의 전략/전력 발전에 대한 함의 _ 한중환
- [서평] 핵비확산과 안보: 한국 핵정책의 역사적 궤적과 함의 _ 강창우



제 68권 제 2호 | 2025. 6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는 한국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본지는 연4회 발간되는 심사제 학술논문지입니다.

국 방 연 구

제68권 제2호

인쇄 2025년 6월 30일

발행 2025년 6월 30일

발행인 : 임 기 훈 (국방대학교 총장)

편집인 : 박 영 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편집위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호 (해군사관학교)

박성용 (전북대학교) 송태은 (국립외교원)

신범식 (서울대학교) 신성호 (서울대학교)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윤태성 (한국과학기술원) 이홍섭 (국방대학교)

임은정 (공주대학교)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구연 (강원대학교)

편집간사

장광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행처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전화 : (041)831-6461

E-mail : rinsakj@kndu.ac.kr

인쇄 : 화신문화주식회사 (02)2277-0624

ISSN 1229-3598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불안정 역설 분석: 3각 억제구조의 간접 핵 억제 관점에서 _ 장재규	1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방안 : 2024년 이스라엘 전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_ 유민규	29
한국 해군의 무인수상정 활용과 대응 방안: 최근 해상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_ 김태양, 하용훈	57
미국 군대의 항명 사례 연구 _ 임재강	83
러시아의 전략문화 및 군사전략의 특성과 우크라이나 침공 _ 우평균	119
러-우 전쟁 해양작전 교훈과 한국 해군의 전략/전력 발전에 대한 함의 _ 한종환	157
[서평] 핵비확산과 안보: 한국 행정책의 역사적 궤적과 함의 _ 강창우	187

저자약력

193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8**, Number **2** 2025 **6**

-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on the Korean Peninsula: An Indirect Nuclear Deterrence Perspective within a Triangular Deterrence Structure _ **Jang Jaekyu** 1
- Enhancing Extended Deterrence through the Deployment of U.S. Missile Defense Assets: Focused on a Case Study of the 2024 Israel Theater _ **Minkyu Yu** 29
- Employment and Countermeasures of Unmanned Surface Vessels for the Republic of Korea Navy: An Analysis of Recent Maritime Combat Cases _ **Tae-Yang Kim & Yonghoon Ha** 57
- A Study on Cases of Disobedience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_ **JaeKang, Lim** 83
- Characteristics of Russia’s Strategic Culture and Military Strategy, and its Invasion of Ukraine _ **Woo, Pyung Kyun** 119
- Lessons from the Russia-Ukraine War at Sea a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val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 _ **Han, Jonghwan** 157
- [Book Review]**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Security: The Historical Trajectory and Implication of South Korea's Nuclear Policy _ **Changwoo Kang** 187

Contributors 193

한반도의 안정-불안정 역설 분석: 3각 억제구조의 간접 핵 억제 관점에서

장재규*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 III. 한반도 안정-불안정 역설 분석
- IV. 결론

요약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2009년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도화되면서 구축된 한·미·북 삼각 억제구조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전략적 안정성을 전제로 반복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핵 동맹국의 전략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간접 핵 억제를 정립하고 적용한다. 이 개념은 한국이 미국의 핵 억제 신호에 전략적으로 의존하면서도 그 운용에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로 기능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3각 억제구조 하 도발 메커니즘의 해석에 기여한다.

이론적 기반에 따라, 본 연구는 전략적 안정성, 전술적 불안정성, 행위자의 기대 효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전면전은 억제되면서도 제한적 도발은 반복되어, 한반도에 안정-불안정 역설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역설이 단순한 이론 모형이 아니라, 핵 억제의 제도화와 도발의 전략적 선택성이 결합된 복합적 구조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안정-불안정 역설, 3각 억제구조, 확장억제, 간접 핵 억제, 북한 도발

I. 서론

냉전 이후 국제정치학에서 핵무기의 억제 효과에 관한 논의는 전략적 안정성과 전술적 불안정 간의 역설적 관계, 즉 ‘안정-불안정 역설’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이론은 핵억제가 전면전을 억제하는 데 성공할수록, 오히려 저강도 국지적 도발의 유인은 증가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함정을 지적한다. 전면전이라는 전략적 고비용 충돌이 통제될 경우, 행위자들은 제한적 수준에서 상대를 시험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을 낮은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제한적 도발을 선택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론의 초기 정식화는 Glenn H. Snyder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핵 억제가 전면전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지전을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 이후 Jervis, Waltz, Rauchhaus 등은 핵 억제 속에서도 저강도 충돌이 빈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론을 경험적·정량적으로 정교화하였다.²⁾

한반도는 이러한 이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된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핵 능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한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국지적 도발을 지속해 왔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한 한국-북한-미국 간 3각 억제구조가 제도화된 2009년 이후, 북한은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 않는 간접적·비가시적 도발 양식을 빈번히 사용하며 억제구조를 우회하려는 전략을 보여왔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에서도 안정-불안정 역설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억제 이론의 전통적 가정과 비대칭 현실 사이의 긴장을 제기한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안정-불안정 역설을 북한의 도발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자동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론의 작동 조건이나 한반도 특유의 억제구조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³⁾ 다수의 연구가 북한의 도발 사례를 나열하고 이를 곧바로 역설 이론에 귀속시키는 방식에 머물며,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를 전제로 한 비핵 동맹국의 간접 억제구조에 대한

1) Glenn H. Snyder, “The Balance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error,” in *Theories of War and Peace*, ed. by M. Brown et al., MIT Press, pp. 191-199, 1998.

2) Robert Jervis,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o. 171, 1981.; Robert Rauchhaus, “Evaluating the Nuclear Peace Hypothesis: A Quantitative Approa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3) 예컨대 다음과 같은 국내 연구들은 북한의 도발 사례를 안정-불안정 역설의 작동 결과로 전제하거나, 이론의 작동 조건을 별다른 검토 없이 사례 분석에 국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용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안정-불안정 역설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6권 2호, 2016.; 이성우, “북한 핵무장 이후 안정-불안정 역설의 재해석: 위기관리의 구조적 조건,” 『한반도평화연구』 제5권 1호, 2018.; 박정범, “억제이론으로 본 대남도발 억제 실패요인 분석,” 『군사연구』 제139집, 2015.; 윤민우, “핵 억제와 북한의 저강도 도발 사이의 상관관계: 안정-불안정 역설 적용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4권 1호, 2018.; 김기정, “핵 억제 환경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 2017.

이론적 반영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한 3각 억제구조 속에서 전략적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속에서 북한의 제한적 도발이 구조화되어 나타나는가? 둘째, 이러한 도발은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기존 연구의 비판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한 뒤, 북한의 도발 양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2009년 이후의 시기를 기준으로 도발의 빈도, 수단, 확산 억제 정도, 기대 효용 등을 계량 및 해석 지표로 활용하여, 안정-불안정 역설의 구성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기존 이론이 명시적으로 개념화하지 못한 ‘간접 핵 억제’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비핵국가가 핵 보유 동맹국의 억제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일정 수준의 억제 주체 역할을 하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핵우산 개념을 넘어, 비핵국가가 억제 신호의 일부를 능동적으로 조정·확산하는 구조를 개념화하는 시도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안정-불안정 역설과 확장억제 이론의 주요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미국-북한 간 3각 억제구조의 개념을 설정한 뒤, 분석의 틀과 평가 요소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안정성과 전술적 불안정, 기대 효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 도발의 성격과 구조적 변화 여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정-불안정 역설의 작동 여부를 평가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1. 안정-불안정 역설

안정-불안정 역설은 핵무기에 의해 전략적 차원의 전면전이 억제될수록, 저강도 수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Jervis는 상호확증파괴 체제에서는 전면전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지만, 그에 따라 제한적 충돌이나 국지적 도발에 대한 상대적 위험 감수 성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⁴⁾ Snyder 역시

4) Jervis, 1984.

핵무기가 전면전 억제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국지적 수준에서는 도발 행동을 유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 이러한 논의는 핵 억제 안정성이 전략적 수준에서 전쟁 가능성을 낮추지만, 전술적 수준에서는 긴장과 도발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Waltz는 안정-불안정 역설의 메커니즘을 행위자의 위협 감수 증가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⁶⁾ 그에 따르면, 전면전이 억제되었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행위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국지적 행동을 시도할 유인을 갖게 된다. Rauchhaus는 이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핵보유국 간 대규모 전쟁 가능성이 감소하는 한편, 저강도 충돌 빈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⁷⁾ 이러한 안정-불안정 역설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억제의 수준 차이에 기초한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상호 핵 억제로 대규모 군사 충돌이 통제되지만, 국지적-전술적 차원에서는 억제의 명확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제한적 도발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⁸⁾ Horowitz는 핵무기의 억제 효과가 행위자의 인식과 기대 효용에 의해 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 억제는 자동적 작동이 아니라 행위자의 판단에 따라 변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구조는 현실 적용에 있어 여러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선, 전략적 안정성이 실제로 국지적 행동의 위협 감수 증가로 귀결되는지는 행위자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¹⁰⁾ Sagan은 행위자들의 체제 불안정, 내부 정치 동학, 군사문화와 같은 요인이 국지 도발 경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¹¹⁾ 또한, 확장억제 환경에서는 억제 주체와 피억제자 간 신뢰성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기능하며, 안정-불안정 역설이 단순한 양국 간 핵 억제 상황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할 수 있다.¹²⁾ 최근 연구들은 안정-불안정 역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핵 보유나 억제 상황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 간 전략

5) Snyder, 1965.

6) Waltz, 1981.

7) Rauchhaus, 2009.

8) Robert Powell, *Nuclear Deterrence Theory: The Search for Cred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9) Michael C. Horowi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pp. 234-257, 2009.

10) Erik Gartzke and Matthew Kroenig, "Nuclear Posture, Deterrence,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1, no. 3, pp. 391-420, 2017.

11) Scott D. Sagan, "The Origins of Military Doctrine and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Systems", in Peter R. Lavoy, Scott D. Sagan, and James J. Wirtz (eds.), *Planning the Unthinkable: How New Powers Will Use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6-46, 2000.

12) Paul Hut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Yale University Press, 1988.

적 인식, 위협 신뢰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³⁾

2. 3각 억제구조와 간접 핵 억제

확장억제는 억제 주체가 자국 본토가 위협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적 보복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함으로써 잠재적 공격자의 행동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Schelling은 이를 “동맹국을 위해 자국의 도시를 위협에 노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확장억제가 단순한 군사능력 이상의 신뢰성 문제를 수반한다고 강조하였다.¹⁴⁾ 즉, 억제의 성공은 공격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¹⁵⁾ 확장억제의 작동에는 두 가지 신뢰성이 필수적이다. 하나는 동맹국이 억제 주체의 방위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억제자가 그 위협을 실질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¹⁶⁾ 특히 핵 억제를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신뢰성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억제 주체는 피억제자에 강한 보복 의지를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동맹국에는 전면전 확전 없이도 안정적 방어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⁷⁾

한국과 북한, 미국 간에 형성된 억제 관계는 이러한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단순한 양자 억제가 아닌 3자 간 상호작용의 복합구조를 형성한다.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미국의 전략 자산 운용과 핵 억제 능력에 전략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간접적 억제력을 확보한다. 북한은 이러한 억제구조를 인식하고, 우회하거나 도발 전략을 조정했다.¹⁸⁾ 이처럼 한반도의 억제구조는 핵보유국(미국), 비핵국가(한국), 핵 위협국(북한)이 각기 다른 입장과 전략을 갖고 있는 비대칭 3자 억제 체계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억제구조의 다층성과 상호 신호 구조의 복잡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¹⁹⁾ 특히 억제 주체

13) Matthew Kroenig, *The 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Why Strategic Superiority Matter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14)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Yale University Press, 1966.

15) Huth, 1988.

16) Patrick Morgan, *Deterrence N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7) Jeffrey W. Knopf, “The Fourth Wave in Deterrence Research”,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31, no. 1, pp. 1-33, 2010.

18) Terence Roehrig, “South Korea and the US Nuclear Umbrella: Deterrence Strategy and Political Costs”, *Asian Survey*, vol. 50, no. 3, pp. 539-560, 2010.

19) Brad Roberts,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가 두 개의 대상(적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동시에 상반된 전략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딜레마는 더욱 심화한다.²⁰⁾ 이러한 억제구조의 특수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미국-북한 간 억제 관계를 ‘3각 억제구조(triangular deterrence structure)’로 개념화한다. 이 개념은 핵보유국, 비핵 동맹국, 핵 위협국 간 상호 인식의 작용을 중심으로 억제 신호의 복잡성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사용한다.

또한 한국의 전략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핵 능력과 확장억제 체계에 전략적으로 의존하여 억제 효과를 실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억제구조는 기존 확장억제 이론의 연장선에 있으나, 억제 주체(미국)가 직접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억제 대상(북한)에 대해 3자인 동맹국(한국)이 간접적으로 억제 효과를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간접 핵 억제(indirect nuclear deterrenc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간접 핵 억제란 비핵국가가 자국의 억제 전략에 있어 동맹국의 핵 능력에 전략적으로 의존하면서, 그 운용과 신호 발신 과정에 일정 부분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구현하는 전략 형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기존 이론에서 명시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비핵국가가 동맹국의 핵전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억제구조 내에서 능동적 억제 역할을 하는 특수한 형태를 지칭한다.²¹⁾ 이는 ‘핵우산’ 혹은 ‘핵 억제 그림자(shadow of nuclear deterrence)’²²⁾와 유사하지만, 단순히 수동적 보호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사-외교적 차원에서 핵 억제 신호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운용에 개입하는 전략적 주체로서 역할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²³⁾

간접 핵 억제 개념은 3각 억제구조에서 동맹국(한국)이 억제 신호의 신뢰성과 효과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거나 확대하는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이 개념이 기존 문헌에서 논의된 확장억제, 복합 억제(compound deterrence), 대리 억제(proxy deterrence) 등의 개념²⁴⁾과 접점을 가지되, 비핵국가의 전략적 억제 행위를 독자적 분석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 구조를 설명하는

20) Kurt Guthe, “Extended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Comparative Strategy*, vol. 32, no. 4, pp. 336-344, 2013.

21) Roehrig, 2017.

22) Veselý, A., “Deterrence Theory and Non-Nuclear Allies: The Logic of Indirect Nuclear Deterren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5, no. 6, 2022.

23) Roberts, 2015.

24) 복합 억제는 여러 동맹국이 공동으로 억제력을 형성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으로, 억제 주체가 다수이며 신호 구조 역시 집단적 성격을 띤다. 대리 억제는 특정 국가가 다른 행위자를 대신하여 억제 행위를 수행하는 간접 억제 모델로, 억제 수단의 위임과 관련된다. Roberts, 2015; Morgan, 2003; Veselý, 2022.

데 있어 개념적·정책적 보완력을 갖는다고 판단한다.²⁵⁾ 간접 핵 억제는 기존 개념들과 구분되는 세 가지 핵심적 특성을 내포한다. 첫째, 비핵국가(한국)는 단순히 보호받는 객체가 아니라, 미국의 핵 억제력이라는 외생적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억제 신호의 일부를 능동적으로 발신하고 운용에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자로 기능한다. 둘째, 억제의 신호 구조가 단순한 양자 간 전달이 아니라, 미국(핵보유국), 한국(비핵 동맹국), 북한(핵 위협국) 간의 3자 간 상호 인식과 전략 조정을 통해 구성되며, 신호의 방향성과 내용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셋째, 간접 핵 억제는 기존 확장억제 개념이 강조하던 '보호의 약속' 차원을 넘어서, 비핵국가의 전략적 억제 행동 그 자체를 분석단위로 부각하며, 이는 특히 동맹국이 스스로 위기 관리·신호 조절·확전 통제에 개입하는 현실을 보다 충실히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간접 핵 억제 개념은 기존의 이론 틀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3각 억제 구조에서 비핵국가의 억제 주체화라는 특수한 전략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 기능한다.

3. 분석의 틀

한반도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이 한국과 북한 간의 상호 억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안정-불안정 역설은 핵 억제력이 고강도 전면전 가능성을 억제함으로써 전략적 안정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억제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행위자가 저강도 또는 국지 도발을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안정성과 전술적 불안정이라는 이중 조건의 동시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구조적 긴장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핵심 분석 요소를 설정한다. 첫째는 전략적 안정성이다. 이는 북한의 핵 사용을 동반하는 전면전이나 고강도 무력 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억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주요 군사 충돌의 발생 여부, 한미 간 전략 자산 운용, 확장억제 관련 공식 선언의 변화, 북한의 전면전 회피 전략 등 전략 환경의 변화 지표를 중심으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하여 전략적 안정성의 형성 정도를 판단한다.

둘째는 전술적 불안정이다. 이는 국지적 도발의 빈도와 양상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증가하거나, 도발 수단이 다양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분석은 연도별 도발 사례 수, 도발

25) Morgan, 2003.

유형의 분류, 피해 수준, 무력 사용 여부 등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구조적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오물풍선, UAV, 사이버 공격 등 비전통적 수단을 포함하여 도발의 저장도화, 간접화, 비군사화 경향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셋째는 행위자의 기대 효용이다. 이는 북한이 도발을 선택할 때 해당 행위가 제공하는 정치적·외교적·전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분석은 도발 이후 북한의 외무성 담화, 대내 선전 내용, 협상 또는 국면 전환 효과, 대미/대남 전략 변화 등과 같은 간접적 정성 지표를 통해 도발의 목적성과 기대효과를 추론한다. 이로부터 북한이 전략적 안정성 하에서 도발을 체제 생존, 대외 메시지 강화, 전술적 협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이 확인될 경우, 행위자의 기대 효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세 가지 분석 요소는 독립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구조적 평가 틀로 작동하며, 각 요소의 충족 정도에 따라 안정-불안정 역설의 작동 여부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 첫째,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될 경우, 안정-불안정 역설은 구조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전략적 안정성은 확보되었지만, 전술적 불안정의 변화가 미약하거나 도발 양상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이는 제한적 또는 조건부 작동 상태로 간주한다. 셋째, 전략적 안정성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전반적인 억제 실패 또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안정-불안정 역설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는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실제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3각 억제구조 형성 전후'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사례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시기 구분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3각 억제구조가 제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시기(2006~2008년)는 '3각 억제구조 형성 전 시기'로,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했지만, 미국의 확장억제가 전략적 억제구조로 제도화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로 간주한다. 두 번째 시기(2009년 이후)는 '3각 억제구조 형성 이후 시기'로, 확장억제가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공식화되고, 전략 자산 운용 및 정책 조율 체계가 정비되면서 억제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단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단순한 연대기적 구획이 아니라, 확장억제의 구조적 작동 여부에 따라 전략적 안정성과 전술적 불안정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능한다.

분석 방식은 정성적 해석을 중심으로, 일부 정량 지표(도발 건수, 수단 다양화 등)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혼합형 분석 틀에 기반한다. 정성 분석은 각 시기의 전략 문서, 정책 담화, 대응체계 등을 바탕으로 전략 환경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인식 변화를 해석하며, 정량 분석은 도발의 수, 유형, 피해 수준 등 일부 계량 지표를 활용해 도발 양상의 구조적 변화를 간접

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전략적 안정성, 전술적 불안정, 기대 효용이라는 세 평가 요소별 작동 양상을 시기별로 비교·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III. 한반도 안정-불안정 역설 분석

앞서 설정한 분석 틀에 따라, 본 장에서는 3각 억제구조가 형성된 이후 한반도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세 단계에 걸쳐 검토한다. 1절에서는 전략적 안정성과 전술적 불안정을 각각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역설이 성립하기 위한 기초 조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2절에서는 1절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안정-불안정 역설의 조건에서 선택된 전략적 행위인지, 혹은 반복된 정치·군사적 습속의 연장선인지에 대한 이론적 정합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전략 환경과 작동 조건을 중심으로 도발의 성격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확장억제 체제가 제도화되기 이전(2006~2008년)과 이후(2009년 이후)의 시기를 비교하여, 전략적 안정성과 전술적 불안정의 구조적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안정-불안정 역설의 실질적 작동 조건을 형성했는지를 평가한다.

1. 역설의 기본 조건은 충족하는가?

가. 전략적 안정성 평가

전략적 안정성은 전면전 수준의 군사 충돌이 억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2009년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국지 도발에 대응하여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반복적으로 전개해 왔다. B-52H, B-1B 전략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 등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나 도발 직후 단기적으로 운용되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전개 빈도가 증가해 2022년에는 항공모함이 세 차례 이상 출동했다.²⁶⁾ 또한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협의체(NCG)가 설립되고,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실시간 협의 체계가 강화되면서, 확장억제가 정치적 약속을 넘어 제도화된 위기관리 체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²⁷⁾ 전

26) 국방부, 『국방백서 2022』, pp. 21, 40-41. 2023.

27) The White House,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April 26, 2023.

면전 억제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중강도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충돌 수준에 머물렀던 사례들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과 2015년 DMZ 지뢰 도발은 모두 인명 피해를 수반했지만, 한국은 제한적 군사 대응에 그쳤고, 미국은 전략 자산을 전개해 확전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²⁸⁾ 이는 위기 국면에서의 실질적인 억제구조 작동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전략적 안정성은 물리적 충돌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간 인식과 제도적 구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2009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이 명문화된 이후, 해당 문구는 모든 SCM 공동성명에서 반복되었으며, 2016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창설, 2023년 워싱턴 선언에서의 NCG 설립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명시는 확장억제의 정책적 수사에서 구조화된 운용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²⁹⁾ 북한 역시 전략적 안정성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이후 북한은 “핵전쟁 억지력”, “자위적 핵 억제” 등의 표현을 통해 핵 위협을 시사하되, 전면전 가능성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의 UAV 침투, GPS 교란, 오물풍선 등도 전면 충돌 대신 간접적·비군사적 도발 수단을 선택하려는 전략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정량적으로는 전략 자산 운용의 빈도와 무력 도발의 제한적 대응이, 정성적으로는 확장억제의 제도화 수준과 북한의 전략 선택 방식이 2009년 이후 한반도에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안정성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는 안정-불안정 역설의 성립 조건 가운데 하나인 전면전 억제의 구조적 기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나. 전술적 불안정 평가

전술적 불안정이란, 전략적 안정성이 형성된 상황에서 행위자가 제한된 수준의 도발을 반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존재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원래 전면전이 억제된 상황에서 재래식 무력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는 역설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만, 현대 안보 환경에서는 도발 수단이 정규전의 범위를 넘어 비정규·비대칭·심리전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발 양상의 변화와 수단의 다변화를 반영하고, 객관적 기준 확보를 위해 『국방백서』에서 군사적 도발로 공식 규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술적 도발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포격, 침투, 무력 충돌 등과 같이 전통적인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직접·재래식 도발이다. 둘째, UAV 침투, 오물 풍선과 같이 군사적 명시성은 낮지만, 물리적 효과를 유발

28) 국방부, 『국방백서 2012』, pp. 118-120. 2012.; 국방부, 『국방백서 2020』, 2020, pp. 56-58.

29) 국방부, 『국방백서 2016』, p. 12. 2016.; 국방부, 2020, pp. 36-38; The White House, 2023.

하는 비정규 도발이다. 셋째,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비접촉적·신기술 기반 간접 도발로, 기존 군사적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에서의 억제 회피 시도에 해당한다. 이 세 유형은 공통적으로 전면전 확전은 회피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일정 수준의 군사적·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는 전략적 억제력을 겨냥한 고도 도발로 간주되어 전술적 불안정성 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술적 불안정의 존재 여부를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첫째, 북한이 도발을 전략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수단으로 구조화했는가. 둘째, 도발 수단이 점차 비정규적이고 기술적으로 다양화되었는가. 셋째, 도발이 반복되었음에도 전면전으로 확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는가이다.

2009년 이후 북한은 다양한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들 도발은 즉각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하기보다는, 경계 태세 시험, 협상 분위기 전환, 체제 내부 결속 등 정치적 목적을 동반한 전략적 행위로 기능해 왔다. 이는 도발이 일회성 반응이 아니라, 반복이 가능한 전략 옵션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도발이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도발 수단이 UAV, GPS 교란, 오물풍선 등 식별이 어렵고 대응이 제한적인 수단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단은 군사적 대응을 회피하면서도, 확산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줄이는 전술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2015년 이후 등장한 UAV 도발과 GPS 전파 교란 사례는 대표적인 저강도 간접 도발로, 북한의 저비용-고효율 전략 선택 경향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2020년과 2022년 『국방백서』에서 UAV, 드론, 전파 교란 등 신유형의 비정규 위협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들이 심리적·정치적 영향을 의도한 새로운 도발 양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³⁰⁾

이러한 도발이 반복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사례는 전면전으로 확산하지 않고 제한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 연평도 포격(2010)과 DMZ 지뢰 도발(2015) 이후에도, 한국의 대응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고, 미국은 전략 자산 전개를 통해 위기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³¹⁾ 이는 북한 역시 도발이 억제선을 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모두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우선한 위기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은 오히려 도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으로 기능하며, 안정-불안정 역설이 설명하는 구조적 함정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전술적 도발은 2009년 이후 하나의 지속적이고 전략화된 선택지로

30) 국방부, 2020, pp. 56-58; 국방부, 2023, pp. 19-21.

31) 국방부, 2012, pp. 118-120.

작동해 왔다. 그 수단은 점차 비정규·비군사·간접적 형태로 다양화되었고, 이러한 도발은 전면전으로 확산하지 않는 안정 조건 하에서 반복되었다. 이는 북한이 제한된 도발 공간을 전략적으로 구조화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근거이며, 안정-불안정 역설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전술적 불안정의 구조적 존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다. 소 결론

2009년 이후 한반도에서 나타난 전략적 안정성과 전술적 불안정의 양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안정-불안정 역설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점검하였다. 먼저 전략적 안정성 평가에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 운용의 반복과 제도화, 북한의 전면전 회피 전략의 지속, 그리고 실제 도발 국면에서의 확전 통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3각 억제구조 형성 이후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략적 안정성이 일정 수준 이상 성립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전술적 불안정 평가에서는, 북한이 다양한 위기 국면에서 도발을 반복적으로 선택해 왔으며, 그 수단은 점차 비정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확전 가능성이 억제된 조건 속에서 도발이 반복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전략 옵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구조는 제한된 수단과 범위 내에서 도발이 지속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전술적 불안정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면, 2009년 이후 한반도에는 ① 전면전 억제를 전제로 한 전략적 안정성, ② 제한된 수단과 범위 내에서 반복되는 전술적 도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안정-불안정 역설의 이론적 전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북한 도발은 전략적 안정성에 기반하는가?

앞선 분석에서는 2009년 이후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성과 전술적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불안정 역설의 기본 전제 조건이 정량적·정성적으로 충족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곧바로 이론적 차원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정-불안정 역설은 단순히 도발이 발생하는 현상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발이 전략적 안정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기반하여 전략적으로 선택된 결과일 때만 이론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 전략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구조적으로 유도된 선택인지, 아니면 북한 고유의 정치적·체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독립적 행태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과거부터 체제 결속, 내부 통제, 협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핵무기 보유 이전부터 일관된 전략적 문화로 이어져 왔다. 예컨대 김성철(2014)은 북한의 군사 행동을 핵 보유 이전에 이미 형성된 독자적 억제전략으로 해석하며, 핵무장 이후에도 이러한 전략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³²⁾ 이처럼 도발의 기원을 전략 구조와 무관하게 이해하는 해석은, 전술적 불안정의 존재를 안정-불안정 역설의 작동 결과로 단정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도발의 인과 구조를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그 발생이 전략적 안정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안정-불안정 역설의 이론적 정합성과 적용 조건을 평가하고자 한다.

가. 북한의 전략 환경과 이론적 정합성

(1) 북한 전략 환경의 구조적 특성과 역설 적용 가능성

안정-불안정 역설은 전략적 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행위자가 제한된 수준의 도발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공간이 조성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론적 차원에서 이 역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핵 억제를 통해 전면전 확산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하며, ② 그 안정 구조를 인식한 행위자가 비핵·비정규 수단을 통해 제한적 도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③ 도발에 대한 상대의 대응이 확전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략적 안정성은 도리어 불안정한 국지 도발을 유인하는 역설을 형성하게 된다.³³⁾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전략 환경을 평가하면, 역설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과 일정한 정합성이 관찰된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한미연합군에 비해 현저한 열세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전면전 수준의 군사 충돌을 회피하는 전략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³⁴⁾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전력의 노후화, 군수 물자의 부족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군사전략의 중심이 비정규전, 심리전, 핵 억제 전략으로 이동하였다.³⁵⁾ 이러한 구조적 열세는 북한이 통제 가능한 국지 도발을 선호하도록 유도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

32) 김성철,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제4호, 2014, p. 137.

33) Snyder, 1998, pp. 191-199.

34) 김강녕, “제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통일전략』 제17권 제4호 2017, pp.46-47.

35)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4, pp.176-179.

도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UAV 침투, GPS 교란, 오물풍선 등 비정규·비군사 수단을 반복적으로 활용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³⁶⁾

(2) 도발의 전략적 선택성과 기대 효용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반복 행위가 아니라, 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전략적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2015년 DMZ 지뢰 도발 이후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8·25 합의로 이어졌고, 내부 선전에서는 이를 “자주적 승리”로 포장하여 체제 결속 강화에 활용하였다. 2024년 오물풍선 도발 또한 군사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수단이었다.³⁷⁾ 이러한 사례는 북한이 단순한 저강도 도발을 넘어서 정치·전략적 기대 효용을 노리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틀에서 제시한 세 번째 평가 요소인 ‘기대 효용’의 실질적 충족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도발이 구조적으로 허용된 공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되었고, 이를 통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안정-불안정 역설이 단지 구조적 조건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작동한다는 점을 강화하는 증거이다.

(3) 간접 지표 검토

북한 도발의 기대효용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를 보다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성·정량 지표들을 간접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도발 직후 발표된 외부성 담화, 노동신문 사설 등에서 “승리”, “굴복”, “자위권”과 같은 핵심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분석하면, 해당 도발이 체제 내부 결속이나 외부 정당화 효과를 노린 수단이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8·25 고위급 회담 이후 북한은 “남조선을 굴복시킨 자주적 승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2024년 오물풍선 도발 직후 외부성 담화에서도 “정세 긴장을 자초한 것은 남조선”이라는 책임 회피성 메시지가 발신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중앙통신(KCNA) 및 『로동신문』 보도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기의 선전 문구에 나타난 ‘승리’, ‘굴복’, ‘자위권’ 등의 키워드 출현 빈도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³⁸⁾

둘째, 도발 이후 일정 기간 내 고위급 회담 제안, 대남 협상 시도, 혹은 대미 메시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해당 도발이 국면 전환 효과를 전제로 한 전략적 수단이었는지를 평가

36) 국방부, 2023, pp. 56-59.

37) 박정범, 2015, pp255-257.

38)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 주요 언론 키워드 분석 보고서」, 2024.

할 수 있다. 2015년 DMZ 지뢰 도발 이후에는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어 8·25 합의로 이어졌고, 북한은 내부 선전을 통해 이를 위기관리의 주도권 확보 사례로 포장하였다.³⁹⁾ 이와 유사하게 2018년 평창올림픽 직전에는 유화적 대남 메시지가 발신되었으며, 이후 고위급 대표단 파견과 대화 분위기 조성이 이뤄진 바 있다.⁴⁰⁾

셋째, 반복적 도발 시기와 주요 외교·정책 분기점—예컨대 한미 정상회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국내 주요 선거 등—간의 시간적 밀접성이 관찰된다는 점도 도발이 충동적 행위가 아닌 전략적 조율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박정범(2015)은 도발 시기와 한국의 정치 일정, 한미 양자 외교 회담, 대북 강경 메시지 발표 시점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정책 압박 및 협상 유도 수단으로 반복되었음을 분석하였다.⁴¹⁾ 2024년 오물풍선 도발 역시 한국 정부의 대북 규탄 발표 직후 감행되었으며, 이후 외무성의 비난 담화와 내부 결속 메시지가 결합되어 발신되었다.⁴²⁾

이상의 간접 지표들은 북한의 제한적 도발이 정치적·전략적 효과를 기대하고 선택된 전략적 수단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며, 이는 안정-불안정 역설이 단지 구조 조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전략 인식과 기대에 따라 작동하는 이론임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분석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4) 북한 도발과 안정-불안정 역설의 정합성

북한은 전면전 회피 전략과 군사적 열세 하에서 제한된 수준의 도발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비정규·비군사적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동시에 북한은 도발을 통해 일정한 정치적·전략적 이득을 기대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이러한 전략 환경과 행위자의 선택 양식은 안정-불안정 역설의 작동 조건, 즉 “전략적 안정성 하에서 제한된 도발이 전략적으로 구조화된 공간에서 선택되고 있다”라는 전제와 높은 정합성을 가진다.

나. 북한 도발의 복합성 문제: 전략문화 vs 전략적 선택

전술적 불안정이 관측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안정-불안정 역설의 작동 결과로 단정될 수는 없다. 도발의 존재 자체가 전략적 안정으로 유인된 것인지, 혹은 북한의 정치적 체

39) 박정범, 2015, pp.255-257.

40) 국방부, 2017, pp. 18-20.

41) 박정범, 2015, pp.256-258.

42) 조선중앙통신(KCNA), 북한 외무성 담화 자료(2023-2024).

제 구조 또는 군사 문화적 전통에 기초한 고유한 전략 양식의 일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론 적용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1950년대 정전 체제 형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무력시위, 기습 도발, 비정규전을 일관되게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핵 보유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 등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고강도 도발이었다.

이처럼 북한의 전략적 행태는 구조적 안정성보다는 체제 위신 확보, 내부 통제, 협상 지렛대 확보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발 중심의 전략문화에 기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부 연구는 북한의 도발 전략이 이념적 성격보다 정치·사회적 생존 논리에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한다.⁴³⁾ 이러한 전통적 해석은 2009년 이후 북한의 도발 역시 핵 억제 환경에서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기존 군사 전통과 정치적 습속의 연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박정범(2015)은 도발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전략 선택은 이론적 균형 계산보다 국내 정치와 엘리트 역학에 크게 좌우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⁴⁴⁾ 이 관점에 따르면, 안정-불안정 역설은 지나치게 구조주의적이며, 북한이라는 특수 행위자의 동기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의 전통성’ 해석이 곧 안정-불안정 역설의 적용 가능성을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 전략은 역사적 전통과 핵 억제 환경에서 새롭게 형성된 전략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도발 양상은 명확하게 변화했으며, 책임 회피가 가능하고 간접성이 높은 비군사적 수단(UAV, GPS 교란, 전단 및 오물풍선 투하 등)이 도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핵 억제를 통한 전면전 억제 구조가 존재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발의 수단과 수위를 조절하며 제한적 전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된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⁵⁾ 또한, 일부 도발은 단순한 반복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기대 효용을 추구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2015년 DMZ 지뢰 도발 이후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유도하여 위기관리 국면의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이를 내부적으로는 ‘승리적 대결’로 선전하였다. 2024년 오물풍선 투하 이후에도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남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⁴⁶⁾ 이는 전략적 안정이라

43) 김성철, 2014, pp.137-139.

44) 박정범, 2015, pp.255-258.

45) 국방부, 2023, pp.56-59.; The White House, 2023.

46) 북한 외무성 담화, 조선중앙통신(KCNA), 2023년 6월 1일자.; 박창권, 2014, pp.176-179.

는 구조적 조건 하에서 도발이 합리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유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전략은 전통적 군사문화의 연속성과 전략 환경의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병존하는 복합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안정-불안정 역설은 이러한 구조에서 도발이 전략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는 유용한 해석 틀이며, 전통 해석과 상충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도발을 단순히 '역설의 결과' 또는 '전통의 연속'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환원하기보다는, 핵 억제 조건이 도발의 수단·빈도·양식을 조정하는 '전략 선택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적 조건에서 도발이 정형화되고 반복되는 현상은 안정-불안정 역설의 조건부 작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 소 결론

전술적 불안정이 과연 안정-불안정 역설의 작동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 조건과 북한의 전략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그리고 대내 정치적 목적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 충돌을 회피하면서도 심리적·정치적 효과를 노린 제한적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는 전략적 안정성 하에서 제한적 도발이 전략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구조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09년 이후 북한 도발 수단이 간접적이고 책임 회피가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은, 단순한 반복이라기보다는 위기관리와 전략 효과 극대화를 전제로 한 계산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전면전은 억제되지만, 제한적 도발은 가능하다”라는 안정-불안정 역설의 핵심 전제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도발은 1990년대 이전부터 제도화되어 온 고유한 군사 전략문화와 정치 체제의 산물로도 해석될 여지가 크다. 도발이 핵 억제 이후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전략 행태의 조정된 반복이라면, 이를 단정적으로 역설의 결과로 보기에는 논리적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앞선 정량·정성 평가 결과는 역설이 작동하는 환경의 조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며, 그 작동 여부의 해석은 여전히 행위자의 전략 변화와 구조적 연속성에 따라 유보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3각 억제구조 형성 이전 시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발 양상과 전략 환경이 실제로 변화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도발이 전략적 안정성 조건에서 구조적으로 변모한 결과인지, 혹은 일관된 전략문화의 지속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핵심 질문인 “한반도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이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적합적이고 경험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

3. 시계열적 비교

가. 전략적 안정성

전략적 안정성은 전면전 확산 가능성에 대한 행위자 간의 인식과 계산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3각 억제구조 형성 전 시기’(2006~2008년)와 ‘형성 이후 시기’(2009년 이후)를 비교하여, 전면전 억제구조의 상대적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3각 억제구조 형성 전 시기인 2006~2008년 동안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으나, 당시 핵 능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렀고, 투발 수단, 운용 전략, 전략적 신뢰성 측면 모두에서 불완전했다. 북한은 여전히 6자회담에 참여하며 비핵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고, 미국 역시 확장억제의 개념을 명문화하거나 전략자산 운용을 체계화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확장억제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지 않았고, 실시간 협의체제도 부재했으며, 국방백서 등 주요 정책 문서에서도 전면전 억제구조에 대한 인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⁴⁷⁾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전략적 안정성이 구조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된다.

반면, 3각 억제구조 형성 이후 시기인 2009년 이후에는 전략 환경이 구조적으로 달라졌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통해 핵 능력을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를 통해 실질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확장억제를 공식화하고, 전략자산(B-52,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반복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실효성과 가시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출범하여 전략 운용 체계를 제도화하였고, 이는 공동 대응체계의 실질적 기반이 되었다.⁴⁸⁾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은 전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도발은 회피하면서, UAV 침투, GPS 교란, 오물풍선 투하와 같은 간접적·비군사적 수단을 선택해 왔다. 이는 확전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행위자 간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자산 운용 실적과 전략 신호의 반복도 억제구조의 강화 지표로 작용한다. 미국은 2016년 이후 전략자산을 30회 이상 한반도에 전개하였으며, 2022년에는 세 차례의 항공모함 전단이 전개되었다.⁴⁹⁾ 2023년 워싱턴 선언에서는 핵협의그룹(NCG)의 설립과 핵 자산 운용 실시간 협의체계가 명시되었고, 이는 단순한 수사적 확

47) 국방부, 2007, pp.51-54.

48)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Joint Statement, 2016, 2018, 2022.

49) 국방부, 2023, pp. 21-23;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보고서, “전략자산 전개 현황과 과제”, 2023.

상억제를 넘어 공동 기획·운용 체계의 제도화를 의미한다.⁵⁰⁾ 아울러, 한미 양국은 연례 SCM 공동성명에서 “핵우산”과 “즉각적·압도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 신호의 지속성은 피억제국인 북한의 계산 가능성을 높이는 억제 요소로 기능한다. 정량적 지표와 정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성 이후 시기에는 전면전 억제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인지적 억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3각 억제구조 형성 전 시기는 전면전 억제 조건이 구조적으로 미비한 상태였던 반면, 이후 시기에는 핵 능력의 반복적 시험, 확장억제 운용의 제도화, 행위자의 도발 양식 변화 등을 통해 전략적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된 시기로 평가된다. 이는 안정-불안정 역설이 일정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형성된 시기가 바로 3각 억제구조 형성 이후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전술적 불안정

전술적 불안정은 제한적 군사도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존재할 때 형성된다. 3각 억제구조 형성 전 시기와 이후 시기를 비교하여 전술적 도발의 발생 빈도, 수단의 성격, 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요소가 질적·양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정량적 비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평균 도발 횟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각 억제구조 형성 전 시기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의 주요 전술적 도발은 서해상 총격 도발(2007), DMZ 내 국지 도발(2006, 2008), 미사일 시험 발사(2006) 등으로, 국방부의 『국방백서 2008』 및 관련 자료에 나타난 사례 수는 총 8건 정도로 확인된다.⁵¹⁾ 이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연평균 약 2.7건 수준이다. 이 시기의 도발은 주로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총격, 포격, 탄도미사일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의 충돌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3각 억제구조 형성 이후 시기인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간 관측된 북한의 주요 전술적 도발 사례는 무인기 침투(2014, 2017, 2023), DMZ 지뢰 도발(2015), GPS 교란(2012, 2016, 2022), 사이버 공격, 오물풍선 도발(2024) 등으로 다변화되었다.⁵²⁾ 국방백서 및 국회보고서에 나타난 도발 유형을 종합하면, 이 시기의 도발 사례는 총 80건 이상으로 파악되며, 연평균 약 5.3건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증가는 단순 빈도의 상승뿐 아니

50) The White House, 2023.

51) 국방부, 『국방백서 2008』, 2009, pp. 52-54.

52) 국방부, 2023, pp. 56-61.

라, 행위자가 선택하는 수단이 책임 회피가 가능하고 간접성이 높은 형태로 변화했음을 동반한다. 구조적으로 보아, 형성 전 시기의 도발은 ① 빈도가 낮고, ② 가시적 군사수단에 집중되었으며, ③ 일회적·직접적 압박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형성 이후의 도발은 ① 빈도가 약 2배 증가하였고, ② 수단이 사이버·전자·무인체계 등 비재래식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③ 상대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컨대, 2024년의 전단 및 오물풍선 도발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심리적·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간접 도발 방식이라 할 수 있다.⁵³⁾

결과적으로 정량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비교에서 북한의 전술적 도발은 빈도와 수단 모두에서 전략적 안정 조건 하의 반복성과 제한성을 강화되었고, 이는 한반도에서 전술적 불안정이 구조화되었음을 경험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전술적 불안정은 단지 유지된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반복 가능한 형태로 진화한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안정-불안정 역설이 일정 조건에 작동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량적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소 결론

앞선 비교 결과는 3각 억제구조 형성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전략 환경이 질적으로 다른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전략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실질화되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명문화·제도화되며, 한미 간 전략 자산 운용 및 확장억제 협의체가 정례화된 2009년 이후에 이르러 전면전 억제 조건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행위자들은 군사적 충돌이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전략적 계산 가능성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안정-불안정 역설의 작동 전제 중 하나인 ‘핵 억제 하의 전면전 회피 구조’가 실질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술적 불안정 측면에서도 2009년 이후는 도발의 연평균 빈도가 약 2배 증가하고, 무인기, GPS 교란, 사이버 공격, 오물풍선 도발 등 간접적이고 책임 회피성이 높은 수단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여 반복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도발의 수단과 빈도 모두에서 전술적 불안정이 구조화되었으며, 이는 전면전 억제 구조가 전제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의 이론적 조건에 정합한다.

결론적으로, 3각 억제구조 형성 이전에는 ① 핵 억제구조의 불완전성, ② 전략 환경의 불명확성, ③ 전통적 도발 수단 의존 등으로 인해 전술적 도발이 역설의 결과로 보기 어렵지만,

53) 박정범, 2015, pp.256-258.

형성 이후 시기에는 ① 전략적 안정의 제도화, ② 도발의 정량적 증가와 정형화, ③ 간접성과 반복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략적 구조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이 일정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판단이다. 다만, 이러한 역설의 작동은 전면전 억제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조건에서만 지속 가능하며, 억제 신뢰성의 약화나 전략 환경의 급변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도발 패턴의 변형 또는 전략적 억제선의 시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안정-불안정 역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간접 핵 억제 개념과 3각 억제구조라는 이론적 틀로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09년을 기준으로 전략적 안정성과 전술적 불안정의 변화 양상을 정량·정성적으로 비교하고, 북한 도발의 전략적 선택성과 기대효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① 3각 억제구조 형성 이후 한반도에는 전면전 억제 조건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② 그 속에서 북한의 도발은 빈도와 수단 면에서 더 정교한 전술적 불안정 구조로 진화해 왔다. ③ 특히 북한은 비정규·비군사적 수단(UAV, GPS 교란, 오물풍선 등)을 활용하여 도발의 책임 회피 가능성과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기대 효용 기반의 전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불안정 역설이 단선적·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핵 억제의 제도화, 행위자의 전략적 인식, 도발의 기대 효용이라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한반도에서의 역설 이론 적용에 있어 '간접 핵 억제'라는 중간적 개념의 도입이 이론적 타당성과 경험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안정-불안정 역설이 양자 억제 관계를 전제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넘어서, 확장억제를 매개로 한 3자 구조에서도 해당 역설이 조건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확장억제 이론 및 간접 억제 이론의 현실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기여이다. 둘째, 간접 핵 억제 개념은 비핵 동맹국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억제 신호의 전략적 운용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이론화하며, 향후 비핵국 억제 연구의 새로운 분석단위를 제공한다.

다음은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만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억제 신호를 조성·확산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확장억제 운용체계(NCG 등) 내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운용 계획 수립에의 실질적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도발은 확전 불가능이라는 구조적 인식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기존의 '억제 중심'에서 위기관리와 도발 수단 통제에 초점을 둔 다층적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로, 본 연구는 한반도 도발 양상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도발 행위에 대한 북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나 체제 내부 변수의 직접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간접 핵 억제' 개념은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으나, 보다 광범위한 사례 연구와 행위자 인식 조사를 통해 개념의 실증적 정밀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사한 억제 구조가 존재하는 타 동맹 사례(예: 일본, NATO 동맹국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간접 핵 억제 개념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국방백서 2006』, 2007.
- 국방부, 『국방백서 2008』, 2009.
- 국방부, 『국방백서 2012』, 2012.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2016.
- 국방부, 『국방백서 2020』, 2020.
- 국방부, 『국방백서 2022』, 2023.
-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보고서, “전략자산 전개 현황과 과제”, 2023.
- 김강녕, “제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통일전략』 제17권 제4호 2017.
- 김기정, “핵 억제 환경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 2017.
- 김성철,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제4호, 2014.
- 김용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안정-불안정 역설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6권 2호, 2016.
- 박정범, “억제이론으로 본 대남도발 억제 실패요인 분석,” 『군사연구』 제139집, 2015.
-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4.
- 윤민우, “핵 억제와 북한의 저강도 도발 사이의 상관관계: 안정-불안정 역설 적용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4권 1호, 2018.
- 이성우, “북한 핵무장 이후 안정-불안정 역설의 재해석: 위기관리의 구조적 조건,” 『한반도평화연구』 제5권 1호, 2018.
- 조선중앙통신(KCNA), 북한 외무성 담화 자료(2023-2024).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 주요 언론 키워드 분석 보고서」, 2024.
- Brad Roberts,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 Erik Gartzke and Matthew Kroenig, “Nuclear Posture, Deterrence,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1, no. 3, 2017.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관련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

(2016, 2018, 2022).

Glenn H. Snyder, "The Balance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error," in *Theories of War and Peace*, ed. by M. Brown et al., MIT Press, 1998,

Jeffrey W. Knopf, "The Fourth Wave in Deterrence Research",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31, no. 1, pp. 1-33, 2010.

Kurt Guthe, "Extended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Comparative Strategy*, vol. 32, no. 4, pp. 336-344, 2013.

Michael C. Horowi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Matthew Kroenig, *The 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Why Strategic Superiority Matter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o. 171, 1981.

Patrick Morgan, *Deterrence N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aul Hut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Yale University Press, 1988.

Robert Jervis,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Robert Powell, *Nuclear Deterrence Theory: The Search for Cred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Robert Rauchhaus, "Evaluating the Nuclear Peace Hypothesis: A Quantitative Approa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Scott D. Sagan, "The Origins of Military Doctrine and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Systems", in Peter R. Lavoy, Scott D. Sagan, and James J. Wirtz (eds.), *Planning the Unthinkable: How New Powers Will Use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6-46, 2000.

Terence Roehrig, "South Korea and the US Nuclear Umbrella: Deterrence Strategy and Political Costs", *Asian Survey*, vol. 50, no. 3, pp. 539-560, 2010.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Yale University Press, 1966.

Vesely, A., "Deterrence Theory and Non-Nuclear Allies: The Logic of Indirect

Nuclear Deterren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5, no. 6, 2022.
The White House,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April 26, 2023.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on the Korean Peninsula: An Indirect Nuclear Deterrence Perspective within a Triangular Deterrence Structure

Jang Jaekyu

Keywords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Triangular Deterrence Structure, Extended Deterrence, Indirect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n Provocations

This study aims to structurally analyze and theoretically reinterpret whether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operates on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it examines whether North Korea's localized provocations have become systematically patterned on the basis of strategic stability within the triangular deterrence structure formed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llow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since 2009. To this end, the study introduces and applies the concept of indirect nuclear deterrence to explain the strategic posture of non-nuclear allies. This concept highlights how South Korea, while relying on U.S. nuclear signaling, also functions as a partial actor in the operational dynamics of deterrenc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provocation mechanisms within the triangular framework.

Grounded i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the study evaluates North Korea's patterns of provocation throug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focusing on three dimensions: strategic stability, tactical instability, and the expected utility of actor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while full-scale war is deterred, limited provocations persist—indicating that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is structurally oper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uggests that the paradox does not function as a linear model but as a complex mechanism shap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uclear deterrence and the strategic selectivity of provocations.

[논문투고일: 2025. 4. 30.]

[심사의뢰일: 2025. 5. 21.]

[게재확정일: 2025. 7. 2.]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방안: 2024년 이스라엘 전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유민규*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 III. 2024년 이스라엘 사례분석: 확장억제 차원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
- IV. 한반도 억제태세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
- V. 결론

요약

미사일 방어자산은 거부적 억제를 위한 수단이면서, 억제가 실패하였을 경우 적대국의 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전수행능력이다. 2024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위기상황에서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용 이지스 구축함을 전개하여,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작전에 참여하고 위기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미사일 방어작전 이후 미국은 지상 기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 포대를 추가 전개함으로써, 이란에게 억제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자산의 전개는 미국의 확장억제 차원에서 시행된 조치로, 확장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억제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현재 핵 및 재래식 통합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반도 위기시 신속하게 억제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능력 전개를 포함한 연합 억제작전수행절차 및 억제메시지 등을 구체화하여 미국 핵전력 중심의 응징적 억제체계를 보완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확장억제, 거부적 억제, 미사일 방어, 위기완화, 이란-이스라엘 위기, 탄도미사일 방어용 이지스 구축함

* 유엔레바논임무단(United Nation Interim Force In Lebanon), 육군중령, 공학박사

I. 서론

우리 군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한 한국형 3축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확장억제의 중심인 미국의 핵무기는 응징적 억제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며, 미사일 방어자산은 거부적 억제를 위한 수단이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철통같으며,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시 즉각적이고 결정적 대응이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다.¹⁾ 또한, 미국의 핵정책을 규정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는 북한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운용한 이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선언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의 공동성명에는 핵무기,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한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 국방부 장관의 공약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선언정책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위한 조치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위해 한미 행정부는 2023년부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ing Group: NCG)을 출범시켜, 정보공유, 협의체계, 기획 및 실행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체계는 「2023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와 함께 북한의 핵위협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²⁾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은 한반도 위기시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억제방안(Deterrence Option)의 형태로 한반도에 전개될 수도 있다.³⁾

한편,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를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 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일명 4D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억제체계를 발전시켜 왔다.⁴⁾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월) 이후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THAAD가 한반도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며

1) 바이든 전 대통령은 또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교부. “워싱턴 선언.” 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185&page=47 (검색일: 2025.2.19.).

2)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은 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한미동맹 국방비전(2023.11.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9397> (검색일: 2025.2.19.).

3)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 52.

4)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비하겠다는 개념, 국방백서(2018), p. 52.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6) 한미 국방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및 동맹의 대응능력 발전을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7) 이렇게 전개된 주한 미군의 THAAD와 패트리엇(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 자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와 함께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억제태세에 기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거부적 억제 구현을 위한 미국 확장억제 전력의 추가 전개된다면,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한 이지스 구축함이나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능력인 PAC-3나 THAAD와 같은 미사일 방어자산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 7함대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작전태세를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용 이지스 구축함의 전개가 가장 신속한 방안이 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지상기반 PAC-3나 THAAD와 같은 미사일 방어자산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대상이며 이스라엘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2024년 4월과 10월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의 전개 사례연구는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전략에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항모강습단이 전개되었던 사례는 많았으나, BMD용 이지스(Aegis) 구축함이 전개되어 실제 미사일 요격까지 수행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미국이 개발한 종말단계 고고도 요격미사일인 SM-3는 그동안 시험사격은 있었으나, 2024년의 이란 미사일 요격은 실전에서 운용된 첫 사례이므로 이 또한 한반도 안보에 있어 전략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미사일 방어작전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해 THAAD 포대까지 추가 전개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BMD용 이지스 구축함과 THAAD 포대의 전개는 미사일 방어 작전 수행을 위한 목적도 있겠으나, 이란의 추가적인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억제 및 대응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들은 유사시 한반도에서도 적용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사례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은 우리 억제태세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5) THAAD는 탄도미사일 비행단계 중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동식 체계로 AN-TPY 레이더와 요격미사일로 구성된다. 외기권 및 대기권 내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https://missilethreat.csis.org/system/thaad/> (검색일: 2025.6.30.).

6) 국방부. "한미 주한미군에 THAAD 배치하기로 결정." 보도자료, 2016.7.8.

7) 국방부. "제49차 SCM 공동성명." 보도자료, 2017.10.28.

미사일 방어자산은 억제 메시지 발신이 가능하고, 억제 실패시 요격작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위기시 확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는 특성으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핵전력 보다 미사일 방어자산의 전개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북한의 핵위협 억제와 한반도 확장억제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핵능력에 기반한 응징적 억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왔으나, 위기시 억제방안으로서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2024년 이란의 미사일 공격 억제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 및 작전사례를 분석하여, 한반도 위기시 억제방안으로서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주요 개념 정의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의도가 있다고 두려워하게끔 설득하는 조치로, 좁은 의미의 억제는 전쟁 중 특정 유형의 군사작전을 억제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의 억제는 모든 전쟁의 억제를 포함한다.⁸⁾ 이러한 억제의 유형은 억제하는 방법에 따라 공격자의 이익을 거부하는 개념의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공격시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을 통한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로 구분할 수 있다.⁹⁾ 이익거부를 통해 상대방을 억제하려면 의사결정권자가 ‘이익이 거의 없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여, 상대의 전략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¹⁰⁾ 미사일 방어능력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미래 이익을 거부하겠다고 확실하게 위협함으로써 억제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전능력의 하나이다.¹¹⁾ 또한, 미사일 방어는 억제 외에도, 억제 실패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사일은 재래식 또는 핵무기를 투발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지속 고도화되고 있기에 미사일 방어는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거부적 억제수단

8)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Cambridge: Polity Press, 2004).

9) 국방연구원. 『국방정책개론』 (서울: 국방연구원, 2020), p. 38.

10) Department of Defense. *Deterrence Operations Joint Operating Concep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06), p. 26.

11) *Deterrence Operations Joint Operating Concept*(2006), p. 29.

이다.¹²⁾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와 이를 활용한 억제전략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나, 핵무기의 영향력 때문에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이 동맹국에게 핵억제력을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우산,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군사력으로 구성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확장억제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commitment)과 핵전력의 현대화,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하여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동맹국에게 보장(assurance)을 제공한다.

미국의 핵무기는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고, 재래식 무기는 이러한 핵무기 중심의 억제를 보완하는데, 재래식 무기 중 미사일 방어능력은 적의 미사일 공격 기획 및 시행 간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높여 억제 효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¹³⁾ 미국은 미사일 방어자산의 전개가 동맹 및 우방국에게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적대국의 강압에 대응한다는 보장 효과가 있으며, 위기 또는 분쟁시 공격용 무기체계의 전개에 비하여 긴장을 덜 고조시킬 수 있는 군사적 방안이라고 설명한다.¹⁴⁾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CNI)은 2023년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의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실행 및 기획' 개념을 시작으로, 2024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으로 발전된다. '미국의 핵작전' 개념을 고려한다면, 한미 CNI 개념은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운용을 통한 억제, 위기대응 및 타격 등의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⁵⁾

2. 선행연구 검토

미사일 방어자산의 거부적 억제 효과와 위기시 유용성 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의

12) Department of Defense. *2022 Missile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2) p. 5.

13) MDR(2022), p. 5.

14) MDR(2022), p. 5.

15) 미국 합동교리는 핵작전(Nuclear Operation)이 억제, 위기대응, 타격, 평가, 안정화를 포함한 군사작전 범위 내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Joint Chiefs of Staff. *Joint Nuclear Operations*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2020) p. v-1.

확장억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핵전력 중심이었으며 미사일 방어능력 연구는 드물었다. 설 인호(2023)는 미국의 전술핵과 우리의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능력의 통합을 통한 응징적 억제 중심의 대북 억제태세 강화와 확장 억제 차원에서 '미국 전술핵 운용의 실행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성한(2024)은 한미 CNI 체계 구축 노력 등 한미 확장억제 태세를 평가하며, 미국의 전술핵을 활용한 억제전략 강화와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등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본윤(2024) 역시 북한 핵억제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KMPR의 연계'를 통한 응징적 억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 핵전력이 확장억제와 북한 핵위협 억제에 있어 핵심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CNI 체계를 통해 미국의 전술핵 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운용하는 것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섭(2015)은 핵억제 의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재래식 능력의 억제 신뢰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위기시 핵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위기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함형필(2022) 역시 저강도 분쟁시 한반도에 미국의 재래식 전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능력에 기반하여 동맹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제한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래식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도영(2021) 역시 확장억제 유형 중 '재래식 전력의 전진배치'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위의 주장들은 한반도 위기시 미국의 재래식 증원전력이 억제 및 위기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 공동연구결과인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방안(2023)」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군기지를 무력화하려고 해도 패트리엇 체계에 의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 연구결과는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자산에 의한 거부적 억제 효과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¹⁷⁾

확장억제 및 북한의 핵위협 억제방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 들은 미국의 핵전력을 활용한 응징적 억제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소수의 연구만이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제를 다루었다. 한반도 억제환경을 고려시 위기는 저강도 분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핵 및 재래식 억제가 종합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재래식 전력을 통한 위기완화 및 억제가 중요한 바, 2024년 이스라엘 전역이 이러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6) 이도영은 사례연구를 통해 확장억제의 유형을 '핵무기 전진배치', '핵방위 협정', '재래식 전력의 전진배치', '재래식 방위 협정'으로 구분하였다. D.Y.Lee, "Strategy of Extended Deterrence: How States Provide the Security Umbrella." *Security Studies* Vol.30, No.5(2021), pp.771-777.

17) 랜드연구소 및 아산정책연구원.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방안." 2023년 8월, p. 73.

3. 분석의 틀

본 연구는 2024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이란의 이스라엘 대상 미사일 공격을 둘러싼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은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에 따른 억제 메시지와 위기완화 효과, 미사일 요격작전을 통한 추가억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먼저, 미국의 공식 전략문서인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issile Defense Review: MDR)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억제전략과 이스라엘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을 우선 조망하였다. 이후, 이스라엘 언론매체인 Times of Israel의 보도자료와 미국 국가안보실, 국방부, 중부사령부의 보도자료, 미국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 USNI) News 등을 참고하여,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위기구조 및 미국의 억제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위기구조와 미국의 억제방안간 관계분석에 있어 2024년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관한 국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의 분석내용도 참고로 하였다.

또한, 2024년 이스라엘 전역에서 도출한 확장억제, 위기완화, 억제 메시지, 미사일 요격작전 교훈을 한반도에서의 억제에 적용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조선중앙통신 등 대외매체의 발표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III. 2024년 이스라엘 사례분석: 확장억제 차원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

1. 미국의 이스라엘 대상 확장억제 및 미사일 방어정책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대상 확장억제 및 미사일 방어정책은 이란에 대한 전략과 연계된다. 미국은 “중동 내 핵심 국가안보 이익과 우방국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우방국의 미사일 방어능력과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국방전략에 규정하였으며, 첨단 미사일 방어능력이 이란의 잠재적 침략을 억제 및 방어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¹⁸⁾ ‘거부적 억제’에 기여하며 억제 실패시에는 공격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미사일 방어는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동맹 및 우방국을 위한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¹⁹⁾ 미국의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핵정책 및 핵억제전략 등을 규정하는 기획문서이나, 적대국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도 기술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분석해본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확장 억제 및 미사일 방어정책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NPR 2018에서는 이란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재래식 전략공격도 격퇴할 것이며, 이란이 전략공격을 통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밝혔다.²⁰⁾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NPR 2022에서는 이란의 역내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비핵 우위(non-nuclear overmatch)’에 의존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란에 대한 억제전략의 중심은 ‘이익거부(Denial of Benefit)’ 형태가 될 것이며, 중동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협력도 이러한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사일 방어능력이 동맹을 대상으로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2009년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군사 능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¹⁾ 미국은 동맹 및 우방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통해 역내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맹 및 우방국에게 보장(assurance)을 제공할 수 있어 역내 동맹국과의 결속력과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중동지역에서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²²⁾

2.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협력

지역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은 ‘억제에 대한 통합적, 상호운용적, 다층적 접근의 일환으로 미사일 방어능력은 미국과 동맹·우방국의 합동군을 보호하고 작전수행이 가능

18)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2) p. 10, p. 15.

19) MDR(2022), p. 5 .

20) Department of Defense. *2018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8) p. 33-34.

21) “게이즈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09.10.22.

22) MDR(2022), p. 11.

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³⁾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와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 우방국을 보호하는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Theater Missile Defense)로 구성되며,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는 THAAD, 해상 및 육상기반 이지스 체계, PAC-3를 포함한다.²⁴⁾ 이중 해상기반 이지스 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및 순양함에 탑재된 SPY-1 레이더와 중간단계 요격을 위한 SM-3 미사일, 종말단계 하층 요격을 위한 SM-2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5),26),27)} 이러한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체적인 예가 터키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²⁸⁾, 루마니아와 폴란드 배치 육상기반 이지스(Aegis Ashore) 시스템과 스페인 로타항구에 기항하는 BMD용 이지스 구축함으로 구성된 유럽지역 탄도미사일 방어체계(US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to ballistic missile defense)이다.

미국의 BMD용 이지스 함정은 2023년 12월 7일 기준으로 49척이 작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5년에는 56척, 2030년에는 69척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²⁹⁾ 이러한 미국의 BMD용 이지스 함정은 스페인 로타항구에 4척이 전진 배치되어 지중해 지역에서 현시(presence) 및 탄도미사일 방어 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미국 동부해안에 모항을 둔 10척도 유사시 유럽지역에 전개되어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³⁰⁾ 마찬가지로, 미국의 BMD용 이지스 함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일본 및 한국 인근에도 탄도미사일 방어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³¹⁾

23) MDR(2022), p. 7.

24) "Defense Primer: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30, 2024.

25) SM-3 미사일은 전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하여 외기권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이다. Mk-41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되며, SM-3IIA는 2,50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SM-3IA와 SM-3IB는 700km의 사거리를 갖는다. "Standard Missile-3(SM-3)," <https://missilethreat.csis.org/defsys/sm-3/>(검색일: 2025.2.19.). 또한, SM-3 미사일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43회의 시험사격 중 35회 미사일 요격에 성공하였다. "Navy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19, 2024.

26) SPY-1 레이더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주 사격통제 레이더로 공중 표적의 탐색, 탐지, 추적 및 식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임. "AN/SPY-1 Radar," <https://missilethreat.csis.org/defsys/an-spy-1-radar/>(검색일: 2025.2.19.).

27) SM-2 미사일은 해상기반 종말단계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미사일로, SM-2 Block IV은 사거리 370km, 고도 33km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Standard Missile-2 Block IV," <https://missilethreat.csis.org/defsys/standard-missile-2-block-iv/>(검색일: 2025.2.19.).

28) AN/TPY-2 레이더는 THAAD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개발된 X-band 레이더로, 전방지역에 배치되어 미사일 추적 및 식별정보를 다른 요격체계(THAAD, Aegis, PAC-3)에 제공할 수 있다. "AN/TPY-2 Radar," <https://missilethreat.csis.org/defsys/tpy-2/>(검색일: 2025.2.19.).

29) CRS (2024) p. 12.

30) CRS (2024) p. 12.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및 구축과 관련하여 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³²⁾ 이스라엘은 로켓, 박격포,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상층방어 체계인 Arrow 체계는 미국 보잉사와 이스라엘의 IAI (Israel Aerospace Industries)의 공동개발 후 공동 생산 중이며, 중간층 방어체계인 David's Sling 역시 미국의 Raytheon사와 이스라엘의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가 공동 개발하였다.^{33),34)} Iron Dorm은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하였으나, 미국에서 Iron Dorm 체계의 부품제조를 할 수 있도록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미국 애리조나 투손의 레이시온사 시설에서 Iron Dorm의 요격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에서도 요격미사일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³⁵⁾ 또한, 2001년부터 이스라엘과 미국은 레이더 및 요격미사일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연합 미사일 방어 연습인 'Junifer Cobra 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³⁶⁾

3. 사례연구 1: 2024년 1차 이란의 미사일 공격 (4월 13일 ~ 14일)

2024년 4월 12일 미국 국가안보실(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대변인 존 커비는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위협으로 중동지역 미군의 전력태세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³⁷⁾ 구체적인 전력태세의 변화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고 이스라엘 방호를 위한 전력이 추가 전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의

31) "SM-3 Ballistic Missile Interceptor Used for First Time in Combat, Officials Confirm." *USNI News*, April 15, 2024.

32)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아이언 돔(iron Dome)' 지원을 위한 13억 달러 제공(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Political-Military Affairs. "US Security Cooperation with Israel Fact Sheet." April 25, 2025), 2016년부터 이스라엘에 매년 5억 달러의 미사일 방어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 군사협력과 자금 지원(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Near Eastern Affairs. "US-Israel Relation Bilateral Relations Fact Sheet." January 20, 2021) 등 미국은 이스라엘과는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3) 이스라엘의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는 상층 Arrow-3 (외기권) 및 Arrow-2(대기권), 중간층은 순항미사일과 하층 단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David's Sling 체계, 하층은 로켓, 포병, 박격포 등을 요격하는 Iron Dome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Israeli Air and Missile Defense(2021.8.3.)." <https://missilethreat.csis.org/system/israeli/> (검색일: 2025.2.19.).

34) "U.S Foreign Aid to Israe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 1,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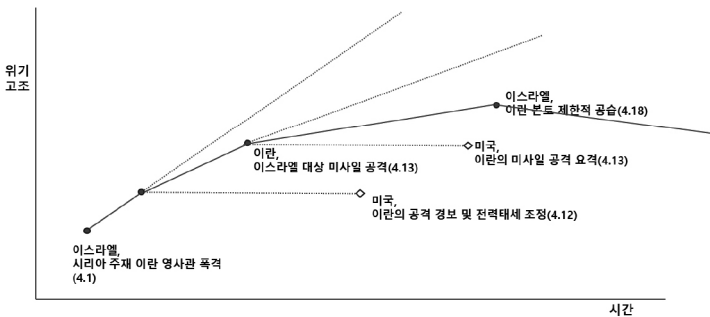
35) CRS(2023). p. 18.

36) CRS(2023). p. 17.

37) "US makes force posture changes amid Iran threats to attack Israel: White House." *Al Arabia News*, April 12, 2024. <https://english.alarabiya.net/News/middle-east/2024/04/12/us-makes-force-posture-changes-amid-iran-threats-to-attack-israel-white-house>(검색일: 2025.2.19.).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24년 4월 13일 이스라엘 타격을 위해 300발의 미사일 및 드론을 발사하였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Times of Israel)은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기지에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 외 대부분의 미사일은 요격되었다고 보도하였다.³⁸⁾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유럽사령부 구축함의 지원을 받아 80대 이상의 공격용 무인기와 최소 6발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하였는데, 미국 유럽사령부 구축함의 지원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USS Carney(DDG-64)와 USS Arleigh Burke(DDG-64)의 미사일 방어를 의미한다.³⁹⁾ 또한, USNI News는 고위급 군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이지스 구축함 2척이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4~6발의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였으며, SM-3 미사일의 첫 실전 사례라는 점을 보도하였다.^{40), 41)}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직후 Yoav Gallant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통해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조치와 준비 태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스파한의 방공포대 레이더에 대한 공습을 시행하였다.⁴²⁾

〈그림 1〉 이란과 이스라엘간 위기고조 상황 (2024.4.1.~4.30)



- 38) “April 13: Iran fires 300 missiles and drones; most intercepted; minor damage at IDF base.” *The Times of Israel*, April 12, 2024,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april-13-2024/>(검색일: 2025.2.19.).
- 39) US Central Command. “Defense of Israel Activities Update.” *Press Release*, April 14, 2024 <https://www.centcom.mil/MEDIA/PRESS-RELEASES/Press-Release-View/Article/3740744/defense-of-israel-activities-update/>(검색일: 2025.2.19.).
- 40) “US Warships in Eastern Mediterranean Down Iranian Ballistic Missiles.” *USNI News*, April 14, 2024 <https://news.usni.org/2024/04/14/u-s-warships-in-eastern-mediterranean-down-iranian-ballistic-missiles/>(검색일: 2025.2.19.).
- 41) “SM-3 Ballistic Missile Interceptor Used for First Time in Combat, Officials Confirm.” *USNI News*, April 15, 2024 <https://news.usni.org/2024/04/15/sm-3-ballistic-missile-interceptor-used-for-first-time-in-combat-officials-confirm/>(검색일: 2025.2.19.).
- 42) *The Times of Israel* (2024.4.12.).

〈그림 1〉은 2024년 4월 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의 위기고조 상황을 정리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대부분 요격하는데 성공하고 절제된 대응을 통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전개한 탄도미사일 방어용 이지스 구축함은 미사일 방어작전에 참여하여, 미사일 공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지스 구축함이 요격한 미사일은 4~6발로 실제 미사일 방어작전에 기여한 비율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이 확장억제 차원에서 추가전력을 전개했으며 실제 작전에 참여했다는 점은 이란에게 추가 도발에 대한 억제 메시지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율된 대응(measured response)’은 양국간 위기고조 국면(escalation)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⁴³⁾ 또한, 2024년 4월 미국 주도하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요르단의 공동작전을 통한 미사일 방어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걸프지역 국가들과의 통합 미사일 방어 협력이었다.⁴⁴⁾ 특히,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연합공중작전센터는 연합작전간 공조를 통하여 작전효율성과 우군피해 방지에 기여하였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타격용 무인기 전력은 이스라엘 중심타격이 가능한 이란 억제전략의 핵심축이지만, 2024년 4월 공격시 대부분이 요격됨으로써 ‘미사일 중심 비대칭 억제전략’의 한계를 보였다.⁴⁵⁾ 실제 2024년 4월 18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 이후 이란이 추가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스라엘 타격을 위한 공군전력이 가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일 공격이 대부분 요격당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을 통한 전략적 이익과 공격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억제이론에서 말하는 ‘이익거부에 의한 억제’가 구현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는 이란의 미사일 중심 억제전략을 거부하는데 기여하였다.

4. 사례연구 2: 2024년 이란의 2차 미사일 공격 (2024년 10월 1일)

2024년 8월 1일, 이란 테헤란 내에서 하마스 지도자인 하니예가 암살되었다. 이후 이란

43) Raz Zimmt. “This round of Iran-Israel escalation is over, but the next could be just around the corner.” *Atlantic Council*, April 23, 2024.

44) 이는 중동 역내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이란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통합 미사일방어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미국의 국방전략서(NDS 2022) 내용과 일치한다.

45) 이란이 노후화된 공군전력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중심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및 UAV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이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발전시킨 것으로 분석. “Iran and Israel: everything short of war.” IISS Online analysis, May 17, 2024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online-analysis/2024/05/iran-and-israel-everything-short-of-war/> (검색일: 2025.2.19.).

군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을 경고하였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024년 8월 2일 이스라엘 방어 지원 및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춘 순양함 및 구축함, 전투기 대대 추가전개 및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자산 추가 배치 준비 등 중동지역 미군의 태세 조정을 지시하였다.⁴⁶⁾ 2024년 10월 1일,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약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이스라엘군 및 중동지역에 전개된 미군은 이란의 발사된 미사일을 다수 요격하였다.⁴⁷⁾ 미국 국방부는 2024년 10월 1일 동지중해에 전개된 Arleigh Burke급 구축함인 USS Cole, USS Bulkeley가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는 이란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12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⁴⁸⁾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일 USNI는 ‘2척의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수 발의(a handful) 이란 미사일을 파괴’한 사실을 미국 행정부를 통해 공식 확인하였다.⁴⁹⁾ USS Bulkeley (DDG 84)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무장은 SM-2와 Sea Sparrow이므로, USS Cole에서 SM-3, USS Bulkeley가 SM-2 및 Sea Sparrow를 운용하여 이란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한편,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전과 공격 중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최소 두 차례 소통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방어와 관련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미군과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국 국방장관 차원의 이스라엘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란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⁵¹⁾ 또한, 미국은 10월 13일 이란의 추가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46) Department of Defense. “Statement on Force Posture in the Middle East.” *Press Release*, August 2, 2024.

47) <https://www.timesofisrael.com/israel-warns-of-consequences-after-iran-launches-181-missiles-in-major-attack/>(검색일: 25.2.19.).

48) Department of Defense. “U.S. Assets in Mediterranean Again Helped Defend Israel Against Iranian Missiles.” DOD News, October 1, 2024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3923123/us-assets-in-mediterranean-again-helped-defend-israel-against-iranian-missiles/> (검색일: 25.2.19.).

49) “U.S. Destroyers Successfully Down Iranian Missiles with SM-3s, Carrier USS Harry. S. Truman Now in U.S. 6th Fleet.” <https://news.usni.org/2024/10/02/u-s-destroyers-successfully-down-iranian-missiles-with-sm-3s-carrier-uss-harry-s-truman-now-in-u-s-6th-fleet/>(검색일: 25.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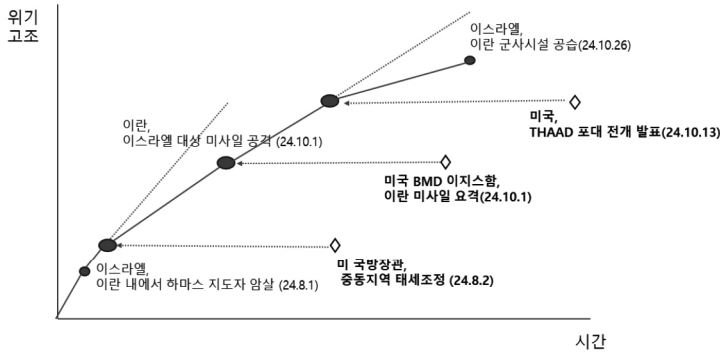
50) USS Bulkeley (DDG 84)는 SM-2 (대공), ASROC(대잠), Tomahawk(대지), MK-46 Torpedo(대함), 5인치 함포(대함, 대지), Close In Weapon System(CIWS, 근접방공), Sea Sparrow (대공)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 “USS Bulkeley (DDG 84.)” <https://www.surflant.usff.navy.mil/Organization/Operational-Forces/Destroyers/USS-Bulkeley-DDG-84/About-Us/> (검색일: 25.2.11.).

51) DOD News (2024.10.1.).

를 이스라엘에 전개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는데, 미사일 방어자산의 추가전개를 통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부적 억제조치’의 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²⁾

〈그림 2〉는 2024년 10월 1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중심으로 한 위기고조 상황과 미국의 억제조치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미국은 8월 2일 중동지역 태세 조정 및 추가전력 전개 조치를 통해 이란을 억제하고자 하였으며, 이란의 미사일 공격 당일에는 BMD용 이지스함이 미사일 요격에 참여하여 이스라엘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후 지상 기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의 추가 전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란의 추가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별 미국의 억제조치는 이란과 이스라엘간 확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 이란과 이스라엘간 위기고조 상황과 미국의 억제조치 (2024.8.1.~10.26)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NPR에서 대이란 맞춤형 억제 전략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비핵 전략공격도 격퇴할 것이며, 이란이 전략공격을 통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⁵³⁾ 따라서, 미국은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목표로 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요격함으로써 이란의 추가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다른 적대국가들에게도 동맹보장, 맞춤형 억제전략, 이익거부에 의한 억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예측된다.

52) Department of Defense. "Statement on the Deployment of a THAAD Battery to Israel." *Press Release*, October 13, 2024.
 53) 바이든 행정부의 NPR에서는 이란의 역내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재래식 우위에 의존할 것이고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간략하게 언급하여, 대이란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 트럼프 행정부 NPR의 대이란 맞춤형 억제전략을 참고하였다.

위 사례를 통해, BMD용 이지스 구축함이 억제방안으로 사전 전개될 수 있으며, 억제가 실패한 후에는 미사일 방어 작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미사일 공격을 통한 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능력은 추가적인 미사일 공격을 억제할 수도 있으며, 피해 최소화를 통해 확전을 방지하고 절제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한반도 억제태세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

1.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 및 미사일 방어태세

미국의 핵무기는 압도적인 비용부과라는 위협을 통해 응징적 억제에 기여하는 반면 미사일 방어는 거부적 억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통합억제 구현에 있어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능력이 상호보완적이다. 이 두 가지 능력은 북한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⁵⁴⁾

우리 군은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확장억제’를 이용하고, 우리 군의 자체능력인 한국형 3축체계의 KMPR을 통해 ‘응징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 또한 한국형 3축체계의 킬체인(Kill Chain)과 KAMD을 통한 ‘거부적 억제’를 구현한다.⁵⁵⁾ 이를 위해 기존 패트리엇 성능개량 및 요격미사일 확충, 국내개발한 ‘천궁-II’ 전력화를 통해 하층방어체계를 강화하고, ‘L-SAM’ 전력화 및 성능개량을 통해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복합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미간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 협의체,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 공동연구 등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⁵⁶⁾

한미 공동의 북한 핵위협 대응전략인 「2023 ROK-U.S 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도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된 지침이 있다는 점을 밝힌 바, 미사일 방어능력을 활용한 억제방안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⁵⁷⁾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

54) MDR(2022) p. 5.

55)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2). p. 57-61.

56) 국방부.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보도자료, 2024.10.30.

57) 상동

전쟁위협 고조시 또는 위기사 '유연억제방안(Flexible Deterrence Option: FDO)'에 의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될 수 있는데, PAC-3 포대나 이지스 순양함 및 구축함 등의 미사일 방어전력도 이러한 유연억제방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⁵⁸⁾ 이러한 위기사 미군의 미사일 방어전력의 추가전개는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억제작전 합동개념(2006)」에서는 실제로 이익거부를 위한 군사적 억제방안에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구 탄도미사일 방어자산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구지역에서의 억제방안이 전투사령관 및 유관기관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적으로 조율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⁵⁹⁾ <표 1>은 이러한 미국의 억제교리에 반영된 억제방안과 2024년 이스라엘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미국의 억제조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표 1> 「억제작전 합동개념」 내 억제방안과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억제조치

억제교리 내 잠재적 억제방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억제조치
전구 탄도미사일 방어자산 이동	이지스 구축함, THAAD 포대 전개
ISR 자산 증강	추 정
추가 미군 전력 증원 준비	추 정
물리 및 비물리 범세계 타격	미식별
위성교란	미식별
정보작전	미식별
장거리 정밀 글로벌 타격 능력 현시	B-52 전략폭격기 전개
사이버전	미식별
주요 기반시설 보호	추 정
미국의 전쟁목표 확장 위협	미식별

* Deterrence Operations Joint Operating Concept (2006), p. 63-64에 제시된 잠재적 억제방안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시 미국의 억제조치를 구성하였음.

2.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에 대한 북한의 인식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대외언론매체로 이를 통해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04년 논평의 형태로 미국의

58) 국방연구원의 국방정책개론(2020)에서는 ‘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으로 표현하였으나, 미국 군사전략 및 교리를 고려시 유연억제방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연억제방안으로 표기하였다.

59) 미사일 방어자산 이동 외에도 ISR 자산 증강, 추가 미군 전력의 증원, 물리적 및 비물리적 범세계타격작전, 레이저를 통한 상대방 위성 활동 거부,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현시 등의 이익거부를 위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Deterrence Operations Joint Operating Concept(2006), p. 63-64

‘이지스 구축함 동해 상시 전개 계획’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준비’로 인식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⁶⁰⁾ 특히, 북한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침략전쟁무력’으로 간주한다는 점은 위기시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반도 전개가 억제방안으로 유효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발표한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북침선제타격’ 계획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바,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억제방안으로 운용시에는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연계하여 억제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억제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⁶¹⁾ 한편, 북한 핵무력정책법령(2022)에서는 핵무기의 기본사명을 ‘침략과 공격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전쟁억제로 규정한 바, 미국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시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 사명이 침략 및 공격기도 포기라는 내러티브에 기반하여 수사적 형태의 핵무기 사용위협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미사일 방어자산은 대북 억제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으면서 전략폭격기와 같은 비용부과를 위한 전력보다는 위기고조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유연한 억제방안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아이언 돔 구축’ 행정명령을 통해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보복공격에 대한 우려없이 선제 핵공격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완비’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미국의 지역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침략적 성격임을 강조하였다.⁶²⁾ 이것은 북한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전진배치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6년 한반도 내 미국 THAAD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의 핵전력 감시와 이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요격할 수 있다고 인식하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⁶³⁾ 또한, 2017년 북한은 자신의 신형정밀조종유도탄이 회피기동과 종말단계 낙하속도로 인하여 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에 배치된 동맹의 미사일 방어가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사일 방어전력을 활용한 동맹의 거부적 억제전략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⁶⁴⁾

60) 부시호전세력이 조선동해와 인근수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비하려는 것은 그 누구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 아니다. 침략전쟁무력을 작전지역에 이동 집결시켜 놓은 다음 해상과 공중, 지상의 전 전선에 걸쳐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최종단계에서 완성하자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9월 13일.

61) 〈맞춤형 억제전략〉은 미국과 괴뢰들이 핵무기와 첨단미사일들, 재래식무기들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선제타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침전쟁각본들을 종합한 위험한 전략,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6일.

62)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위체계구축기도는 전지구적 안전 균형을 엄중히 파괴하는 새로운 《별세계전쟁》구상이다. 『조선중앙통신』, 2025년 2월 3일.

63) 『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3일.

64) “북, 신형 정밀유도탄도미사일은 세상에 없는 무기,” 자주시보, 2017.5.30. <https://www.jajusibo.com/33846> (검색일: 25.7.3.).

3. 핵 및 재래식 통합(CNI) 태세를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력 운용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는 2023년 워싱턴 선언에 기초하여, NCG를 창설하고 NCG가 한반도에서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방안(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⁶⁵⁾ CNI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작전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또한, NCG는 '한반도에서 적용될 CNI 과업은 한국 전략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가 발전시켰으며, CNI 과업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연계될 것'이라는 점을 공개하였다.⁶⁷⁾

이러한 유관사령부 중 핵무기를 운용하는 사령부는 미국 전략사령부뿐이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한국 전략사령부는 재래식 전력을 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CNI 과업을 지원하여 핵 및 재래식 통합의 효과를 증폭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즉 지상 기반의 미사일 방어자산인 PAC-3 및 THAAD 또는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자산인 BMD용 이지스함 등은 이러한 미국의 재래식 전력으로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운용될 것이다.

2024년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한미는 협의를 통하여 한반도 위기발생시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 태세 조정을 통해 미군 증원전력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투발수단을 보유한 국가로 재래식 미사일 전력 중심의 이란을 대상으로 억제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한 계산을 통해 억제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기시 북한은 침략과 전쟁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핵강압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B-52H 전략폭격기 등 응징적 억제수단과 미사일 방어자산의 추가 전개와 같은 거부적 억제수단을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65)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한다. 외교부. “한미 핵협의 그룹 공동언론발표문 (2023.7.18.).” https://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7954&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검색일: 2025.2.19.).

66) 한반도상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을 재확인하였다. “제3차 한미 핵협의 그룹 공동언론발표문(2024.6.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4880>(검색일: 2025.2.19.).

67) “제4차 한미 핵협의 그룹 공동언론발표문(2025.1.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9901&pWise=sub&pWiseSub=C3#pressRelease>(검색일: 2025.2.19.).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삭전 지침」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배정한다”는 발언(24.7.16)을 통해 한반도에서 응징적 억제 방안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거부적 억제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형3축체계의 KAMD와 주한미군의 PAC-3 및 THAAD 전력이 있으나, 이러한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자산을 한반도 위기시 어떻게 억제방안으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 및 작전수행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공약하고 있는 바, 거부적 억제를 위한 확장억제 차원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는 이미 2017년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미국의 THAAD 포대를 한반도에 전개한 사례가 있다. 향후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일본에 위치한 미국 제7함대의 BMD용 이지스 구축함 또는 미국 본토로부터 THAAD 또는 PAC-3 등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례와 같이 위기시 전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은 억제효과를 발휘하고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2024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의 전개가 위기완화와 억제, 그리고 미사일 방어작전에 기여한 사례를 분석하고, 한반도 위기시 억제방안으로 적용 가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BMD용 이지스 구축함의 전개는 북한과 같은 적대국에게도 역내 미사일 공격 억제를 위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SM-3 외기권 요격 미사일의 실전경험은 미국의 본토 및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거부적 억제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한미 CNI 체계에서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를 활용한 억제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데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로 인한 억제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억제효과 평가의 특성상, 이란이 추가 미사일 공격을 자제한 결정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 없기에, 정확한 억제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재래식 억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억제환경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의 억제 및 위기관리 교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간 분쟁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가 위기완화, 억제, 방어작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 전개를 한반도 위기사 동맹의 억제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NCG 등 확장억제 협의체를 통해 위기사 억제방안으로 BMD용 이지스 구축함 또는 PAC-3 포대 등의 전개와 메시지를 어떻게 기획하고 협의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CNI 차원에서, 북한의 이익거부를 위해 어떠한 위협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적 맥락을 가지고 미사일 방어자산을 전개시킬 것인지에 대해 향후 한미간 토의식 연습(Table Top Exercise: TTX) 및 위게임(wargame)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 국방연구원. 『국방정책개론』 (서울: 국방연구원, 2020).
- 국방부.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보도자료, 09.10.22.
- 국방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보도자료, 17.10.28.
- 국방부.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보도자료, 24.10.30.
- 국방부. “한미 주한미군에 THAAD 배치하기로 결정.” 보도자료, 16.7.8.
- 구본윤. 마월. “북한 핵억제전략 메커니즘 연구: 핵억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국가전략』, 제30권 2호(2024).
- 김성한. 함형필.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관계 연구』 제29권 제2호 (2024).
- 김정섭.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국가전략』, 제21권 2호, 2015.
- 대통령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개최.” 보도자료, 23.7.8.
- 랜드연구소 및 아산정책연구원.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방안.” 2023년 8월.
- 설인효. 손한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의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3권 2호(2023).
- 장지향. 이희수. “미·이스라엘·아랍국가간 통합 방공체계 구축의 교훈: 공통의 위협인식.”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sue Brief』, 2024.8.30.
- 함형필. 이만석.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한반도억제태세 기여와 역할: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2호, 2022.
-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Cambridge: Polity Press, 2004).
- Department of Defense. *Deterrence Operations Joint Operating Concep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06).
- Department of Defens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8).
- Department of Defense. *2018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8).
-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Defense. 2022).
- Department of Defense. *2022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2).
- Department of Defense. *2022 Missile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2).
- Department of Defense. “Statement on Force Posture in the Middle East.” *Press Release*, August 2, 2024.
- Department of Defense. “Statement on the Deployment of a THAAD Battery to Israel.” *Press Release*, October 13, 2024.
-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Near Eastern Affairs. “US-Israel Relation Bilateral Relations Fact Sheet.” January 20, 2021.
-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Political Military Affairs. “US Security Cooperation with Israel Fact Sheet.” January 20, 2025.
- Joint Chiefs of Staff. *Joint Nuclear Operations*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2020).
- “Defense Primer: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30, 2024.
- “Navy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19, 2024.
-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ctober 17, 2024.
- “U.S Foreign Aid to Israe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 1, 2023.
- D.Y.Lee, “Strategy of Extended Deterrence: How States Provide the Security Umbrella.” *Security Studies* Vol.30, No.5(2021).
- Raz Zimmt. “This round of Iran-Israel escalation is over, but the next could be just around the corner.” *Atlantic Council*, April 23, 2024.
- 『조선중앙통신』, 2004년 9월 13일.
-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6일.
- 『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3일.
- 『조선중앙통신』, 2025년 2월 3일.

인터넷 홈페이지

- 외교부. “워싱턴 선언,” 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185&page=47 (검색일: 2025.2.19.).
- _____,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4.7.11.)” 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601(검색일: 2025.2.19.).
- _____, “한미 핵협의 그룹 공동언론발표문 (2023.7.18.)” https://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7954&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검색일: 2025.2.19.).
- “한미동맹 국방비전(2023.11.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9397>(검색일: 2025.2.19.).
- “제3차 한미 핵협의 그룹 공동언론발표문(2024.6.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4880> (검색일: 2025.2.19.).
- “제4차 한미 핵협의 그룹 공동언론발표문(2025.1.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9901&pWise=sub&pWiseSub=C3#pressRelease> (검색일: 2025.2.19.).
- “북, 신형 정밀유도탄도미사일은 세상에 없는 무기,” 자주시보, 2017.5.30. <https://www.jajusibo.com/33846> (검색일: 25.7.3.).
- “April 13: Iran fires 300 missiles and drones; most intercepted; minor damage at IDF base.” *The Times of Israel*, April 12, 2024,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april-13-2024/>(검색일: 2025.2.19.).
- “AN/SPY-1 Radar,” <https://missilethreat.csis.org/defsys/an-spy-1-radar/>(검색일: 2025.2.19.).
- “AN/TPY-2 Radar,” <https://missilethreat.csis.org/defsys/tpy-2/>(검색일: 2025.2.19.).
- “Israeli Air and Missile Defense(2021.8.3.)” <https://missilethreat.csis.org/system/israeli/> (검색일: 2025.2.19.).
- “Iran and Israel: everything short of war.” *IISS Online analysis*, May 17, 2024,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online-analysis/2024/05/iran-and-israel-everything-short-of-war/>(검색일: 2025.2.19.).

- “Iran fires 181 missiles at Israel; PM: They made a ‘big mistake’ and ‘will pay for it’ ” *The Times of Israel*, October 1, 2024, <https://www.timesofisrael.com/israel-warns-of-consequences-after-iran-launches-181-missiles-in-major-attack/> (검색일: 25.2.19.).
- “SM-3 Ballistic Missile Interceptor Used for First Time in Combat, Officials Confirm.” *USNI News*, April 15, 2024, <https://news.usni.org/2024/04/15/sm-3-ballistic-missile-interceptor-used-for-first-time-in-combat-officials-confirm> (검색일: 2025.2.19.).
- “Standard Missile-2 Block IV,” <https://missilethreat.csis.org/defsys/standard-missile-2-block-iv/>(검색일: 2025.2.19.).
- “Standard Missile-3(SM-3),” <https://missilethreat.csis.org/defsys/sm-3/>(검색일: 2025.2.19.).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https://missilethreat.csis.org/system/thaad/> (검색일: 2025.6.30.).
- US Central Command. “Defense of Israel Activities Update.” *Press Release*, April 14, 2024 <https://www.centcom.mil/MEDIA/PRESS-RELEASES/Press-Release-View/Article/3740744/defense-of-israel-activities-update/>(검색일: 2025.2.19.).
- “U.S. Destroyers Successfully Down Iranian Missiles with SM-3s, Carrier USS Harry S. Truman Now in U.S. 6th Fleet.” <https://news.usni.org/2024/10/02/u-s-destroyers-successfully-down-iranian-missiles-with-sm-3s-carrier-uss-harry-s-truman-now-in-u-s-6th-fleet>(검색일: 25.2.19.).
- “US makes force posture changes amid Iran threats to attack Israel: White House.” *Al Arabia News*, April 12, 2024 “US makes force posture changes amid Iran threats to attack Israel: White House.”<https://english.alarabiya.net/News/middle-east/2024/04/12/us-makes-force-posture-changes-amid-iran-threats-to-attack-israel-white-house>(검색일: 2025.2.19.).
- “USS Bulkeley (DDG 84),” <https://www.surflant.usff.navy.mil/Organization/Operational-Forces/Destroyers/USS-Bulkeley-DDG-84/About-Us/> (검색일: 25.2.11.).
- “U.S Warships Fire a Dozen Interceptors Against Iranian Missile Attack.” *USNI News*, October 1, 2024, <https://news.usni.org/2024/10/01/u-s-warships-fire-a-dozen-interceptions-against-iranian-missile-attack-against-israel>(검색

일: 25.2.19.).

“US Warships in Eastern Mediterranean Down Iranian Ballistic Missiles.” *USNI News*, April 14, 2024, <https://news.usni.org/2024/04/14/u-s-warships-in-eastern-mediterranean-down-iranian-ballistic-missiles>(검색일: 2025.2.19.).

Enhancing Extended Deterrence through the Deployment of U.S. Missile Defense Assets: Focused on a Case Study of the 2024 Israel Theater

Minkyu Yu

Keywords

Extended Deterrence, Israel, Deterrence by Denial, Missile Defense Assets, Aegis Destroye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Missile defense assets has a dual role such as a means of deterrence and an operational capability to minimize damage by engage with enemy missiles when deterrence fails. In 2024, during the crisis between Iran and Israel in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deployed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Aegis destroyers, and performed missile defense operation against missiles launched by Iran toward Israel. U.S. further reinforced missile defense posture by deploying an additional ground-based missile defense assets(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ereby delivering a strong message of deterrence to Iran.

This deployment of U.S. missile defense assets, implemented as part of its extended deterrence,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own deterrence strategy, which fundamentally relies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s the ROK Ministry of Defense continue to develop the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CNI) for allied deterrenc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joint operational procedure and deterrence messaging that concretely support the deployment of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s a deterrence of denial measure on a Korean peninsula crisis. This deterrence of denial based on missile defense capability will help build a system that complements retaliatory deterrence with U.S. nuclear forces.

[논문투고일: 2025. 4. 15.]

[심사의뢰일: 2025. 5. 21.]

[게재확정일: 2025. 7. 7.]

한국 해군의 무인수상정 활용과 대응 방안: 최근 해상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태양*, 하용훈**

- I. 서론
- II. USV 개념과 특성
- III. 최근 해상전에서의 USV 운용 사례 분석
- IV. USV 핵심 능력과 USV 활용 및 대응 방안
- V. 결론

요약

현대 해상전에서 무인수상정(USV)의 등장은 해군의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해상전 사례는 USV의 전술적 효율성과 비대칭 무기로서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티 반군의 해상 전투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해군의 USV의 활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해상전에서 활용된 USV가 자율제어 능력, 장거리 항해 및 통신능력, 탑재능력 및 확장성, 은밀성 및 저 피탐지 능력, 군집 운용 및 협동 교전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USV의 핵심능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해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위협을 고려하여 경비, 대함, 연안/항만 방어 및 공격작전에서의 USV 활용 및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 무인수상정, 우크라이나 전쟁, 후티 반군, 한국 해군, 비대칭 전쟁

*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박사과정

**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현대 해상전에서 무인체계의 부상은 기존의 해군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 USV)의 등장은 항공모함이나 이지스 구축함 등 거함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제해권 확보 및 유지 개념에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해군 전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소형 USV를 활용한 비대칭 전략을 통해 러시아 흑해함대의 작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해군은 흑해함대를 크림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노보로시스크항으로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¹⁾ 이 사례는 소형 USV가 강력한 상대 해군의 작전 수행을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현대 해양 거부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USV의 잠재력을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등장한 청년학파(Jeune École)는 소형 어뢰정(Torpedo Boat)과 같은 비대칭 해군 전력을 활용하여 당시 최강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의 전통적인 거함 중심의 해양 결전 사상과 전략에 도전하였다. 청년학파는 값싼 소형 함정을 이용하여 상대국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경제적·전략적 압박을 가하고자 하였다. 당시 대표적 해양 전략가였던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 1840-1914)은 청년학파의 주장과 유사한 소형 함정 중심의 전략이 역사적으로는 여러 차례 등장하였으나, 결국 전함의 해양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러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현대의 연구자들 또한 마한의 역사적 비판을 참고하여 현대 해상전에서 USV를 활용한 비대칭 전략을 프랑스 청년학파 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분석하고 있다.²⁾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나타난 21세기형 USV는 과거의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큼 해상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과 예멘 후티 반군이 USV를 이용해 강대국의 주요 함정과 선박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있으며, 소형 USV와 같은 비대칭적 전력이 전통적인 거함 중심의 해군력에 현실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의 해상 전력 패러다임

1) "Ukraine attacks forced Black Sea Fleet to move warships from Sevastopol, Russian official says." *Reuters* (2024.10.21.).

2) Kevin Mccranie, "Houthi Attacks in the Red Sea: A New Twist on the Jeune École?" *War On The Rocks* (2024), p. 2.

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해상작전과 전력 설계에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USV 연구는 크게 기술적 측면, 전력화·정책적 측면, 그리고 작전교리적 측면으로 전개되어 왔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USV 플랫폼, 센서, AI 등 기술 발전과 비용 효율성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³⁾ 전력화·정책적 측면에서는 국방혁신 4.0 및 ‘한국형 유령함대’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력화 및 정책 로드맵이 제시되었다.⁴⁾ 한편, 작전교리적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해상전 및 기뢰전 분석을 통해 거함 중심 교리의 현실적 제약을 논의하였다.⁵⁾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USV의 중요성을 다루었으나, 현대 전장에서 USV 운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전개념 변화와 한반도 적용까지 연계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전 사례에 기반한 작전개념 변화와 한반도 적용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해상 전투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전에서 USV의 핵심능력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전장 환경 및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고려하여 한국 해군의 USV 활용 및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 해상전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USV의 전략적 가능성과 한계를 조망함으로써,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 구조 혁신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USV의 개념과 특성을 USV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계 측면에서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전쟁 사례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USV의 핵심능력을 도출하고, 한반도 해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한의 비대칭 위협 상황을 고려하여 USV 핵심능력을 해군의 작전환경에 적용함으로써 USV 활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실제 해상작전에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3) Scott Savitz, “The Age of Uncrewed Surface Vessels.” *RAND Corporation* (2022)., H. I. Sutton, “Uncrewed Platforms Have Been Critical to Ukraine’s Success in the Black Sea.” *RUSI Commentary* (2024).

4) 배학영. “한국형 유령함대(무인원격함대) 운용개념 및 전력 발전방향.” 『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2호(2022)., 류재학, 허지용, 나윤후. “미래전 활용을 위한 해양무인체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지』, 제6권 제2호(2023).

5) 최영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러시아의 해군력 운용과 함의.” 『한국군사학논총』, 제12집 제2권 (2023)., 홍성준, 박승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50일간의 해양전과 기뢰.”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지』, 제7권 제2호(2024).

II. USV의 개념과 특성

1. USV의 개념 및 발전 경과

USV는 승조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정되거나 자율 운항되는 수상 플랫폼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온 무기체계이다. 미 해군은 2007년에 USV Master Plan을 제시하였는데, USV를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개략적인 탑재장비와 함께 정보 수집, 기뢰전, 대잠전, 특수전 등 주요 임무를 명시하였다.⁶⁾ 동 계획은 미군의 2011-2036 무인체계 통합로드맵(Unmanned System Integrated Map)에 반영되면서 수정, 보완되었다.⁷⁾ 특히, 지휘·통제 아키텍처,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중심작전 개념을 도입해 유무인 시스템 간 정보 공유와 협업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USV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에 명시된 임무 외에 화생방 탐지, 항만 방호, 정밀 타격 등 임무 범위를 확대하였다.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 해군은 전후 기뢰 제거 임무와 핵무기 실험 후 해양에서의 방사능 측정을 위해 USV를 운용하였다.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베트남 남부 해역에서 소해작전을 위해 원격 제어 USV를 활용한 바 있다.⁹⁾ 이와 같이 초기의 군용 USV는 주로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지루한(Dull) 4D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플랫폼은 첨단 장비의 탑재와 대형화로 인해 생산 및 운용 비용이 높아 대규모 편성 및 운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¹⁰⁾

이러한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미 해군은 무인체계의 전략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운용개념 발전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무인전력 체계를 구상하게 되었다. 미 해군이 2021년 발표한 'Unmanned Campaign Framework'는 무인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DMO)을 구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¹¹⁾ 이 일환으로 Ghost Fleet Overlord 프로그램을 통해 'Nomad'와 Ranger'라는 대형 무인수상정 시제함을 개발하고, 시험·운용하였으며 이들 함

6) US Navy, *The Navy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Master Plan* (2007).

7) US DoD,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iscal Years 2011-2036* (2011).

8) "DoD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Y2011-2036." *public intelligence* (2012.5.23.).

9) US DoD(2011), p. 25.

10) Bryan Clack, "Sea Drones in the Russia-Ukraine War Inspire New Tactics." *IEEE Spectrum* (2024), p. 4.

11) 배학영(2022), pp. 77-79.

정은 장거리 자율항해, 표적 탐지 및 통신 중계 능력 등 핵심 성능을 실증하였다. 2022년 림팩(RIMPAC) 훈련에서는 Nomad, Ranger 외에 Sea Hunter, Seahawk 등 총 4척의 USV가 참가하여 유인함정 및 해군 무인작전센터와 연계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유·무인 복합전력 운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미 해군은 향후 MUSV(Medium Unmanned Surface Vehicle)를 전방 분산 센서 플랫폼으로 운용하여 후방 아군 전력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LUSV(Large Unmanned Surface Vehicle)는 확장된 무장 플랫폼으로 다양한 미사일 및 무장 시스템을 탑재하여 수상함 전대의 화력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¹²⁾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USV의 운용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상용 부품을 활용하여 제작한 저비용 소형·자폭형 USV를 러시아 흑해함대 공격에 효과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기존의 대형 유인함정 중심의 러시아 해군력을 성공적으로 견제하였다.¹³⁾ 예멘 후티 반군 역시 폭약을 탑재한 소형 USV를 활용하여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군력을 가진 국가들을 상대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다.¹⁴⁾

최근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Replicator Initiative¹⁵⁾는 저비용의 무인 플랫폼을 대량으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소모성 무인 플랫폼을 작전지역에 신속히 투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USV가 복잡한 임무 수행을 위한 고비용·고성능의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것과 달리, 현대의 해양전에서는 저비용·소형·소모성의 USV를 다수 투입하여 효과적인 비대칭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¹⁶⁾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USV의 군사적 효용성

첫째, USV는 비용 대비 매우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소형 보트나 어선을 개조하여 센서, 통신장비 및 폭약을 탑재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양산 가능하다. 반면, 이들의

12) "RIMPAC USV Tests Shaping Future Navy Unmanned Vehicle Choices." *DEFENSE DAILY* (2022.7.28.).

13) J. M. Rickli, F. Mantellassi, *The War in Ukraine: Reality Check for Emerging Technologies and the Future of Warfare* (GSCP, 2024).

14) "Houthi explosive drone boat attacks escalate Red Sea danger." *Reuters* (2024.7.3.).

15) "Defense Innovation Official Says Replicator Initiative Remains on Track." *US DOD News* (2024.1.16.).

16) Kelly M. Saylor, "DOD Replicator Initiative: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2024).

주요 표적이 되는 대형 군함이나 상선은 고가의 자산이므로, 성공적인 공격 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고가의 목표를 타격하는 비대칭적 비용 구조를 형성하며 적을 압박할 수 있다.¹⁷⁾

둘째, 무인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승조원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 손실 위험과 심리적·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우크라이나 USV 운용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USV는 자폭공격용 무기로 정의되며, 승조원이 없기 때문에 고위험 임무에도 투입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이점으로 제시된다.¹⁸⁾ 또한, 적국이 아군 조종사의 생명을 직접 위협할 경우 종종 강한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반면, 무인체계에 대한 공격은 심리적·정치적 임계값을 낮춰 우발적 충돌 또는 과잉보복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¹⁹⁾

셋째, 높은 은밀성을 지닌다. 현대 전쟁에서 운용되고 있는 USV는 선체가 작고 선고가 낮아 레이다 반사 단면적이 작아서 파도에 의한 클러터로 인해 레이다 탐지가 어렵다. 그리고, 엔진 소음 및 열 신호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나 및 광학 센서 탐지도 어렵다. USV 측면에서는 광학 센서만을 이용하더라도 적 함정을 효과적으로 추적 및 공격할 수 있어 적의 방어망을 회피하고 기습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²⁰⁾

넷째, USV는 사전 경로 설정이나 원격 조종을 통해 장거리 자율 항해가 가능하므로, 넓은 작전반경과 유연한 운용성을 제공한다. 수심에서 수백 km 떨어진 목표물을 직접 공격할 수 있어 전략적 활용 가치가 높다.²¹⁾

다섯째, 탄두 탑재량이 크다. 동일 크기의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보다 훨씬 더 많은 폭약을 탑재할 수 있어 공격력이 강력하며, 선체가 수면과 접촉한 상태에서 폭발하면 표적 함정의 수면 아래 격실을 침수시키고 2차 폭발을 유발하여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다.²²⁾

17) Scott Savitz(2022), pp. 2-3.

18) Burlacu, p., & Mateiu, S.-V. "Ukrainian USV (Uncrewed Surface Vessel) Attack on Ships of the Black Sea Fleet: Lessons Learned." *Scientific Bulletin of Naval Academy*, Vol. XXVI, Issue 2(2023), p. 33.

19) Jonathan Panter, "Naval Escalation in an Unmanned Context." *CIMSEC* (2023), <https://cimsec.org/naval-escalation-in-an-unmanned-context/> (검색일: 2025.4.23.).

20) Burlacu, p., & Mateiu, S.-V.(2023). pp, 33-34.

21) Scott Savitz(2022), p. 2.

22) Scott Savitz(2022), pp. 2-3.

3. USV의 한계

첫째, USV는 통신 및 네트워크 의존성이 높아 취약성이 존재한다. 원격 조종 및 자율 항법을 위해 위성통신이 필수적이거나 실제 교전 상황에서 GPS 신호 교란이나 전파 재밍이 발생하면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2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USV 공격을 기획했으나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의 크립반도 인근 서비스를 비활성화 하면서 공격을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²³⁾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USV를 무력화하기 위해 GPS 교란과 전파 재밍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하여 USV가 최종 공격 단계에서 자동유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²⁴⁾

둘째, 공중자산에 의한 조기 탐지 및 요격 가능성이다. 해상초계 및 공중정찰을 통해 USV가 조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공격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 러시아는 2024년 이후 많은 초계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노보로시스크 항구나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에 공격 시도를 한 우크라이나 USV의 생존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²⁵⁾

셋째, 표적 획득과 피아식별의 어려움이다. USV는 단독으로 표적 획득 및 피아식별에 한계가 있어 외부 정보 지원이 필수적이다. 드넓은 해역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위성정찰, 해상초계기, AIS²⁶⁾ 신호 등 표적 정보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차단될 경우 오작동하거나 오인 공격 위험이 존재한다. 예멘 후티 반군의 경우, 소형 보트의 시각 확인에 의존하여 목표물을 선별하고 있어 정교한 표적 정보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²⁷⁾

넷째, 해상 환경의 제약이다. 높은 파도와 같은 악천후는 소형 USV의 항해 안정성과 센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흑해와 같은 비교적 잔잔한 해역에서도 소형 USV는 상당한 선체 흔들림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표적을 카메라 시야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다.²⁸⁾

23) "Musk says he refused Kyiv request for Starlink use in attack on Russia." *Reuters* (2023.9.9.).

24) H. I. Sutton(2024), p. 3.

25) Packard, Q., et al. "Maritime Domain Lessons from Russia-Ukraine: Conflict in Focus." *CSIS Report* (2025). p. 5.

26)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27) Sam Cranny-Evans, & Sidharth Kaushal, "Securing the Red Sea: How Can Houthi Maritime Strikes be Countered?" *RUSI Commentary* (2024), pp. 3-6.

28) Duncan Redford, "Maritime Lessons from the Ukraine-Russia Conflict: USVs and the Applicability to the Baltic and High North." (ISPK Policy Brief No. 17, 2024), p. 5.

이는 태평양이나 북대서양 같이 훨씬 거친 바다에서는 USV가 본래 성능을 발휘하기 더욱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USV의 핵심 강점은 원격·자율 운용능력, 장거리 작전반경, 강력한 타격력, 비용 대비 효율로 요약되며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통신교란, 조기 탐지 대응, 식별 문제, 환경 제약 등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기술개발 및 운용개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해상 전투 사례에서 USV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장에서 논의된 장점과 한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Ⅲ. 최근 해상전에서의 USV 운용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해상전에서의 USV 활용 사례를 분석한다. 이 두 사례는 국가 대 국가 간 전면전과 비국가 반군의 테러전이라는 상이한 맥락에서 발생하였지만, 모두 소형 무인보트가 해전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각 사례 별로 USV의 작전 경과와 결과를 살펴보고, 주요 작전 양상, 기술적 특성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USV 운용의 공통된 요소와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이후에 논의할 USV 핵심능력 도출의 근거를 마련한다.

1.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USV 운용

가. 배경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해군은 주력 함정 대부분을 상실하여 사실상 해상 전력에서 엄청난 열세에 놓였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세바스토폴을 거점으로 흑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통적 함정 전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대함 미사일 및 USV 등 비대칭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거부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실제 2022년 4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키면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에도 폭발물을 탑재한 USV를 운용하여 러시아 흑해함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였다.²⁹⁾

29) HI Sutton(2024), pp. 2-3.

나. 세바스토폴 항구 기습 공격

2022년 10월 29일 새벽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위치한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략적 거점에 대해 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우크라이나는 7척의 USV와 9기의 UAV를 동원하여 세바스토폴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정을 공격했다. USV는 수백 km 밖에서 원격 조종되어 고속으로 항만에 진입해 선체에 탑재된 카메라로 표적을 탐지한 후 함정에 충돌하여 폭발하도록 설계되었다. 러시아 측은 해안포와 함포, 헬기 등으로 대응해 일부 USV를 격파하였으나, 최소 1척 이상의 USV가 내항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 해군의 호위함 및 기뢰부설함 등이 공격으로 손상을 입었다.³⁰⁾ 그리고, 2023년 9월 13일 새벽에도 우크라이나는 순항미사일 10발과 함께 USV 3척을 동원해 세바스토폴 항구를 공격하였는데, 로푸차급 대형 상륙함인 Minsk 함과 킬로급 잠수함 Rostov-na-Donu함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였다.³¹⁾

세바스토폴 항구에 대한 USV의 공격은 러시아 해군의 전력 손실 등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전략적·심리적 파급 효과도 매우 컸다. 러시아 해군은 안전지대로 여겼던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함으로써 방어 태세에 중대한 변화를 강요받았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에 정박한 주요 함정들을 러시아 본토의 노보로시스크 항으로 일부 이동시켰으며 항만 방어를 위해 부유식 방책을 설치하고 함정 운용을 줄이는 등 전력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저비용으로 러시아 함대를 전략적으로 후퇴시키고 이후 USV를 활용한 다양한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흑해에서의 러시아 해군의 활동을 한층 더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다. 노보로시스크 상륙함 공격

세바스토폴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는 흑해 전역으로 USV 작전범위를 확대하였다. 2023년 8월 4일 새벽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 항구 인근에서 러시아 대형 상륙함 Olenegorsky Gornyak를 공격해 큰 손상을 입혔다. 노보로시스크는 러시아 영토 내 항구로서 세바스토폴보다 더 안전한 후방기지로 여겨졌지만, 우크라이나는 USV 장거리 운용을 통해 공격을 시도하였다. 러시아는 당초 우크라이나 USV를 모두 격파했다고 발표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개한 영상과 위성 사진을 통해 상륙함이 실제로 심각한 손상을 입고 항해 불능 상태가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공격을 수행한 USV는 장거리 항해를 통해 수백 km 떨어진 노보로시

30) H. I. Sutton, "USVs at Work in the Black Sea." *USNI Proceedings* (2022).

31) "Ukraine says Russian naval vessels badly damaged in Crimea attack." *Reuters* (2023.9.14.).

스크까지 접근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USV를 활용해 적의 본토까지 원거리 침투 공격이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다.³²⁾

노보로시스크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구 인근에 있는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러시아를 당혹케 하였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토 무역항이자 해군기지인 이곳을 공격받자 즉각 흑해를 통한 상업 선박 통행 일시 중지 등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흑해 전역에서 러시아 해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고, 러시아 해군의 작전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라. 공해상에서의 함정 기습 공격

2023년 우크라이나는 USV를 활용하여 흑해 공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러시아 해군 함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하였다. 2023년 5월에는 러시아 해군의 정보수집함 Ivan Khurs를 공격하였으며 2024년 2월과 3월에는 유도탄정인 Ivanovets와 초계함 Sergey Kotov를 공격해 침몰시켰다.³³⁾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공해상에서 기동 중인 함정에 대한 USV 공격 위협을 잘 보여준다. 공해상에서 지속적인 USV 공격 시도를 통해 러시아 흑해함대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작전적 부담을 느꼈으며 러시아 해군으로 하여금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만들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적극적 작전 수행보다는 방어 임무에 치중한 소극적 전술로 전환하게 되었다.

마. 크림대교 공격

2023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길이 약 19km의 크림대교를 목표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교량은 러시아군의 주요 군사보급로이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설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한 원격 조종 수상드론 Sea Baby 2척을 동원해 교량 하부에 접근한 뒤 약 850kg에 달하는 대형 폭약을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교량 구조물을 심각하게 파손시켰다. 이로 인해 도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량을 주행 중이던 민간 차량 탑승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다.³⁴⁾

러시아는 공식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해상 무인정 공격으로 도로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교량 통행이 수개월 간 제한되어 러시아군의 물자·병력 수송에 큰 지

32) H I Sutton(2024), p. 3.

33) H I Sutton(2024), p. 3.

34) John Hardie, “Crimean Bridge Damaged by Ukrainian Strike.” *FDD's Long War Journal* (2023).

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기존 군함 공격용 폭탄(200~300kg)보다 훨씬 큰 폭약을 탑재해 고정 구조물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이 공격은 전략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사회 역시 항만과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이 USV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바. Magura V5의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탑재 및 항공기 격추

2024년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는 USV를 다목적화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 우크라이나는 본래 공대공 용도로 개발된 구소련제 R-73 미사일을 지상 및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Magura V5 USV에 탑재하였다. 2024년 12월 31일, 크림반도 서부 연안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러시아군 Mi-8 헬리콥터가 USV에 탑재된 이 개량형 함대공 R-73 미사일에 피격되어 격추되었다.³⁵⁾ 이 사례는 USV에 탑재된 함대공 미사일이 적 항공기를 실제로 격퇴한 사례로서 우크라이나는 R-73 미사일의 적외선 유도 능력을 활용하였으며 상업용 FLIR 열상 센서를 보강해 표적 식별과 조준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USV를 활용한 작전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이며 러시아의 공중전력은 더욱 복잡한 위협 환경에 직면하였고, 저고도 비행 시 USV의 대공 위협 역시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사. USV와 UAV 연계 운용 사례

2024년 말부터 우크라이나 해군은 USV의 운용개념을 다각화하고 소형 UAV와 결합하는 혁신적 전술을 선보였다. 2024년 12월 흑해 내 우크라이나 영해에서 러시아가 불법 점거 중이던 해상 가스 채굴 플랫폼을 공격하면서 처음으로 이 전술이 실전 투입되었다. 은밀히 접근한 USV가 선체에 탑재된 다수의 소형 자폭 UAV를 플랫폼 상공에서 급강하시키는 방식으로 해당 플랫폼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³⁶⁾. 이어 2025년 1월 5일 우크라이나 USV는 흑해를 경유하여 러시아 점령지 후방 해안으로 접근한 뒤 해안 방어용으로 배치된 러시아의 Pantsir-S1 대공방어 시스템을 기습하였는데,³⁷⁾ 이때도 USV에 탑재된 소형 자폭 UAV를

35) "Ukraine Claims Its Drone Boat Shot Down A Russian Mi-8 Helicopter With A Surface-To-Air Missile." *The War Zone (TWZ)* (2024.12.31.).

36) "World First: Ukraine's Newest Naval Drone in Unique Attack on Russian Positions." *NavalNews* (2024.12.18.).

37) "Ukraine Reportedly Destroys Russian Pantsir-S1 Air Defense with Magura V5 Naval Drones." *GlobalDefenseNews* (2025.1.9.).

활용해 러시아의 방공망을 공격하였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자폭 임무 중심의 단발성 무기체제로 인식되던 우크라이나의 USV가 UAV 등 다른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발진시키는 멀티플랫폼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해상을 통한 기습 및 침투의 이점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방어체계가 예상하지 못한 기습을 통해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작전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USV 공격

가. 배경

후티 반군은 예멘 북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시아파 무장세력으로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홍해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들은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정치적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홍해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세계 해상 교역의 주요 병목지점으로 전 세계 무역량의 약 10~15%가 이곳을 통과한다.³⁸⁾ 따라서 후티 반군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예멘 내전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적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후티 반군은 반미·반이스라엘 구호를 내세워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이란과의 정치적·군사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후티 반군은 특정 국제적 사건을 명분 삼아 공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해왔다.

나. 사우디 호위함 Al Madinah 공격

후티 반군이 USV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알린 사례는 2017년 1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의 호위함 Al Madinah를 대상으로 한 원격 조종 자폭 무인정 공격이었다. 초기에는 자폭 보트에 인명이 탄 자살공격으로 추정되었으나 미 해군 제5함대 사령관은 “해당 보트는 완전한 원격 조정 무인정으로 평가된다.”라고 확인하였다.³⁹⁾ 이는 후티 반군이 외부 지원을 받아 고도화된 원격 조종 자폭무인정을 운용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38) “홍해 리스크, 세계경제 충격 확산…무역량 1.3% 감소.” 『오피니언뉴스』(2017.2.20.).

39) “New Houthi weapon emerges: a drone boat.” *DefenseNews* (2017.2.20.).

다. 후티 반군의 해상 대규모 공세

Al Madinah 피격 사건 이후 수년간 후티 반군의 해상 공격은 비교적 잠잠하였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하였다. 미국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이후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최소 113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였으며 선박 1척이 나포되고 60개국 이상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⁴⁰⁾ 후티 반군은 폭약을 적재한 다수의 USV를 투입해 동시에 상선으로 돌진하는 스웜(swarm) 전술을 구사하였다. 2024년 6월 27일과 30일에 걸쳐 홍해 해역을 통과하던 상선 2척이 동시다발적 USV의 공격을 받아 그리스 선적 화물선 Tutor호가 침몰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⁴¹⁾

이처럼 민간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함에 따라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경제적 손실도 크게 발생하였다. 2024년 9월 기준 선박 보험료는 과거 선박 가치의 0.05% 수준에서 최고 2%까지 급등하였으며,⁴²⁾ 이는 소수의 USV만으로도 해상교통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같이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증원전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북한이 USV를 활용해 공격한다면 증원전력 전개에 차질이 생기거나 해상교통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라. 다국적 해군 함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

후티 반군은 상선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홍해에 배치된 다국적 함정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미 해군을 주축으로 한 국제 연합군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2023년 말부터 미 해군 구축함 USS Carney를 비롯한 다국적 해군 함정들이 홍해에 배치되어 후티 반군이 발사한 대함미사일·UAV·USV를 여러 차례 요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축함들은 탑재 헬기와 함포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해상과 공중 표적을 동시에 상대하는 고강도 작전을 수행하였다. 미 해군은 2023년 11월 이후 약 15개월 동안 5인치 함포 160발을 포함하여 대공미사일인 SM-2 120발, SM-6 80발, Sea-Sparrow 등 20여 발을 발사하였으며, 약 380대의 후티 반군의 UAV·USV 및 미사일을 격파하였다.⁴³⁾ 이러한 적극적

4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2025-001-Southern Red Sea, Bab el Mandeb Strait, and Gulf of Aden-Houthi Attacks on Commercial Vessels* (2025.2.14.).

41) Jared Keller, "The Rise of the Drone Boats." *WIRED* (2025).

42) "Red Sea shipping insurance costs surge amid attacks." *Safety4Sea* (2024.9.23.).

43) "Navy fired more than 200 missiles to fight off Red Sea shipping attacks, admiral says." *Stars and Stripes* (2025.1.16.).

대응으로 인해 연합군의 군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상선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3. 종합분석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USV 공격 사례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 확인된 USV의 전략적 이점과 한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세바스토폴 항구 및 노보로시스크 인근 상륙함 공격 사례는 소수의 저비용 USV가 높은 은밀성 및 원거리 공격 능력으로 상대방의 주요 함정을 타격하고 전력이 열세인 국가가 비대칭 전략을 통해 강대국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흑해 공해상에서 반복적인 USV 공격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방어 중심적 태세 변화를 유도했으며 이는 한반도 전구에서도 북한의 유사 전략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 해군이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수단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크림대교 공격, Magura V5의 함대공 미사일 탑재 사례, USV-UAV 연계 공격은 USV가 단순한 자폭공격 이상의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멀티플랫폼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례에서는 제한된 폭약 탑재량으로 인해 단발 공격만으로는 대형 함정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거나 통신 장애로 인한 작전 실패 등으로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으며, 러시아가 조기 경보 체계 및 공중 초계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USV 공격 성공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USV의 한계를 나타내며 한국 해군이 USV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과 대응전략 개발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예멘 후티 반군의 사례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해상 물류를 교란시키는 효과적인 저비용 스웸 공격 전략이 부각되었다. 특히, 후티 반군은 USV를 활용하여 고가의 무기체계를 보유한 상대국에게 높은 작전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기술적 미성숙과 제한된 장거리 운용능력으로 인해 미 해군과 같이 방어력이 뛰어난 전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USV 활용으로 인한 미국 증원전력 차단 및 주요 해상교통로 위협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 해군 역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USV가 높은 비용 대비 효과성과 다양한 운용 가능성을 지닌 강력한 비대칭 전략 수단으로서 잠재력이 큰 무기체계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USV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우수한 대응력을 가진 상대방에게는 위

협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감시정찰 능력, 장거리 타격 능력 등 북한의 기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주요 기반시설 보호, 저비용 대응 수단 개발, 전자전 및 통신 방해 대응 능력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IV. USV 핵심능력과 USV 활용 및 대응 방안

1. 현대 해전에서 요구되는 USV의 핵심능력

앞선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 해상작전에서 USV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율제어 능력, 장거리 항해 및 통신능력, 탑재능력 및 확장성, 은밀성 및 저피탐지 능력, 군집 운용 능력 등 다섯 가지 핵심 능력이 필수적임을 도출할 수 있다.

가. 자율제어 능력

자율제어 능력은 외부 통신 차단이나 전자전 공격 등 극한의 상황에서도 USV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우크라이나는 위성통신 기반의 원격 조종을 적극 활용하였지만, 최종 접근 단계에서는 표적 자동 추적 및 공격 알고리즘을 활용한 반자율 운용을 추진하여 작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⁴⁴⁾ 반면, 후티 반군은 자율제어 기술 부족으로 인해 모선에 의한 근거리 무선조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기습 공격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⁴⁵⁾ 따라서, 향후 USV 운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자율항법 및 공격 제어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나. 장거리 항해 및 통신능력

장거리 항해 및 안정적 통신능력은 USV의 전략적 가치와 직결된다. 우크라이나가 Starlink 위성통신을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상륙함까지 공격할 수 있었던 사례에서 장거리 통신능력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동시에 통신망에 대한 해킹, 재밍,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성도 나타났으므로 향후 통신 보호 및 전자전 대응

44) H I Sutton(2024), p. 3.

45) H. I. Sutton, "Houthi's Blowfish: Guide To Explosive USV Threat In Red Sea."
<http://www.hisutton.com/Yemen-Houthi-USV-Guide.html> (검색일: 2025.4.23.).

기술의 발전이 함께 요구된다. 또한, 추진체계 효율화를 통한 장거리 항해능력 확보 역시 전략적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 탑재능력 및 확장성

탑재능력 및 확장성은 USV의 작전적 유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인 폭약 탑재 외에도 단거리 대공미사일을 탑재하여 실제로 항공기를 격추시키거나 UAV 발진 플랫폼으로 사용하며 USV 활용을 다목적화 하는 성과를 보였다. 향후 한국 해군은 USV를 다양한 무장 및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듈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전술적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라. 은밀성 및 저 피탐지 능력

은밀성은 USV가 적 방어망을 통과하여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티 반군 활동 사례 모두 USV의 낮은 RCS와 소음 등 복합적 은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향후 USV의 은밀성 향상은 전기추진과 같은 추진방식의 개선, 통신 무선 침묵 유지, 환경을 활용한 기만전술 등 다양한 기술 및 전술적 발전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 군집 운용 및 협동 교전 능력

군집 운용능력은 다수의 USV가 협력하여 적의 방어능력을 압도하는 전략적 운용개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처럼 여러 대의 USV를 동시 투입하면 적의 방어무기 체계를 포화시켜 작전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한국 해군은 USV의 군집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유·무인 복합운용(MUM-T)과 같은 고급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바. 핵심능력 간 상호 연계성

마지막으로 USV의 핵심능력들은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으로 운용될 때 전투 효율이 극대화된다. 자율제어 능력과 장거리 항해 및 통신능력, 탑재능력 및 확장성, 은밀성, 군집운용 능력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 능력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때 USV는 현대 해상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티 반군 활동 사례에서 나타난 USV의 성과와 한계는 결국 이 능력들의 조화로운 발전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해군의 USV 전력 발전은 이러한 핵심능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USV 활용 및 대응 방안

한반도는 북한과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어 접적 해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서해는 서해5도를 포함한 NLL 인근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해는 심해 해역을 통한 북한 잠수함 활동과 외부 세력 접근 가능성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다. 북한은 소형 잠수정, 해안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적극 운용해 왔으며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은 이러한 위협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특히 북한은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을 이용하여 서북도서 및 수도권 서측에 특수전 요원을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⁴⁶⁾ 한국 해군에 작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 위협 환경 속에서 한국 해군은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 운용 방식이 요구된다. 기존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대형 상륙함 주심의 유인 전력만으로는 광범위한 해역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USV의 적극적 도입과 운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과 핵심능력 도출에서 확인된 USV의 자율제어능력, 장거리 항해 및 통신능력, 탐재능력 및 확장성, 은밀성 및 저피탐지 능력, 군집 운용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해군이 수행하는 주요 작전인 경비작전, 대함작전, 연안/항만 방어 및 공격 작전에서의 USV 활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가. 경비작전 및 대함작전

경비작전은 정해진 구역에서 수상함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작전의 완전성을 구현하기 위해 USV의 활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USV가 수상함과 공조 기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최소 파고 2~3m의 내파성과 항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참수리급 또는 신형 고속정 규모의 중형 USV 확보가 필요하다. USV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출항부터 임무 종료 후 입항까지 수상함이 직접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될 수 있으나, USV의 임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육상 지휘소에서도 임무를 직접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USV는 장거리 항해 및 통신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외부 통신 차단이나 적 전자전 재밍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제어 능력을 통해 안전 구역으로 자율 기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비작전 수행 간 감시정찰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탐색레이다 및 광학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북한의 소형 경비함정과의 교전도 고려해야 하므로

46) 이동찬.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 연구.” 『통일전략』, 제21권 제4호(2021), pp. 97-100.

30~40mm 함포와 소형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과 같이 북한이 또다시 한국 해군의 경비함정에 도발할 시, 유인 경비함정이 아닌 USV 경비함정이 이에 우선 대응함으로써 유인 함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자폭형 USV를 활용하여 초계 중인 경비함정을 기습할 경우 함정의 임무 수행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함정에 감시정찰용 회전익 UAV와 자폭 FPV(first-person view) 드론을 탑재하여 원거리에서 접근하는 북한의 USV를 조기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의 자폭형 USV는 전시 한국의 해상교통로와 미군의 증원전력 차단 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 한국 해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에 탑재된 항공전력의 무장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USV 공세를 러시아 회전익 전력이 저지한 사례와 같이 북한의 단독 및 군집 USV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함에 탑재되는 대잠초계헬기는 소형 대함미사일을 다수 탑재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 현재 탑재할 수 있는 12.7mm 기관총이 아닌 적 USV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관포 탑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자폭형 USV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 최적의 무기체계는 전자공격체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되는 FPV 드론이 전자전 재밍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광섬유 유선 유도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⁴⁷⁾ USV는 해상에서 유선 유도로 운용하는 것은 해파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되므로 전자공격체계는 USV에 여전히 유효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건조되는 신형 호위함급 이상 함정에는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고 있는데, 소형 경비함정에도 전자전 대응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중인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와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등 고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의 함정 탑재도 향후 적 USV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안/항만 방어 및 공격 작전

전시 북한의 특수작전부대 및 고속상륙전단의 연안을 통한 우회 침투는 한국의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한국군의 전구작전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해군의 함대 및 전단 본부가 있는 군항뿐만 아니라 전시 군수물자 수송 선박이 드나드는 주요 항만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 해군의 연안 및 항만 방어 작전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47) “They cannot be jammed”: fibre optic drones pose new threat in Ukraine.” *The Guardian* (2025.4.23.).

중요한 작전이다.

외해에서 USV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내파성과 항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거리 항해 능력이 요구되나, 외해역 대비 연안 및 항만 주변 해역은 상대적으로 파고가 낮고 수심이 얕아 다수의 소형 군집 USV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전시에 수상전투단을 형성해 한국 해군의 주력 함정을 대상으로 대함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기습적으로 공기부양정 등 고속 상륙전력을 이용하여 연안을 통해 침투를 시도할 경우 신속히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형 군집 USV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은 방호력이 매우 취약하여 소형 군집 USV에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량 무장 예를 들면, 비공 대함유도미사일, 20~30mm 기관포를 이용하여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소형 자폭 드론의 운용도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의 고속상륙단 침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Switchblade 600과 같은 소형 자폭 드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⁴⁸⁾ 이러한 소형 군집 USV는 함대 및 전단 지휘소에서 운용하며,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 능력과 자율제어 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무인 협동 교전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연안/항만 방어뿐만 아니라 전방 연안 해역을 통한 적 주요 해군 기지 공격에도 USV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잠수함을 감출 수 있는 지하함정 대피호가 있는 잠수함정 기지⁴⁹⁾ 공격에 자폭공격용 USV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USV는 은밀성과 저 피탐지 능력을 갖추고 자율제어 능력과 통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자폭 USV 공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인 공격을 위해서는 은밀성뿐만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기동할 수 있는 기동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책 제언

2022년 11월 18일 한국 해군은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종합발전 대토론회를 통해 미래전에서의 작전수행 개념을 정의하고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단계별 목표 및 로드맵과 함께 단위전력 확보,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⁵⁰⁾ 더불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전투발전지원요소, 통합체계지원요소 등 전력화지원요소 구축에 관한 추진 방향도 제시하였다. 이

48) 김태양, 하용훈. “해상 자폭드론의 전투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1호 (2024). pp. 720-729.

49) “북 잠수함기지에 지하요새가? 위성사진 포착.” 『조선일보』(2010.4.23.).

50)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추진 동력 적극 확보해야.” 『국방일보』(2022.11.18.).

러한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해군의 USV 활용 및 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한국 해군 및 국방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경비작전, 대함작전 등 한국 해군의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적 방책 및 야 방책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필요시 상용 무인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투실험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투실험은 USV의 단독 운용뿐만 아니라 USV와 UAV의 복합 운용,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등 다양한 운용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USV의 실전 활용 사례가 USV의 잠재적 위협과 효과성을 보여 주는 등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이를 고려 시, 한국 해군 역시 단기적으로 USV의 실전적 활용 능력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전투실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투실험은 실제 작전환경에서의 USV 운용 성능, 유인 함정과의 상호운용성 및 기술적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체계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과 유·무인 복합운용 개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투실험을 통해 검증된 USV 운용 사례를 고려하여 스핀-온(spin-on) 방식으로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상용 무인체계를 군용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현대전에서 무인 전력의 운용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한 바 있어, 향후 다양한 무인체계를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전투실험으로 검증된 USV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민간에서 이미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무인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력 획득 기간을 단축하고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여, 북한의 비대칭 도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셋째, 중·대형 및 군집 USV 등 첨단 USV 획득 및 전력화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단계적·탄력적 획득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해군은 기존 유·무인 함정 투자를 조정하여 첨단 무인체계 연구개발 예산이 연속성 있게 배분되도록 하고, 초기 시험 운용에서 도출된 성과와 교훈을 근거로 성능을 단계별로 확대·개량하는 점진적 전력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예산·제도 의사결정을 조율할 범부처 협의체를 두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첨단 USV 전력의 비용-효과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업 성숙도, 기술 위험도, 그리고 운영 유지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동맹국과의 공동 시험·훈련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개발 부담을 분담하고 상호운용성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군 협력 체계 고도화와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자율항법, 위성·광통신, 인공지능 기반 다중센서 융합, 전기·수소 복합 추진체계 등 차세대 핵심기술은 단일 주체만으로는 개발 리스크와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연구기관,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기술·인력·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개방형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군과 한국선급이 제정한 군용 USV 설계 지침⁵¹⁾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모듈식 플랫폼과 개방형 아키텍처를 개발함으로써 부품 및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제고하고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및 대학 연구기관이 국방 시험장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테스트베드를 개방함으로써, 급속히 진화하는 민간 원천기술을 조기에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현대 해상전에서의 USV의 등장은 <표 1>과 같이 기존의 해군작전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첨단 구축함 및 호위함과 같은 고가치 유인함정을 집중 운용하여 제해권을 확보하고 유지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티 반군의 해상 공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USV가 활발히 운용되면서 저비용·비대칭 해양거부 전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USV의 핵심능력을 도출하고,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해군의 USV 활용 및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USV의 개념 및 발전 경과를 살펴보고, USV의 군사적 효용성과 USV의 한계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 전쟁에서의 주요 USV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4장에서는 자율제어능력, 장거리 항해 및 통신능력, 탑재능력 및 확장성, 은밀성 및 저피탐지 능력, 군집 운용능력 등 다섯 가지 핵심능력을 현대 해상작전에서의 USV 핵심능력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핵심능력을 고려하여 한국 해군의 경비작전, 대함작전, 연안/항만 방어 및 공격작전 측면에서 USV의 활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방안을 고려하여 한국 해군 및 국방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51) “군사용 무인수상정 설계 지침서(안) 개발현황.” 『한국선급』(2025.3.5.).

〈표 1〉 USV 등장 후 해군 작전개념 변화

요 소	USV 등장 전(Sea-Control)	USV 등장 후(Sea-Denial)
전력구성	거함 중심, 소수 정예	소형/저비용 무인 플랫폼 다수
전술목표	제해권 확보, 전력우세 추구	해양거부, 방어적 소모 전략
교리변화	집중된 전력운용	분산, 자율, 협동 운용

출처: 필자 작성

한국 해군은 USV 전력화 및 작전 운용을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인명 피해와 정치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는 분단 국가 특성상 인명 손실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하며, 긴장 지역에서 전면전 확전 위험을 낮춰 보다 적극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USV는 유인 함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대량 확보가 가능해, 넓은 해역에서 포화 방어 효과를 발휘하여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유·무인 복합운용 방식으로 유인 전력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어 고가치 함정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 지속 운용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승조원 제약 없이 장기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특히 위협하거나 반복적인 임무에 적합할 것이다. 이는 적극적인 USV 활용이 출산을 감소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한국 해군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민수 분야로의 기술 확산을 촉진하여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래 한반도 전장환경에서 USV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향후 해군 전력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국 해군은 USV에 관한 제도적·기술적·인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USV의 운용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억제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2022 국방백서』(2023).
-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2023).
- 김태양, 하용훈. “해상 자폭드론의 전투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1호(2024).
- 류재학, 허지용, 나윤후. “미래전 활용을 위한 해양무인체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지』, 제6권 제2호(2023).
- 배학영. “한국형 유령함대(무인원격함대) 운용개념 및 전력 발전방향.” 『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2호(2022).
- 이동찬.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 연구.” 『통일전략』, 제21권 제4호(2021).
- 최영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러시아의 해군력 운용과 함의.” 『한국군사학논총』, 제12집 제2권(2023).
- 홍성준, 박승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50일간의 해양전과 기뢰.”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지』, 제7권 제2호(2024).
- “군사용 무인수상정 설계 지침서(안) 개발현황.” 『한국선급』(2025.3.5.).
- “북 잠수함기지에 지하요새가? 위성사진 포착.” 『조선일보』(2010.4.23.).
- “홍해 리스크, 세계경제 충격 확산…무역량 1.3% 감소.” 『오피니언뉴스』(2017.2.20.).
-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추진 동력 적극 확보해야.” 『국방일보』(2022.11.18.).
- Bryan Clack, “Sea Drones in the Russia-Ukraine War Inspire New Tactics.” *IEEE Spectrum* (2024).
- Burlacu, p., & Mateiu, S.-V. “Ukrainian USV (Uncrewed Surface Vessel) Attack on Ships of the Black Sea Fleet: Lessons Learned.” *Scientific Bulletin of Naval Academy*, Vol. XXVI, Issue 2(2023).
- Duncan Redford, “Maritime Lessons from the Ukraine-Russia Conflict: USVs and the Applicability to the Baltic and High North.” (ISPK Policy Brief No. 17, 2024).
- H. I. Sutton, “Houthi's Blowfish: Guide To Explosive USV Threat In Red Sea.” <http://www.hisutton.com/Yemen-Houthi-USV-Guide.html> (검색일: 2025.4.23.).
- H. I. Sutton, “Uncrewed Platforms Have Been Critical to Ukraine's Success in the Black Sea.” *RUSI Commentary* (2024).

- H. I. Sutton, "USVs at Work in the Black Sea." *USNI Proceedings* (2022).
- Jared Keller, "The Rise of the Drone Boats." *WIRED* (2025).
- J. M. Rickli, F. Mantellassi, *The War in Ukraine: Reality Check for Emerging Technologies and the Future of Warfare* (GSCP, 2024).
- John Hardie, "Crimean Bridge Damaged by Ukrainian Strike." *FDD's Long War Journal* (2023).
- Jonathan Panter, "Naval Escalation in an Unmanned Context." *CIMSEC* (2023), <https://cimsec.org/naval-escalation-in-an-unmanned-context/> (검색일: 2025.4.23.).
- Kelly M. Saylor, "DOD Replicator Initiative: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2024).
- Kevin Mccranie, "Houthi Attacks in the Red Sea: A New Twist on the Jeune École?" *War On The Rocks* (2024).
- Packard, Q., et al. "Maritime Domain Lessons from Russia-Ukraine: Conflict in Focus." *CSIS Report* (2025).
- Sam Cranny-Evans, & Sidharth Kaushal, "Securing the Red Sea: How Can Houthi Maritime Strikes be Countered?" *RUSI Commentary* (2024).
- Scott Savitz, "The Age of Uncrewed Surface Vessels." *RAND Corporation* (2022).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2025-001-Southern Red Sea, Bab el Mandeb Strait, and Gulf of Aden-Houthi Attacks on Commercial Vessels* (2025.2.14).
- US DoD,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iscal Years 2011-2036* (2011).
- US Navy, *The Navy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Master Plan* (2007).
- "Defense Innovation Official Says Replicator Initiative Remains on Track." *US DOD News* (2024.1.16.).
- "DoD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Y2011-2036." *public intelligence* (2012.5.23.).
- "Houthi explosive drone boat attacks escalate Red Sea danger." *Reuters* (2024.7.3.).
- "Musk says he refused Kyiv request for Starlink use in attack on Russia." *Reuters* (2023.9.9.).

- “Navy fired more than 200 missiles to fight off Red Sea shipping attacks, admiral says.” *Stars and Stripes* (2025.1.16.).
- “New Houthi weapon emerges: a drone boat.” *DefenseNews* (2017.2.20.).
- “Red Sea shipping insurance costs surge amid attacks.” *Safety4Sea* (2024.9.23.).
- “RIMPAC USV Tests Shaping Future Navy Unmanned Vehicle Choices.” *DEFENSE DAILY* (2022.7.28.).
- “‘They cannot be jammed’: fibre optic drones pose new threat in Ukraine.” *The Guardian* (2025.4.23.).
- “Ukraine attacks forced Black Sea Fleet to move warships from Sevastopol, Russian official says.” *Reuters* (2024.10.21.).
- “Ukraine Claims Its Drone Boat Shot Down A Russian Mi-8 Helicopter With A Surface-To-Air Missile.” *The War Zone (TWZ)* (2024.12.31.).
- “Ukraine Reportedly Destroys Russian Pantsir-S1 Air Defense with Magura V5 Naval Drones.” *GlobalDefenseNews* (2025.1.9.).
- “Ukraine says Russian naval vessels badly damaged in Crimea attack.” *Reuters* (2023.9.14.).
- “US, ROK test unmanned vehicles in live fire exercise during RIMPAC 2024.” *America's NAVY Press Office* (2024.8.8.).
- “World First: Ukraine's Newest Naval Drone in Unique Attack on Russian Positions.” *NavalNews* (2024.12.18.).

Employment and Countermeasures of Unmanned Surface Vessels for the Republic of Korea Navy: An Analysis of Recent Maritime Combat Cases

Tae-Yang Kim & Yonghoon Ha

Keywords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Russia-Ukraine War, Houthi Insurgency, Republic of Korea Navy (ROKN), Asymmetric Warfare

The emergence of unmanned surface vehicles (USVs) in modern naval warfare has fundamentally changed traditional naval operational concepts. In particular, recent naval engagements have demonstrated the tactical utility of USVs and their value as asymmetric weap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aval combat cases from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Houthi insurgency in order to propose USV employment and countermeasures for the Republic of Korea Navy. The cas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USVs used in these operations possess the following core capabilities: autonomous control; long-range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payload capacity and modular expandability; stealth and low detectability; and swarm operation with cooperative engagement. Based on these capabilities, and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threat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s waters, we derived USV employment and countermeasures for patrol operations, anti-surface warfare, and coastal/port defense and strike missions. In addition, policy initiative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posed measures are recommended.

[논문투고일: 2025. 4. 30.]

[심사의뢰일: 2025. 5. 21.]

[게재확정일: 2025. 7. 2.]

미국 군대의 항명 사례 연구

임재강*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항명 사례 분석
- IV. 종합 분석과 정책 제언
- V. 결론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군대 내 항명(disobedience)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미국 군대의 주요 항명 사례를 법적, 윤리적, 그리고 상황적 요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분석을 통한 사례 연구를 채택하였으며, 미군 통합군 사법(UCMJ) 하의 항명 관련 법규, 윤리적 쟁점,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분석 틀로 삼아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윌리엄 캘리 중위의 미라이 학살 사건, 휴 톰슨 준위의 명예로운 항명, 보위 버그달 상병의 탈영 사건, 에디 갤러거 상사의 전쟁범죄 혐의 사건, 빌리 미첼 사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해임 사건, 제독들의 반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군 내 항명은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신념, 조직 문화, 전쟁 상황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극한의 전장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과 법적 의무가 충돌하거나, 경직된 조직문화와 정치적 개입이 항명 행위를 촉발하고 왜곡하는 패턴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군이 명령 체계의 합법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윤리 교육 및 리더십 개발을 통해 보다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군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항명, 미국 군대, 법적 요인, 윤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사례 연구

* [전]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군의 항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우러(Maurer, 2024)는 미 해군 특수부대 SEAL Team 6 가설을 통해 대통령이 정치적 라이벌의 암살을 명령했을 때 군인이 이를 따르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¹⁾ 즉, 대통령의 명령이 군사적 맥락에서 법적으로 불법적인 경우, 군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2023년 10월 박정훈 대령의 항명 기소 사건과 2024년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 내 항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²⁾ 과거에는 항명을 일방적으로 반역적 행위로 비난했지만, 이제는 양심에 따른 규율있는 항명을 교육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대 내 항명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군의 항명 문제를 단순히 군 내부의 규율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구조와 관련된 정치적,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군에서는 복종이 군 조직의 기본이지만, 맹목적인 복종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7년 미 육군 참모총장 마크 밀리(Mark Milley) 장군이 제시한 훈련된 불복종(disciplined disobedience) 개념으로 윤리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미군에서도 군인들이 의심스러운 명령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 군대의 주요 항명 사례들을 분석하여 항명이 발생하는 조건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단순히 법규 위반으로 항명을 치부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법적, 윤리적, 상황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항명이라는 행위를 촉발하거나 그 결과를 형성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과거 미군의 항명 사례들을 면밀히 연구함으로써, 한국 군의 현재 및 미래 군 조직 운영, 리더십 개발, 윤리 교육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Maurer, D. Can the Military Disobey Orders in the SEAL Team 6 Hypothetical?, *Lawfare*. July 8. (2024). <https://www.lawfaremedia.org/article/can-the-military-disobey-orders-in-the-seal-team-6-hypothetical> (검색일: 2025.3.14.).

2) “[따져보니] 부당한 명령에 ‘항명’ 가능?...기준과 판례는”. 『TV조선』, (2024.12.10.)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10/2024121090315.html (검색일: 2025.3.14.).

2. 연구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군대 내 항명 사례를 법적, 윤리적, 그리고 상황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법적 분석을 통해 항명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그 도덕적 정당성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상황적 분석을 통해 해당 행위의 배경과 동기를 면밀히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각 사례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불복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항명이라는 복합적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 첫째, 미국 군법 체계 내에서 항명에 대한 법적 틀을 상세히 검토한다. 둘째, 군대 내 항명과 관련된 핵심 윤리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셋째, 역사적 및 현대적 항명 사례들을 선별하여 법적, 윤리적, 상황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법적·윤리적·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다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들은 맹목적 복종과 명예로운 항명(켈리, 톰슨), 군 조직 이탈(버그달), 내부 고발(갤러거) 등 개인 차원의 불복종부터, 군사 혁신을 둘러싼 정책 비판(미첼), 문민통제 원칙과 관련된 최고위급의 불복종(맥아더, 제독들의 반란, 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이를 통해 항명이라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항명의 개념과 역사

가. 항명의 개념

한국군에서 복종(Obedience)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사 작전의 성공을 위해 ‘복종’은 필수적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항명’과 ‘명령 위반(Violation of Order)’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군형법 제44조)이고, 명령 위반은 일반적인 군 규칙을 어기는 경우를 말한다(군형법 제47조).

이처럼 항명(抗命)이란 용어는 군법에 따른 군대 법률 용어이며, 불복종과 혼용하며, 가장

넓은 의미로 명령이나 법규를 따르지 않는 불복종(Noncompliance)과 상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항명(Insubordina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란(Mutiny)은 군대나 선박 등에서 2인 이상이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란(Insurrection)은 2인 이상이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또한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 유형으로³⁾ 불만 복종(grudging obedience), 명령 수정(refinement), 임무 포기(exit) 등이 있다.

새뮤얼 헌팅턴은 “충성과 복종이 최고의 군사적 미덕”이라고 말한다.⁴⁾ 그러나 뉘른베르크 재판과 미라이 학살사건 재판을 통해 군인은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명령에는 반드시 불복종 의무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복종은 무조건적인 미덕이 될 수 없으며, ‘규율적 불복종’과 같이 더 큰 충성을 위해 불복종이 필요할 수 있다.⁵⁾ 그러므로 미군은 반인륜 불법 명령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따르는 것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라 전쟁 범죄로 간주 처벌한다.⁶⁾ 이 연구에서 분석할 사례들은 이러한 맹목적 복종과 규율적 불복종 사이의 경계에 있거나, 직접적인 명령 거부 외에 탈영, 정책 비판 등 넓은 의미의 불복종 행위를 포함하며, 이들이 군 조직의 명령 체계 및 윤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구한다.

나. 항명 법률 규정의 역사

미국 군법은 1775년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에서 영국군의 군율(軍律)을 모델로 채택한 것에서 기원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50년에 통합군사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이 제정되었다. UCMJ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모든 군 조직에 적용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군사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⁷⁾ UCMJ는 1968년과 2016년 개정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⁸⁾ UCMJ 제90조, 제91조 및 제92조는 군대 내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을 반영하

3) Matthews, Eoghan. “Unmasking Insubordination.” Modern War Institute, 2 Feb. (2022), <https://mwi.westpoint.edu/unmasking-insubordination/>. (검색일: 2025.3.14.).

4) Samuel p. Huntington, *Soldier and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MA: Belknap Press, 1957), p. 73.

5) Shanks Kaurin, p. “Professional Disobedience: Loyalty and the Military.” *The Strategy Bridge*. (2017, August 8). <https://thestrategybridge.org/the-bridge/2017/8/8/professional-disobedience-loyalty-and-the-military> (검색일: 2025.3.14.).

6) Human Rights First. “Fact sheet: “Following orders” is no defense to war crimes: The duty to disobey illegal military orders.” (2016, 8.30.). <https://humanrightsfirst.org/library/fact-sheet-following-orders-is-no-defense-to-war-crimes-the-duty-to-disobey-illegal-military-orders/> (검색일: 2025.3.14.).

7) https://en.wikipedia.org/wiki/Uniform_Code_of_Military_Justice (검색일: 2025.3.14.).

여 항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

다. 항명의 유형

미국 군법 하에서 항명은 고의적 불복종(Willful Disobedience), 적법한 일반 명령 또는 규칙 불복종(Rule Disobedience), 기타 적법한 명령 불복종(Order Disobedience), 직무 태만(Neglect of Duty) 등으로 구분한다. 의도를 가진 의식적인 반항이라는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고의적 불복종(UCMJ 90조 91조)이고, 기타 사항은 불복종 의도가 없더라도 군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적용되는 규정(UCMJ 92조)이다.

라. 항명의 역사

미국 군대에서 항명은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해왔으며, 초기에는 인종 차별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1944년 포트 시카고 탄약 창고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선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 항의하여 작업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50명이 반란죄로 처벌받았다.⁹⁾ 같은 해, 재키 로빈슨 중위는 군용 버스에서 인종 차별적 좌석 이동 명령에 저항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¹⁰⁾ 1945년 프리먼 비행장(Freeman Field)에서는 477th 폭격비행단 소속 아프리카계 미국인 장교 100여 명이 장교 전용 클럽 출입을 거부당한 것에 항의하며 불복종 운동을 벌였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¹¹⁾ 1968년 포트 후드에서는 흑인 병사들이 시위대 진압 명령에 항의하며 비폭력 시위를 벌였다.¹²⁾ 이러한 사례들은 윤리적으로 인종 차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으며,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미국 군대 내 항명이 인종 차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8) Schlueter, D. A. "Reforming Military Justice: An Analysis of the Military Justice Act of 2016." *St. Mary's Law Journal*. (2017.8.30.)

9) National Park Service, "The Catalyst of Change: Understanding Mutiny", <https://www.nps.gov/poch/learn/historyculture/the-mutiny-trial.htm> (검색일: 2025.3.14.).

10)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Jackie Robinson and the "Double V" Campaign", <https://nmaahc.si.edu/explore/stories/jackie-robinson-and-double-v-campaign> (검색일: 2025.3.14.).

11) Evans, "How Tuskegee Airmen fought military segregation with nonviolent action," <https://www.history.com/news/tuskegee-airmen-impact-civil-rights-movement>(검색일: 2025.3.14.). Lyle, "Tuskegee Airman broke color barriers through civil disobedience." <https://www.af.mil/News/Article-Display/Article/111659/tuskegee-airman-broke-color-barriers-through-civil-disobedience/> (검색일: 2025.3.14.).

12) History, "Black soldiers stage sit-in at Fort Hood."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black-soldiers-sit-in-fort-hood-43> (검색일: 2025.3.14.).

베트남 전쟁 중에는 군 내부에서 전쟁에 반대한 GI 저항(GI Resistance)이 확산되었다. 1965년 헨리 하우 중위가 반전 시위에 참여하고, 하워드 레비 군의관이 전쟁 범죄 가담을 거부하는 등 개인적 양심에 따른 불복종 사례가 나타났다.

1966년에는 뉘른베르크 원칙을 근거로 파병을 거부한 ‘포트 후드 3인’ 사건을 계기로 집단적 저항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상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인 프래깅(Fragging)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후 ‘베트남 참전 군인 반전 연합(VVAW)’이 결성되어 조직적 반전 운동으로 발전했다.¹³⁾

1968년 3월에는 미라이(My Lai) 마을에서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으나, 동시에 헬기 조종사 휴 톰슨(Hugh Thompson)이 학살을 막기 위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명예로운 항명 사례도 있었다.

결정적 불복종이 작전의 성공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도 있다. Kaurin(2017)은¹⁴⁾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D-Day)에서 미 해군의 두 하급 장교가 명령대로 탱크를 발진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탱크를 선상에 보관하고 상륙 지점에 접근하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 간지갈 전투에서는 다코타 마이어 하사가 상관의 후퇴 명령을 무시하고 다섯 번 전장에 진입, 동료 병사 12명 이상의 생명을 구해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Kantor, 2015).¹⁵⁾

최근에도 항명 사례는 이어졌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군은 모든 군인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약 8,000명의 군인이 명령을 거부해 강제 퇴역 조치를 당했다.¹⁶⁾ 이처럼 미국 군대 내 항명의 역사는 인종 차별, 전쟁 범죄 거부, 전쟁 반대 운동, 전투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했으며, 항명은 단순한 규율 위반을 넘어 도덕적 신념, 사회 정의, 군사적 판단이 교차하는 복합적 행위로 자리잡아 왔다.

13) Sawyer, Kaylyn L. “A Divided Front: Military Dissent During the Vietnam War.” *The Gettysburg Historical Journal* Vol. 16. No. 9. (2017).

14) Kaurin, p. S. “Professional disobedience: Loyalty and the military.” *The Strategy Bridge*. (2017, August 8). <https://thestrategybridge.org/the-bridge/2017/8/8/professional-disobedience-loyalty-and-the-military> (검색일: 2025.3.14.).

15) Kantor, J. H. “10 heroic acts of bravery that involved disobeying a direct order.” *Listverse*. (2015, September 13). <https://listverse.com/2015/09/13/10-heroic-acts-of-bravery-that-involved-disobeying-a-direct-order/> (검색일: 2025.3.14.).

16) Shane, Leo III. “Hegseth promises to reinstate, repay troops who refused COVID vaccine.” *Military Times*, 15 Jan. (2025), www.militarytimes.com/news/pentagon-congress/2025/01/14/hegseth-promises-to-reinstate-repay-troops-who-refused-covid-vaccines/. (검색일: 2025.3.14.).

마. 항명의 영향

항명이 군대 내에서 만연하거나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상관의 권위가 약화되고, 군사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규율과 지휘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군대는 명령이 정확히 전달되고 이행되는 계층 구조와 팀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든 항명은 혼란을 초래하고, 비효율성을 높이며, 심지어 임무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항명의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명령을 내리고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장교들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 병사들의 복무 선서는 “대통령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을 포함하지만, 장교들의 임관 선서에는 이러한 문구 대신 “헌법을 수호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다짐이 담겨 있다.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장교들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설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¹⁷⁾

바. 항명의 요인

항명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일하지 않다. 법령이나 윤리적 원칙과 충돌하는 명령,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열악한 리더십, 상관에 대한 신뢰 부족, 모순된 명령, 유해한 조직문화, 과도한 작전 압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명의 원인들을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법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별 군인의 양심과 윤리적 판단에 따른 윤리적 요인, 그리고 전투 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부재, 전투 상황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항명 관련 사건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법적 요인부터 차례로 설명한다.

2. 법적 요인: 미국 군법의 군사 항명

가. 통합군사법전(UCMJ)과 항명죄 규정

미국 군대에서 항명은 통합군사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¹⁸⁾ 제 90조, 91조, 92조에 규정하고 있다.

17) Valenzuela, M. “The difference between Oath of Office, Oath of Enlistment.” Marine Corps Base Quantico News. July 30 (2015). <https://www.quantico.marines.mil/News/Article/611510/the-difference-between-oath-of-office-oath-of-enlistment/> (검색일: 2025.3.14.).

18) <https://ucmj.us/> (검색일: 2025.3.14.).

(1) 제90조: 직속상관인 장교에 대한 폭행 또는 고의적 불복종 (Assaulting or Willfully Disobeying Superior Commissioned Officer)¹⁹⁾

UCMJ 제90조는 직속 상관인 위임장교(superior commissioned officer)의 합법적인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복종하거나, 상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상관인 장교를 때리거나 무기를 꺼내거나 들어 올리거나, 장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또는 ② 상관의 합법적 명령을 고의로 불복종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언어적 거부, 근무에 보고하지 않는 행동 불이행,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상관에 대한 무례함, 임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전투 상황에서의 저항 등의 행위이다.²⁰⁾ 상관의 합법적인 명령(lawful command)을 고의적으로 불복종하는 행위는 중대한 군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은 평시에는 불명예 제대, 최대 5년의 징역형, 모든 급여와 수당의 몰수, 전시에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²¹⁾

고의적 불복종(willfully disobeys)이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명령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고의적 불복종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피고인이 상관인 장교로부터 합법적인 명령을 받았어야 한다.

둘째, 해당 장교가 피고인의 직속 상관인 위임장교(superior commissioned officer)였어야 한다.

셋째, 피고인이 해당 장교가 자신의 상관임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

넷째, 피고인이 상관의 합법적인 명령에 대해 고의로 불복종했어야 한다.

또한, 이 명령은 부하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²²⁾

다만, 불복종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²³⁾ ① 상관의 구체적 명령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아 모호하여 오해하였거나(지식 부족), ② 명령이 상관의 권한 범위 밖이거나, ③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④ 군사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⑤ 질병으로 인해 명령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준수 불능), 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19) <https://ucmj.us/890-article-90-assaulting-or-willfully-disobeying-superior-commissioned-officer/> (검색일: 2025.3.14.).

20) <https://www.mclainmilitarylawyer.com/court-martial/military-offenses/insubordination/> (검색일: 2025.3.14.).

21) <https://www.mymilitarylawyers.com/ucmj-article-90-willfully-disobeying-superior-commissioned-officer/> (검색일: 2025.3.14.).

22) <https://www.armfor.uscourts.gov/digest/IIIA14.htm> (검색일: 2025.3.14.).

23) <https://www.jordanucmjlaw.com/2023/09/what-happens-when-you-disobey-a-military-order/> (검색일: 2025.3.14.).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경우 ⑦ 위협이나 강압을 받은 경우 ⑧ 군인이 합리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사실의 오류)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군인은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제91조: 준사관, 부사관, 하사관에 대한 불복종 행위(Insubordinate Conduct toward Warrant Officer Noncommissioned Officer or Petty Officer)

UCMJ 제91조는 ①준사관, 부사관 또는 하사관을 폭행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②합법적 명령을 고의로 불복종하는 경우 ③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장교를 업신여기거나 무례한 언어나 태도로 대하는 경우 처벌된다. 이 역시 군사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이다.²⁴⁾

(3) 제92조: 명령 또는 규정 불이행(Failure to Obey Order or Regulation)

UCMJ 제92조는 항명죄보다 넓은 범위의 명령 불복종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① 합법적인 일반 명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는 행위(합법적 명령의 존재), ② 군 구성원이 내린 합법적인 명령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복종하는 행위(명령에 대한 지식), 그리고 ③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직무유기 행위(직무 수행 유기) 등을 포함한다. 미군은 2021년 9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를 92조에 근거하여 징계하였고 총 8,400명 이상이 강제 전역하였다.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면 검찰은 다음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① 합법적인 일반 명령 또는 규칙의 존재, ② 피고인이 명령이나 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③ 피고인의 명령 복종 의무나 직무수행 의무, 그리고 ④ 피고인의 위반 사실(고의, 태만, 유책적 비효율, 결과적 실패)등이다.²⁵⁾

〈표 1〉 항명에 관한 UCMJ 조항 요약

조항	제목	상관 계급	위반의 주요 요소	최대 처벌
제90조	상관인 위임 장교에 대한 고의적 불복종	직속상관 장교	상관이 적법한 명령을 내림, 상관이 피고인의 위임 장교임, 피고인이 상관의 계급을 인지함, 피고인이 명령을 고의로 불복종함	불명에 제대, 모든 급여 및 수당 몰수, 5년 징역 (전시에는 더 엄격할 수 있음)

24) <https://www.ucmjlaw.com/what-are-article-89-and-article-91-ucmj/> (검색일: 2025.3.14.).

25) <https://www.mymilitarylawyers.com/ucmj-article-92-failure-to-obey-order-or-regulation/> (검색일: 2025.3.14.).

조항	제목	상관 계급	위반의 주요 요소	최대 처벌
제91조	준사관, 부사관 또는 하사관에 대한 불손한 행위	준사관, 부사관, 하사관	상관 폭행, 상관의 적법한 명령 고의 불복종, 상관에 대한 경멸적인 대우	상관의 계급 및 위반 행위에 따라 다름 (예: 상관인 부사관 폭행 시 불명예 제대, 3년 징역)
제92조	명령 또는 규칙 불복종	모든 군 구성원	적법한 일반 명령 또는 규칙 위반/불복종, 기타 적법한 명령 불복종 (지식 필요), 직무 태만 (고의적 또는 과실)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름 (예: 적법한 일반 명령 불복종 시 불명예 제대, 2년 징역; 기타 적법한 명령 불복종 시 불명예 제대, 6개월 징역)

출처: 저자 작성.

나. 합법적 명령의 요건

(1) 합법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정의, 요건

군인이 명령을 받았을 때, 해당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군인은 오직 합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만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UCMJ(통합군사법전)에서 정의하는 합법적 명령(lawful order)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권한 있는 지휘관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급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령된 것이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군사 임무와 관련된 명령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투 작전 수행, 군사 훈련, 행정 업무 처리를 지시하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명령으로 간주된다.²⁶⁾

(2) 위법한 명령의 기준과 예시

명령이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유일한 목표로 하거나, 범죄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명령이 범죄 행위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린 자가 해당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거나, 명령의 내용이 군사적 의무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26) <https://www.mclainmilitarylawyer.com/court-martial/military-offenses/insubordination/> (검색일: 2025.3.14.).

(3) 불법 명령에 대한 거부 의무와 사례

군법은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불복종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특히,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으로 간주되며, 군인은 이를 거부할 의무를 갖는다.

예를 들어, 1968년 미라이 학살 사건에서 켈리 중위는 자신의 범행을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은 “자동 기계”가 아니며, 민간인 학살, 고문, 전쟁범죄와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Ford, 2017).²⁷⁾

다. 불법 명령 복종에 대한 책임

상급자의 명령이 불법적인 경우 하급자의 복종 책임도 크다. 특히,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형성된 국제법적 기준은 하급자가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상급자의 명령 준수를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Insko, 2003).²⁸⁾

3. 윤리적 요인: 도덕적 항명

군대 내 항명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인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양심적 판단이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수반한다. 불법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명령에 직면했을 때, 군인은 조직에 충성하고 명령에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 양심을 택할 것이냐 사이에서 극도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가. 불법 명령에 대한 도덕적 저항 의무

전쟁 범죄나 인권 침해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명령에 대해, 군인 개인 역

27) Ford, J., “When can a soldier disobey an order?”, *War on the Rocks*. July 24. 2017. <https://warontherocks.com/2017/07/when-can-a-soldier-disobey-an-order/> (검색일: 2025.3.14.).
 28) Insko, J. B. “Defense of Superior Orders Before Military Commissions.”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13, (2003). pp.389-418.

시 저항할 책임을 갖는다. 군법은 적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을 기본으로 하지만,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의무 역시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군인으로서의 복종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3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가혹행위 사건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제372군사경찰중대 소속 미군 병사들은 포로들을 학대했고, 이중 11명의 군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가운데 찰스 그레이너 상병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비윤리적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스스로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 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일깨워준다.

뿐만 아니라, 아부그라이브 수감자 학대 사건은 미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2004년 4월 공개된 수감자 학대 사진들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Bartone, 2008).²⁹⁾

이 사례는 병사가 불법 명령에 복종하고 도덕적 책임을 저버릴 경우, 그 피해가 단순히 개인이나 부대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신뢰와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군 조직에서는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건설적 반대, 이른바 충성스러운 반대(loyal dissent) 가 반드시 보장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나. 항명과 내부고발

불법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명령에 직면했을 때, 항명이나 내부고발을 선택한 군인은 동료와 조직으로부터 배제되고 고립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극심한 희생을 감안할 때, 군 조직은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군 내부고발자보호법(Military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이다. 이 법은 특히 보복 금지 조항을 통해, 고발자가 상관이나 동료로부터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한다.

2004년 아부그라이브 수감자 학대 사건에서 조 다비(Joe Darby) 병장이 이러한 내부고발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학대 행위를 외부에 보고함으로써,

29) Bartone, p. T. "Lessons of Abu Ghraib: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Prisoner Abuse in Military Operations."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October 31, (2008).

군의 공식적 보호를 받았다.

다. 도덕적 항명과 헌법

군인의 윤리적 판단은 불법적 명령과 충돌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8년 미라이 학살 사건이다. 당시 윌리엄 캘리 중위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라”는 상관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변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군대 윤리의 몰락’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후 미군은 군인 대상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인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미군 장교는 임관할 때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방어하기 위해 복무하겠다”고 서약한다. 이는 군인의 최종 충성 대상이 상관 개인이 아니라 법과 헌법임을 명확히 보여준다(Ford, 2017).³⁰⁾

4. 상황적 요인

항명 행위는 단순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넘어, 군 작전 현장의 극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가. 조직적 맥락과 네트워크 영향

항명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다. 군인이 속한 공식적 군사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예를 들면 친구, 가족, 종교, 사회 단체—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군대 내 공식 지휘 체계와 비공식 네트워크가 서로 중첩될 때, 장교들이 항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긴장이 생긴다고 한다(Hundman & Parkinson, 2019).³¹⁾ 특히 항명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첫째, 군인이 군사 계층 내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30) Ford, J., “When can a soldier disobey an order?”, *War on the Rocks*. July 24, 2017. <https://warontherocks.com/2017/07/when-can-a-soldier-disobey-an-order/> (검색일: 2025.3.14.).

31) Hundman, E., & Parkinson, S. E. “Rogues, degenerates, and heroes: Disobedience as politics in military organiz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5(3), (2019), pp.645–671.

둘째, 그 공식적 계층을 통해 명확한 명령을 받고 있고,

셋째, 그 명령이 군인이 속한 비공식 네트워크(예: 친구, 종교, 단체)에서 기대하는 정체성이나 가치와 충돌할 때이다.

예를 들어, 상관의 명령이 군인의 종교적 신념과 직접 충돌하는 경우, 군인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결과 항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해군 소속 에디 갤러거 상사는 이라크 전쟁 중 민간인과 포로에 대한 부적절한 폭력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부하들이 내부 고발자로 나선 것은, 네이비 실(SEAL) 팀원으로서 지녀야 할 충성심과 도덕적 책임감 사이의 이중적 정체성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³²⁾ 이 사건에서는 특히 네이비 실 내부의 ‘침묵의 규율’—즉, 부대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와 비공식 조직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다. 부대원들은 명령 체계에 복종하는 군인으로서의 역할과, 도덕적 행위자로서 전쟁 범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책임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다. 결국 내부 고발에 나선 이들은 ‘침묵의 규율’을 깨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나. 정치적 개입과 항명의 복잡성

1977년, 존 싱글러브 소장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간주되어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사건은 군사적 전문성과 정치적 결정 사이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군 지휘관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 명령에 반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비슷한 맥락에서, 2017년 에디 갤러거 상사는 이라크 모술에서 ISIS 포로 살해 혐의로 2019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군은 그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를 추진했으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절차가 중단되었고, 이에 반발한 해군장관 리처드 스펜서는 결국 해임되었다. 이 사건은 군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정치적 개입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³³⁾ 이러한 정치적 개입 사례는 군 내부의 징계 시스템과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예컨대, 2023년 7월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은

32) “군인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단비뉴스』. (2024.2.11.).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94> (검색일: 2025.3.14.).

33) “Despite Trump support, Navy board may strip Eddie Gallagher of SEAL status.” 『NPR』(2019.11.20.). <https://www.npr.org/2019/11/20/781340523/despote-trump-support-navy-board-may-strip-eddie-gallagher-of-seal-status> (검색일: 2025.3.14.).

군과 정치 권력 간 상호 존중과 권력 분립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군대는 민간 정부의 지휘 아래 있어야 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며, 이 원칙이 흔들릴 경우 군의 자율성과 내부 규율이 훼손되어 국가안보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군과 정치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강화와 함께, 군인들의 윤리 의식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 전투 스트레스

전투 스트레스는 항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극심한 전투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정보 부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명령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 항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 병사들은 열악한 작전 환경과 지속적인 사기 저하 속에서 집단적으로 전투 거부(combat refusal)를 일으켰으며,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에 100건이 넘는 항명 사례가 보고되었다. 대표적으로 미라이 학살 사건은 정보 부족과 민간인·적군의 식별 어려움, 그리고 전투 피로 등으로 인해 법적·윤리적 기준의 적용이 흐려진 사례로 해석된다.

또한, 2004년 이라크 전쟁 중에는 미 육군 343대대 병사 18명이 연료 보급을 위한 호송 작전 수행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운송 차량의 정비 부족, 방탄복 및 호위 부족을 이유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작전 준비 부족과 위험한 작전 환경은 병사들의 심리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전투 의지를 저하시켜 항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라.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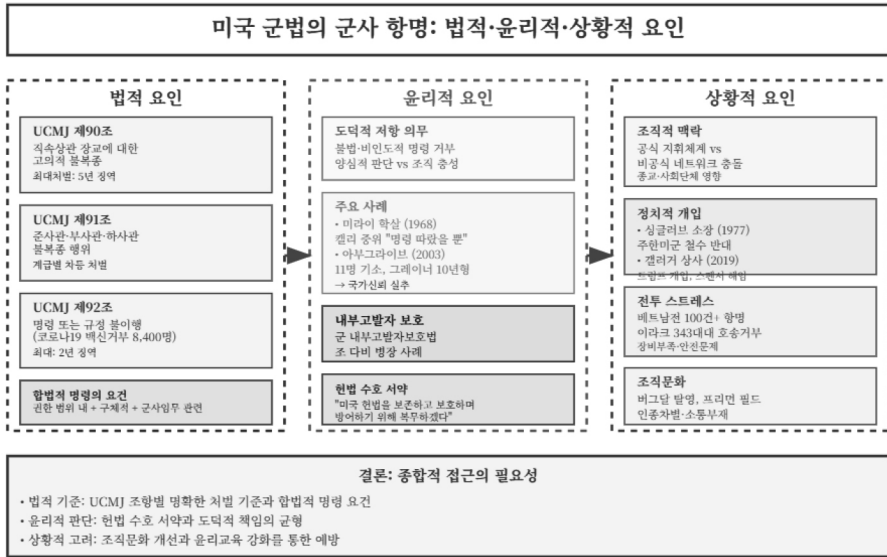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발생한 보우 버그달 병장의 탈영 사건(2009년)은 부대 내에서의 인간관계 악화와 극심한 고립감이 명령 체계 이탈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군 조직문화의 취약성과 지휘관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항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인종 차별 역시 항명의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다. 1945년 프리먼 필드 사건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장교들이 백인 전용 장교 클럽 출입을 거부하며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집단적 저항을 표출하였다. 이는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항명이라는 형태로 외부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더불어, 군대 내 언어폭력, 갈등, 규율 위반, 소통 부재 등은 심리적 압박과 분노를 유발하여 부정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은 항명 행위를 촉진하는 복합적 배경으로 작용하며, 군사 작전의 외적 조건만으로 항명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 내부의 리더십 방식, 부대 문화, 소통 구조 등 조직 내부의 문제점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항명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위에서 고찰한 이론을 바탕으로 미군의 항명 사례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법적, 윤리적, 그리고 상황적 요인을 설정한다. 이 분석의 틀은 복잡한 항명 문제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준다. 항명의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항명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스트레스, 정보의 불확실성, 조직문화 요인을 분석한다.

〈그림 1〉 분석의 틀



III. 항명 사례 분석

미국 군대 내 항명 사례를 법적 요인, 윤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1. 윌리엄 캘리 중위의 맹목적 복종 사건

1968년 3월 16일, 윌리엄 러스티 캘리 중위가 지휘하는 미국 23사단 찰리중대 병사들은

베트남 팡응아이성의 미라이 마을을 습격했다. 마을을 점령한 후, 캘리는 부하들에게 남은 민간인들을 모아 도랑에 몰아넣고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504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항명은 반역이고 절대 복종은 미덕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맹목적 복종이 낳은 비극이었다. 이 사례는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른 복종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군인의 법적 및 윤리적 의무가 상황적 요인(전장 스트레스, 모호한 명령)과 어떻게 충돌하고 무시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드러낸다. 이는 UCMJ 상의 합법적 명령 복종 의무와 불법 명령 거부 의무가 전장 상황과 만나 발생한 비극이다.

법적으로 캘리 중위는 UCMJ 제118조 (살인)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사 법원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었으므로 복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으며, 윌리엄 캘리 중위는 무고한 베트남 민간인 22명을 학살한 혐의로 처벌했다.³⁴⁾

윤리적으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령 복종 의무는 국제법과 전쟁법의 기본 원칙을 넘을 수 없다. 캘리 중위가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행위는 명백한 전쟁 범죄로 개인적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군 장교들에게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전쟁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보고해야 하는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가 존재한다.

상황적으로는 전장의 극심한 스트레스, 불확실한 정보, 적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병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미군은 전투의 성공을 적의 사망자 수로 측정하도록(Body-count) 지시를 받았다.³⁵⁾ 또한 군인들이 사전 식별이나 충분한 정당화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자유 사격 구역(free-fire zones) 정책은 민간인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무고한 희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2. 휴 톰슨 주니어의 명예로운 항명 사건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미군 헬기 조종사 휴 톰슨 주니어는 미라이 마을에서 진행 중이던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고, 미군을 향해 발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34) 최윤필. “미라이 학살 공식 보고서들이 감춘 진실들,” 『한국일보』 (2024.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712530000539> (검색일: 2025.3.14.); Justia. “William L. Calley, Jr., Petitioner-appellee, Cross-appellant, v. Howard H. Callaway, Etc., et al., Etc., respondents-appellants, Cross-appellees, 519 F.2d 184 (5th Cir. 1975).”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2/519/184/85598/> (검색일: 2025.3.14.).

35) Maxwell, Gus. “Making Sense of the My Lai Massacre.” (Regis University, 2011). <https://epublications.regis.edu/cgi/viewcontent.cgi?article=1542&context=theses> (검색일: 2025.3.14.).

까지 민간인들을 보호했다(김경준, 2024).³⁶⁾ 이 사례는 켈리 중위 사례와 동일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의 강한 윤리적 신념과 용기가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정당한 불복 증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윤리적 의무를 택함으로써, 상황적 비극을 막아낸 ‘명예로운 항명’의 전형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톱슨의 항명은 군법상 명령 불복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명령에 대한 항명은 국제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은 전쟁 윤리와 규범 준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

윤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은 군인이 부당하거나 비윤리적인 명령을 받았을 때 왜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감에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군인의 윤리적 의무가 상부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보호라는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사례이다.

상황적으로 베트남전의 혼란과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이 만연했던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비윤리적 명령과 집단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던 때 개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군인의 도덕적 행동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군 윤리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 보위 버그달 탈영 사건

보위 버그달(Bowe Bergdahl) 상병은 200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탈영하여 탈레반에 포로로 잡혔다가 5년 후 석방되었다. 이 사례는 직접적인 명령 거부와는 다른 유형의 불복종 행위인 탈영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 조직 문화적 문제, 그리고 상황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UCMJ 제85조(탈영) 및 제99조(적전에서의 비행)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전우들을 위험에 빠뜨린 윤리적 문제, 그리고 개인의 심리 상태 및 부대 환경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얽혀 있다.

법적으로 그는 UCMJ 제85조(탈영) 및 제99조(적전에서의 비행)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인정하고 불명예 제대 등의 처벌을 받았다.³⁷⁾

윤리적으로 그의 행위는 전우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미군은 그를 찾기 위한 작전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수색 과정에서 병사들이 부상 또는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6) “명예로운 항명과 뒤뜰린 상병하복... 참다운 군인정신의 조건 [문지방].” 『한국일보』 (2024.12.17.).

37) Bowe Bergdahl.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Bowe_Bergdahl (검색일: 2025.3.14.).

상황적으로 버그달은 부대 내 부실한 지휘체계와 부당한 처우, 고립감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초소를 이탈했다고 정신적 불안 상태를 주장했다. 그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소속 부대의 리더십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부대 내 지속적인 불화, 전투 스트레스, 외딴 지역에서의 고립감이 그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에디 갤러거 내부 고발 사건

에디 갤러거(Eddie Gallagher) 상사는 Navy SEAL 해군 특수부대 대원으로 훈장을 받은 영웅이었으나 2017년 이라크 모술 전투 중 전쟁 ISIS 포로 살해 혐의 등으로 소대원으로부터 내부 고발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사례는 전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지휘관의 비윤리적/불법적 행위와 이에 대한 부하들의 내부 고발이라는 불복종 행위, 그리고 이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얽히면서 법적 판단과 조직 내 규율이 복잡하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내부 고발은 상관의 비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조직 내 명령/규율 체계에 대한 이의 제기이자 불복종 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그는 포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신과 함께 사진을 찍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 그의 징계는 철회되었다.³⁸⁾ 이 과정에서 당시 해군 장관 리처드 스펜서는 갤러거의 트라이던트 박탈 검토에 관한 대통령의 개입에 반발하다가 해임되었다. 갤러거 사건은 군 내부의 규율 시스템과 정치적 개입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윤리적으로 전쟁 포로 학대는 명백히 비양심적 행위이다. 그의 소대원들은 그를 내부 고발하고 증인으로 나섰다. 갤러거 사건은 전장에서도 윤리가 존재하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 법규 준수 의무가 우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황적으로 모술 전투는 매우 치열했으며, 갤러거의 강압적인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소대원들의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항명 행위가 나타났다.

5. 빌리 미첼 항명 사건

빌리 미첼(Billy Mitchell)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공군력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항

38) Spoehr, T., Wood, D., Venable, J., & Carafano, J. J. "The case of Navy SEAL Eddie Gallagher: Trusting the military justice system and its essential role in national security." (2019, December 6).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defense/commentary/the-case-navy-seal-eddie-gallagher-trusting-the-military-justice-system-and-its> (검색일: 2025.3.14.).

공대 장교로 공군의 독립과 공군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다 1925년 반항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³⁹⁾ 빌리 미첼은 폭격 실험에서 독일 전함을 성공적으로 격침하며 항공기의 군사적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당시 군 지도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 사례는 군 조직 내 경직된 문화와 상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고위 장교의 공개적인 비판 및 이의 제기라는 불복종 행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진 경우이다. 이는 UCMJ 제96조(군 복무에 불명예스러운 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 국가 안보에 대한 소신과 조직 내 규율 준수 사이의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군종 간의 이해관계와 보수적인 조직 문화라는 상황적 요인이 결합된 사례이다.

법적으로 그는 군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혐의로 UCMJ 제96조 (군 복무에 불명예스러운 행위) 위반으로 군사 재판을 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

윤리적으로 그의 행위는 군 내부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그의 신념과 혁신적인 주장은 결국 미래의 군사력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충성스러운 반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상황적으로 당시 육군과 해군 우세의 조직문화로 인해 공군에 대한 군사 혁신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군부 지도층의 지휘방침과 마찰을 빚었으나 항공력의 중요성과 군사혁신에 공헌하여 사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장 계급을 추서했다.

6.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항명사건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한국 전쟁 중 트루먼 행정부의 정책과 공개적으로 대립하여 해임되었다.⁴⁰⁾ 이 사례는 군 최고 지휘관이 문민 통제 원칙을 위반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불복종함으로써 해임된 사건이다. 이는 군인의 법적/헌법적 의무(문민 통제 복종)와 개인적인 전략적 판단 및 윤리적 소신(전쟁 승리) 사이의 충돌, 그리고 정치 지도부와 군사 지도부 간의 전략적 이견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결합된 사례이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가지며, 맥아더 장군의 공개적인 정책 비판은 상관의 합법적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미국 헌법의 군대에 대한 민간 정부의 문민 통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9) Swopes, B. R. "The Court Martial of Billy Mitchell. This Day in Aviation." (2016). <https://www.thisdayinaviation.com/tag/the-court-martial-of-billy-mitchell/> (검색일: 2025.3.14.).

40) Wikipedia contributors. "Relief of Douglas MacArthur." https://en.wikipedia.org/wiki/Relief_of_Douglas_MacArthur.

윤리적으로 이 사건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문민 통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맥아더 장군의 해임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맥아더의 해임은 문민 통제 원칙(civilian control)을 확립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상황적으로 맥아더 장군은 북한을 넘어 중국 본토까지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확대를 우려하여 제한적인 전쟁 수행을 원했다. 트루먼의 결정은 세계대전 방지에 기여했으나 전쟁 종결에 실패했다.

7. 제독들의 항명 사건

제독들의 항명(Revolt) 사건은 1949년 해군이 국방부의 예산 삭감과 공군력 중심의 전략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사건이다. 특히, USS United States 항공모함의 취소와 관련하여, 군 내 민간 통제의 문제와 군종 간의 경쟁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⁴¹⁾ 당시 공군 장관 스투어트 사이밍턴(Stuart Symington)은 공군의 전략 폭격 임무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의 항공모함 개발을 강하게 반대했고, 해군은 B-36 폭격기의 성능을 비판하고 전략폭격 개념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갈등은 결국 의회 청문회로 이어졌고, 공군의 입장이 관철되었다.⁴²⁾ 이 사례는 맥아더 사건과 유사하게 군의 정책 결정에 대한 고위 장교들의 집단적인 불복종(공개적 비판) 형태를 띠며, 군종 간의 경쟁과 예산 배분 문제라는 상황적 요인이 문민 통제 원칙과 군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 경우이다.

법적으로 이들의 공개적인 반대는 문민 통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을 야기했으며, 결국 해군 작전 사령관(CNO)이 해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 고위 장교들의 공개적인 반발은 민간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 정부의 군사 통제 권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재검토를 촉발하였다.

윤리적 차원에서 군인의 충성 대상이 정부의 정책과 명령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전문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바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했다. 군인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민간 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시험하였다.

41) Wikipedia. "Revolt of the Admirals.", https://en.wikipedia.org/wiki/Revolt_of_the_Admirals (검색일: 2025.3.14.).

42) Wolk, Herman S. "Revolt of the Admirals." *Air & Space Forces Magazine*, 1 May 1988, <https://www.airandspaceforces.com/article/0588revolt/>. (검색일: 2025.3.14.).

상황적 맥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긴장완화와 국방 예산 축소 상황 속에서, 전략 폭격기 중심의 공군 우선 전략과 해군의 항공모함 중심 전략 간의 첨예한 충돌로 국방 예산 배분과 군종 간 경쟁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군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정치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8. 밀리 합참의장 항명 사건

2020년 5월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에 시위 진압 명령을 내렸다. 당시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미군 지휘관들에게 지휘서신을 보내 “미군의 임무는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수정헌법 가치(종교·언론·청원·출판·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⁴³⁾

밀리 의장은 지난 2023년 9월 전역식에서,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한다’는 전역사를 남겼다.⁴⁴⁾ 밀리 의장의 말은 미국 육군 교리 ‘충성’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군의 근본적 의무가 충돌했을 때, 최고 지휘관이 헌법을 우선시하는 불복종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 경우이다. 이는 법적/헌법적 의무(헌법 수호)와 윤리적 충성 대상(개인 vs 헌법), 그리고 사회적 갈등 및 정치적 압박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법적으로 밀리 합참의장의 행동은 미국 수정헌법에 명시된 시민권과 자유 보호라는 군의 궁극적 책무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했다.

윤리적으로 밀리 의장은 군의 충성 대상이 개인(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임을 분명히 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에 기반한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미 육군 교리의 ‘충성’ 개념을 바탕으로, 지도자가 아닌 가치에 대한 충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윤리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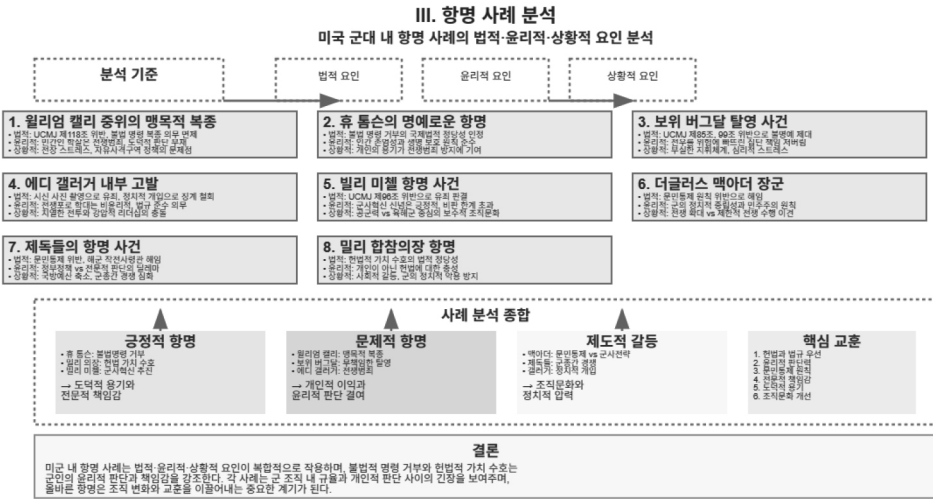
상황적으로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밀리 의장은 군대가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개인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고, 군의 정치

43) 권혁철, “명령에 따랐을 뿐”이란 변명, ‘상관’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179580.html> (검색일: 2025.3.14.).

44) “우리는 왕이나 여왕, 폭군이나 독재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며, 독재자가 되려는 누구에게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개인에게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우리는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고, 미국이라는 이념에 충성을 맹세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적 중립과 헌법 수호라는 본질적 임무를 재확인했다.

〈그림 2〉 항명 사례 분석 요약



IV. 종합 분석과 정책 제언

1. 종합 분석

이 연구는 미국 군대 내 항명 사례들을 법적, 윤리적, 상황적 요인을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항명은 단순한 군율 위반을 넘어, 개인의 도덕적 신념, 가치관, 그리고 당시의 군의 문화, 전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법적 의무, 윤리적 판단, 그리고 복잡한 상황적 요인들(전투 스트레스, 조직 문화, 정치적 개입 등)이 상호작용하며 불복종 행위의 발생 여부, 형태, 그리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윌리엄 캘리 중위의 미라이 학살 사건은 상급자의 비윤리적인 명령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에만 복종 의무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휴 톰슨 주니어의 명예로운 항명은 군인의 윤리적 판단과 양심적 행동이 명령 복종보다 우선할 때 전쟁범죄를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다.

보위 버그달 상병 사건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탈영이라는 극단적 상황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며, 전투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비윤리적 항명 행동을 방지 하려면 명확한 윤리적 기준과 통제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장에서의 극단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압박은 항명의 주요 상황적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용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에디 갤러거 사건은 치열한 전장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윤리적 기준과 동료 간 충성심, 그리고 정치적 개입이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등 정치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군 지휘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빌리 미첼 사건은 혁신적이고 건설적인 주장이 경직된 군 조직과 충돌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군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충성스러운 반대와 조직내 비판과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해임 사건과 제독들의 반란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 통제 원칙은 민주적이고 법치적인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며, 이를 위반하는 항명 행위는 군 조직의 신뢰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 사건은 군의 충성이 특정 개인이 아닌 헌법과 가치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 수호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항명이라는 행위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 조직문화, 시대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표 2〉 주요 항명 사례 분석 결과

사건명	발생 시기 및 장소	법적 쟁점	윤리적 쟁점	상황적 쟁점	시사점
미라이 학살 사건 윌리엄 캘리 중위 맹목적 복종 사례	1968년, 베트남	UCMJ 제118조 위반, 불법 명령 복종 의무 면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의 비윤리성, 명령 복종 vs 국제법 준수	전장 스트레스, Body-count 문화, 자유 사격 구역 정책	비윤리적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의 위험성
휴 톰슨 주니어의 명예로운 항명 사건	1968년, 베트남	불법/비인도적 명령 거부 의 정당성	군인의 도덕적 의무 우선, 인간 존엄성 보호	미라이 학살 현장 목격, 비윤리적 명령 만연	부당한 명령에 대한 윤리적 저항의 중요성
보위 버그달 상병 탈영 사건	2009년, 아프가니스탄	탈영 및 적전에서의 비행	전우 위험 초래, 포로 생활 고통과 책임	부실한 지휘 체계, 심리적 불안, 외딴 지역 고립	군인의 책임 의식과 팀워크 중요성
에디 갤러거 내부고발 사건	2017년, 이라크	전쟁 범죄 혐의 (무죄), 시신 촬영 혐의 (유죄)	전쟁 포로 학대의 비윤리성, 팀 충성심 vs 법규 준수	격렬한 모술 전투, 강압적 리더십 스타일	전장 윤리 기준 준수, 내부 고발의 의미, 정치적 개입 문제

사건명	발생 시기 및 장소	법적 쟁점	윤리적 쟁점	상황적 쟁점	시사점
빌리 미첼 사건	1925년, 미국	군 복무에 불명예스러운 행위	국가 안보 신념과 공개 비판의 한계	육/해군 우세 문화, 공군력 인식 부족	혁신적 주장의 가치, 건강한 비판 문화 필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해임 사건	1951년, 한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 상관 명령 불복종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문민 통제 원칙 중요성	한국 전쟁 전략 차이, 행정부 정책과의 갈등	문민 통제 원칙 확립 및 중요성
제독들의 항명 사건	1949년, 미국	군 내부 정책 공개 반대의 적절성 여부	정부 정책 vs 전문적 판단, 문민 통제 원칙과의 관계	국방 예산 감축, 공군 vs 해군 전략 갈등	전문성 기반 의견 개진의 한계, 문민 통제 원칙 유지
밀리 합참의장 항명 사건	2020년, 미국	대통령 명령 vs 헌법적 가치 수호 의무	개인 충성 vs 헌법 및 국가 충성,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갈등 상황, 대통령의 시위 진압 명령	군의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 수호 중요성 재확인

2.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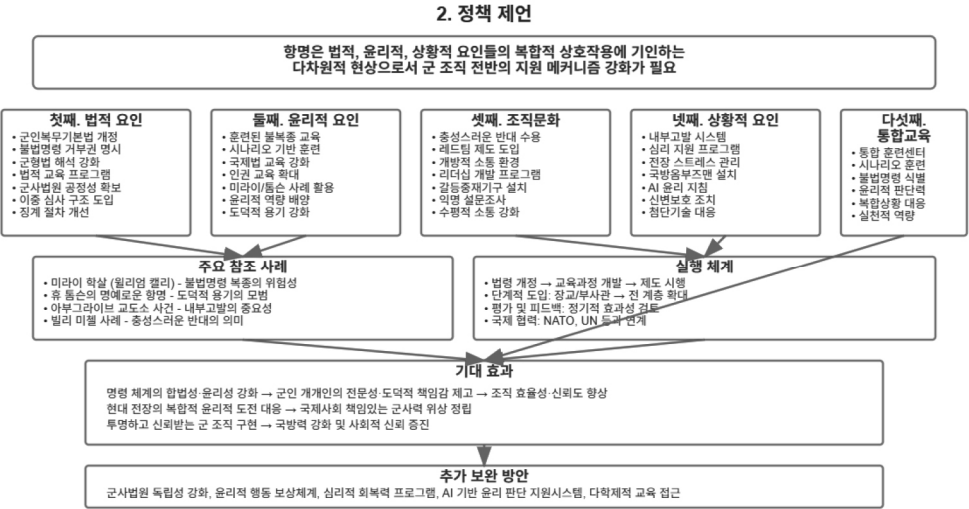
항명은 법적, 윤리적, 상황적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 조직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법적, 윤리적, 상황적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 군대의 질서 유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처방을 제안한다.

첫째, (법적 요인 관련, 법령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군사법원 공정성 확보) 현행 「군인 복무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 더하여,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권과 보고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는 미라이 학살 사건에서 불법적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른 윌리엄 켈리 중위의 사례가 초래한 비극을 반면교사로 군인 개개인이 위법한 명령을 식별하고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준다. 또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부하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형법」 제44조(항명) 명령위반죄(제47조) 관련 해설서와 양형 기준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 반인륜적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은 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따른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관의 명령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한다.

명확하고 합법적인 명령 체계를 제도화해야 하며, 나아가 장교와 하사관의 법적 지식 및 윤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교 및 부사관 양성 과정과 각급 부대 보수교육 과정에 명령을 내리는 자의 법적 책임 및 윤리적 판단에 대한

리더십 내용을 강조하고, '위법성 판단 및 지휘조치' 과목 이수를 규정해야 한다. 교육 방법은 미라이 학살과 휴 톰슨의 명예로운 항명, 아부그라이브 고도소 사건 등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토론식, 시나리오 기반 훈련(Scenario-Based Training)으로 구성하여, 장병들이 복잡한 상황에서 윤리적·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실천적 역량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 정책 제언



군사법원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종 심사 구조를 도입한다. 항명죄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주요 군사재판에 민간 법조인이 배심원 또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심사 구조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담보한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군사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명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여 군 내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지휘관의 징계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항고 절차를 국방부 소속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 요인 관련, 훈련된 불복종 교육, 인권 교육, 미라이/톰슨 사례 시사점) 군인들이 맹목적 복종을 지양하고 명령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식 및 윤리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된 불복종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 마크 밀리(Mark Milley)는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훈련된 불복종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Gino, 2018).⁴⁵⁾ 한국군도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군인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명령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의

윤리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을 하자면 장교·부사관 양성 과정 및 지휘관 보수 교육에 훈련된 불복종 교리를 정식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해임 사례를 포함한 항명 사건의 경위,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분석하고, 이를 교육자료화해야 한다. 복종의 범위, 명령의 합법성 판단, 이의제기 가능성 등을 명시한 종합지침을 마련하여, 지휘관과 장병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군과 민간인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의 사격 명령, 상급 부대의 명령과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 등 실제 딜레마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훈련(SBT)과 토론식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윤리적 요인 관련, 미라이, 아부그라이브 사례 시사점) 국제법 및 인권 교육을 심화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군사적 행동 규범을 내재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군사적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전쟁 범죄 및 인권 침해 관련 국제법 규정을 명확히 교육하고, 불법 명령 거부 의무를 강조하여 군인들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황적/조직 문화 요인 관련, 충성스러운 반대 수용, 빌리 미첼 사례 시사점) 조직 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충성스러운 반대’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부하들이 상급자에게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개방적 소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리더십 부재나 부조리(보위 버그달, 에디 깬러거 사례 시사점)로 인한 불만이 항명 등 부정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주요 작전 계획 수립 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취약점을 분석하는 ‘레드팀(Red Team)’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지휘관이 부하의 건의 및 이의 제기를 묵살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방적 소통을 리더십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한다. 정기적인 익명 지휘관 리더십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갈등 상황이 명령 불복으로 이어지기 전,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 갈등중재 기구(가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과중한 업무 괴롭힘 등으로 내부 스트레스가 항명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전적 고충 신고 채널을 보장해야 한다.

(상황적/리더십 요인 관련,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장교 및 하사관 대상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부대 내 수평적, 수직적 소통 체계를 정비하여 상호 신뢰의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지휘관의 윤리적 리더십과 병사들과의 소통 능력은 부대원의 사기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보위 버그달 사례 시사점), 이는 항명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상황적 요인 관련/내부 고발 시스템), 아부그라이브, 에디 깬러거 사례 시사점) 위

45) Gino, F. How to be a rebel leader. Harvard Business School. 2018.
<https://hbswk.hbs.edu/item/how-to-be-a-rebel-leader> (검색일: 2025.3.14.).

법 및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내부 고발 시스템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군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사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지휘계통으로부터 독립된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국방옴부즈맨 또는 감찰관실에서 전담하도록 한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따돌림, 보직 변경, 근무평점 불이익 등) 적발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상향하고, 고발자에게는 실질적인 신분 보호 조치와 포상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상황적 요인 관련/심리 지원 프로그램, 미라이, 보위 버그달, 연료보급 호송작전 거부 사례 시사점) 전투 상황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압박과 트라우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장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윤리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훈련이 필요하다(Thompson & Jetly, 2014).⁴⁶⁾ 심리적 문제가 불복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개입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황적 요인 관련, AI 윤리 지침) 첨단 기술 환경에서 미래 기술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 AI 무기 및 사이버전 관련 특수한 윤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AI 기반 명령 검증 알고리즘을 군사 작전에 적용하여 명령의 합법성과 윤리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법적/윤리적/상황적 요인 통합 교육) 단순 암기식 교육이 아닌, 불법 명령을 식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시나리오 훈련이 필요하다(O'Sullivan).⁴⁷⁾ 통합 훈련 센터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교육 시간에 시나리오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불법 명령 식별 및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복합적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력을 제고해야 한다.

상기 정책적 제언을 통해 한국군은 명령 체계의 합법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군인 개개인의 전문성과 도덕적 책임감을 제고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 전장의 복합적 윤리적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군사력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6) Thompson, M. M., & Jetly, R. "Battlefield ethics training: Integrating ethical scenarios in high-intensity military field exercise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5(1). (2014).

47) O'Sullivan, Carmel. "Training Soldiers to Disobey 'Illegal' Orders." Phys.org,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7 Mar. 2013, <https://phys.org/news/2013-03-soldiers-disobey-illegal.html>. (검색일: 2025.3.14.).

V. 결론

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군인의 항명에 대한 관심이 큰 시점에 미국 군대 내 항명 사례들을 법적, 윤리적, 상황적 요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다양한 미군의 항명 사례 분석을 통해, 항명은 단순한 군율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의 도덕적 신념, 조직 문화, 그리고 전쟁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결과임을 파악했다. 즉, 항명은 개인의 도덕적 신념, 조직 문화, 전쟁의 극한 상황, 리더십 부재, 정치적 개입 등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성의 결과이다.

미라이 학살 사건과 이에 맞서 명령에 불복종한 휴 톰슨 주니어 준위의 명예로운 항명 사건은 동일한 전장 상황에서도 비윤리적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의 위험성과 윤리적 저항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동일한 상황적 비극 속에서도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법적/도덕적 책임이 어떻게 상반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보위 버그달 사건과 에디 깬러거 사건은 전투 스트레스, 리더십 부재, 조직 내부의 문제, 그리고 외부 정치적 개입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개인의 심리 상태나 윤리적 판단과 결합되어 항명 또는 불복종 관련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빌리 미첼 사건과 제독들의 반란은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충성스러운 반대’가 법적/윤리적 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군 내부에 건강한 비판 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해임 사건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사건은 군의 최고 지휘부에서 발생하는 불복종 사례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및 문민 통제 원칙의 확고한 준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미군에서 항명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전장 상황, 정치적 환경, 그리고 군법의 해석과 적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군대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군도 다각적인 관점에서 항명 문제를 이해하고, 향후 법령 개선, 군 교육 강화, 리더십 훈련, 내부 투명성 확대, 보다 성숙한 군 조직 문화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가치는 미국 군대 내 항명 사례들을 법적, 윤리적, 상황적 요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항명을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군 조직문화와 정치, 리더십 등 포괄적 시각으로 바라본데 있다. 실무적으로는 충성스러운 반대나 건설적 불복종 개념을 통해 군 조직의 건강성과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로 항명을 재조명한 점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주로 문헌 분석에 의존하였으며, 미국 군대의 사례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군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항명 현상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혁철, “명령에 따랐을 뿐”이란 변명, ‘상관’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179580.html> (검색일: 2025.3.14.).
- 김경준, “명예로운 항명과 뒤틀린 상명하복… 참다운 군인정신의 조건 [문지방].” 『한국일보』 (2024.12.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6020001051> (검색일: 2025.3.14.).
- 김주영. “[따져보니] 부당한 명령에 ‘항명’ 가능?...기준과 판례는”. TV조선, (2024.12.10.)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10/2024121090315.html (검색일: 2025.3.14.).
- 임경민, “군인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단비뉴스』. (2024.2.11.).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94> (검색일: 2025.3.14.).
- 최윤필. “미라이 학살 공식 보고서들이 감춘 진실들,” 『한국일보』 (2024.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712530000539> (검색일: 2025.3.14.).
- Bartone, p. T. “Lessons of Abu Ghraib: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Prisoner Abuse in Military Operations.”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October 31, (2008).
- Bowe Bergdahl.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Bowe_Bergdahl (검색일: 2025.3.14.).
- CORE CRIMINAL LAW SUBJECTS, <https://www.armfor.uscourts.gov/digest/IIIA14.htm> (검색일: 2025.3.14.).
- Despite Trump support, Navy board may strip Eddie Gallagher of SEAL status.” 『NPR』(2019.11.20.). <https://www.npr.org/2019/11/20/781340523/despite-trump-support-navy-board-may-strip-eddie-gallagher-of-seal-status> (검색일: 2025.3.14.).
- Evans, “How Tuskegee Airmen fought military segregation with nonviolent action,” <https://www.history.com/news/tuskegee-airmen-impact-civil-rights-movement> (검색일: 2025.3.14.).
- Ford, J., “When can a soldier disobey an order?”, *War on the Rocks*. July 24, 2017. <https://warontherocks.com/2017/07/when-can-a-soldier-disobey-a>

- n-order/ (검색일: 2025.3.14.).
- Ford, J., “When can a soldier disobey an order?”, *War on the Rocks*. July 24. 2017. <https://warontherocks.com/2017/07/when-can-a-soldier-disobey-a-n-order/> (검색일: 2025.3.14.).
- Gino, F. How to be a rebel leader. Harvard Business School. 2018. <https://hbswk.hbs.edu/item/how-to-be-a-rebel-leader> (검색일: 2025.3.14.).
- History, “Black soldiers stage sit-in at Fort Hood.”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black-soldiers-sit-in-fort-hood-43> (검색일: 2025.3.14.).
- Human Rights First. “Fact sheet: “Following orders” is no defense to war crimes: The duty to disobey illegal military orders.” (2016.8.30.). <https://humanrightsfirst.org/library/fact-sheet-following-orders-is-no-defense-to-war-crimes-the-duty-to-disobey-illegal-military-orders/> (검색일: 2025.3.14.).
- Hundman, E., & Parkinson, S. E. “Rogues, degenerates, and heroes: Disobedience as politics in military organiz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5(3), (2019), pp.645-671.
- Insko, J. B. “Defense of Superior Orders Before Military Commissions.”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13, (2003). pp.389-418.
- Insubordination, <https://www.mclainmilitarylawyer.com/court-martial/military-offenses/insubordination/> (검색일: 2025.3.14.).
- Justia. “William L. Calley, Jr., Petitioner-appellee, Cross-appellant, v. Howard H. Callaway, Etc., et al., Etc., respondents-appellants, Cross-appellees, 519 F.2d 184 (5th Cir. 1975).”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2/519/184/85598/> (검색일: 2025.3.14.).
- Kantor, J. H. “10 heroic acts of bravery that involved disobeying a direct order.” Listverse. (2015, September 13). <https://listverse.com/2015/09/13/10-heroic-acts-of-bravery-that-involved-disobeying-a-direct-order/> (검색일: 2025.3.14.).
- Kaurin, p. S. “Professional disobedience: Loyalty and the military.” *The Strategy Bridge*. (2017, August 8).
- Lyle, “Tuskegee Airman broke color barriers through civil disobedience.” <https://www.af.mil/News/Article-Display/Article/111659/tuskegee-airman-broke-color-barriers-through-civil-disobedience/> (검색일: 2025.3.14.).

- Maurer, D. Can the Military Disobey Orders in the SEAL Team 6 Hypothetical?, *Lawfare*. July 8. 2024.
- Maxwell, Gus. "Making Sense of the My Lai Massacre." (Regis University, 2011). <https://epublications.regis.edu/cgi/viewcontent.cgi?article=1542&context=theses> (검색일: 2025.3.14.).
-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Jackie Robinson and the "Double V" Campaign", <https://nmaahc.si.edu/explore/stories/jackie-robinson-and-double-v-campaign> (검색일: 2025.3.14.).
- National Park Service, "The Catalyst of Change: Understanding Mutiny", <https://www.nps.gov/poch/learn/historyculture/the-mutiny-trial.htm> (검색일: 2025.3.14.).
- O'Sullivan, Carmel. "Training Soldiers to Disobey 'Illegal' Orders." Phys.org,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7 Mar. 2013, <https://phys.org/news/2013-03-soldiers-disobey-illegal.html>. (검색일: 2025.3.14.).
- Samuel p. Huntington, *Soldier and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MA: Belknap Press, 1957)
- Sawyer, Kaylyn L. "A Divided Front: Military Dissent During the Vietnam War." *The Gettysburg Historical Journal* Vol. 16. No. 9. (2017).
- Schlueter, D. A. "Reforming Military Justice: An Analysis of the Military Justice Act of 2016." *St. Mary's Law Journal*. (2017.8.30.)
- Shanks Kaurin, p. "Professional Disobedience: Loyalty and the Military." *The Strategy Bridge*. (2017, August 8).
- Spoehr, T., Wood, D., Venable, J., & Carafano, J. J. "The case of Navy SEAL Eddie Gallagher: Trusting the military justice system and its essential role in national security." The Heritage Foundation. (2019, December 6).
- Swopes, B. R. "The Court Martial of Billy Mitchell. This Day in Aviation." (2016)<https://www.thisdayinaviation.com/tag/the-court-martial-of-billy-mitchell/> (검색일: 2025.3.14.).
- Thompson, M. M., & Jetly, R. "Battlefield ethics training: Integrating ethical scenarios in high-intensity military field exercise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5(1). (2014).
- UCMJ Article 92, <https://www.mymilitarylawyers.com/ucmj-article-92-failure-to->

obey-order-or-regulation/ (검색일: 2025.3.14.).

UCMJ, 90 <https://ucmj.us/890-article-90-assaulting-or-willfully-disobeying-superior-commissioned-officer/> (검색일: 2025.3.14.).

UCMJ, <https://ucmj.us/> (검색일: 2025.3.14.).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https://en.wikipedia.org/wiki/Uniform_Code_of_Military_Justice (검색일: 2025.3.14.).

Valenzuela, M. “The difference between Oath of Office, Oath of Enlistment.” Marine Corps Base Quantico News. July 30 (2015).

What are Article 89 and Article 91, UCMJ?, <https://www.ucmjlaw.com/what-are-article-89-and-article-91-ucmj/> (검색일: 2025.3.14.).

What Happens When You Disobey a Military Order?, <https://www.jordanucmjlaw.com/2023/09/what-happens-when-you-disobey-a-military-order/> (검색일: 2025.3.14.).

Wikipedia contributors. “Relief of Douglas MacArthur.” https://en.wikipedia.org/wiki/Relief_of_Douglas_MacArthur

Wikipedia. “Revolt of the Admirals.”, https://en.wikipedia.org/wiki/Revolt_of_the_Admirals (검색일: 2025.3.14.).

Wolk, Herman S. “Revolt of the Admirals.” *Air & Space Forces Magazine*, 1 May 1988, <https://www.airandspaceforces.com/article/0588revolt/>. (검색일: 2025.3.14.).

A Study on Cases of Disobedience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JaeKang, Lim

Keywords

United States Military, Disobedience, Military Law, Military Ethics, Situational Factor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phenomenon of disobedience by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cases of disobedience with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encompassing legal, ethical, and situational factors.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historical cases, it clearly demonstrates that disobedience is not simply a violation of military regulations but rather a result of the interplay of multiple factors, including the moral beliefs of individual soldiers, and wartime circumstances.

The My Lai Massacre and the case of Hugh Thompson Jr.'s honorable disobedience starkly illustrate the dangers of blind obedience to unethical orders and the importance of ethical resistance, respectively. The cases of Bowe Bergdahl and Eddie Gallagher suggest that the stresses of battlefield situations and internal organizational issues can lead to disobedience,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ethical education and leadership within the military.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a variety of elements, including individual ethical judgment, and situational context, contribute to the background of disobedience. Therefore, the Korean military should also understand the issue of disobedience from these diverse perspectives and strive to build a more mature and progressive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policy recommenda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논문투고일: 2025. 4. 30.]

[심사의뢰일: 2025. 5. 21.]

[게재확정일: 2025. 6. 23.]

러시아의 전략문화 및 군사전략의 특성과 우크라이나 침공

우평균*

- I. 서론
- II. 전략문화 개념과 이론의 전개 과정
- III. 러시아 전략문화의 기본 사고와 역사적 맥락 및 실재 개념
- IV. 러시아 군사전략의 특성과 우크라이나 침공
- V. 결론

요약

본 논문은 러시아 전략문화의 핵심적인 내용과 러시아 군사전략의 특성을 살펴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작용한 요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포괄적 개념인 전략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군사전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전략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와 비대칭 전략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전략문화는 외부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과 강대국 지위에 대한 집착이라는 두 가지 중심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략문화는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중앙집권적인 국가와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수용하는 속성이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 체제 및 현대 러시아를 관류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세기 초부터는 정권의 위기 시에 '포위된 요새'론이 등장하여 내외의 적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왔으며, 21세기 푸틴 체제하에서 강력한 대 국민 내러티브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잡았다. 러시아 군사전략은 21세기에 비대칭성, 전략적 억제 및 다영역 강압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교리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다영역 강압은 핵, 재래식 전력, 정보 영역을 총체적인 단일 구조 내에서 운영하는 포괄적인 억지 체계이다. 미래 군사전략에 대한 종합 계획인 다영역 강압에 대한 논리를 먼저 만들고, 이를 실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가 볼 때, 실패한 강압 전략이지만, 러시아의 논리 구조로 볼 때는 성공적이었다. 이와 같은 성공의 경험에 힘입어 러시아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전후에도 다영역 강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핵심어 : 러시아 전략문화, 비대칭 전략, 포위된 요새, 다영역 강압, 우크라이나 전쟁

I.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Ukraine)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the Ukraine War)이 세계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실은 러시아 같은 군사 강국이 러시아에 비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전반기까지 성행했던 제국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침략전쟁이 부활했다는 데에 있었다. 이와 더불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식 사회의 한계도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유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로 잘못된 분석과 판단에 입각해 전쟁 전 대러 협상을 추진했던 유럽(Europe) 수뇌부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쟁 발발이 초래한 충격과 더불어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로 대변되는 ‘현실주의(realism)’ 관점에서 러시아의 사활적인(vital)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사고를 고수했던 미국의 외교정책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주장이다. 2014년 9월 발표한 논문 ‘왜 우크라이나 위기는 서방의 잘못인가’에서 미어샤이머는 나토 확대를 통해 서구 세계가 자신의 힘을 극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나토의 확대는 러시아의 영향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이 유럽에서 러시아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¹⁾ 실제로 미국 외교정책은 이같은 견해를 반영하듯이, 나토 가입국은 2004년 확대 이후 동쪽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전투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과 우크라이나처럼 강력하고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²⁾ 나토는 회원국들이 러시아와의 대결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미어샤이머의 현실주의적 주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³⁾ 우크라이나 전쟁 발

1) J.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Foreign Affairs* 93-5 (2014), pp. 77-89.

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NATO Says It won’t Send Troops To Ukraine If Russia Invades,” <https://www.rferl.org/a/ukraine-nato-troops-russia-invasion/31678264.html> (검색일: 2024.10.15.).

발 이후 핀란드(Finland)와 스웨덴(Sweden)의 나토 가입이 결정되었을 때 크렘린(Kremlin)이 보여준 상대적으로 냉정한 태도를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미어샤이머가 주장하듯이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지리와 영토에 관한 것이라면, 두 개의 새로운 북유럽 회원국의 가입은 러시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국제정치의 자유주의(liberalism) 시각이다. 국가 간의 전쟁을 불가피한 국제정치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현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다고 믿는다. '제도적 자유주의(institutional liberalism)'는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국제 및 국내 제도와 규범(norm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특정 형태이다.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은 전쟁을 국제기구와 규범의 실패로 정의한다. 그들은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엔(UN)과 나토,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분쟁은 국제 질서에서 흔한 일이지만, 대부분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서방 정치인들은 리스본(Lisbon)에서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면서 가능한 한 경제적 수단으로 러시아를 통합하려고 노력했다.⁵⁾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 시각은 러시아 국내 정책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같은 접근 방식은 러시아의 독특한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서구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러시아를 분석할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러시아 지도자들은 협상은 러시아가 약할 때만 유용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즉, 러시아가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대화 상대가 러시아보다 유리하고 기꺼이 행동하려 할 때만 진지하게 협상하는 성향을 보여준다고 한다.⁶⁾ 반대로 러시아가 강해지면 서방과 협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서구의 정책 입안자들은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3) 애쉬포드(E. Ashford)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들은 나토의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으로의 확장이 전쟁 결정에 작용했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나토의 우크라이나 내 무기나 기지 제공,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서방의 훈련, 푸틴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과두정치인에 대한 키이우 당국의 부패 단속, 우크라이나의 EU와의 경제적 유대 증대 등 다른 요인들도 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 Ashford, "In Praise of Lesser Evils. Can Realism Repair U.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101, No. 5 (2022), p. 213.

4) Denys Yurchenko, *Russian Strategic Culture and the War in Ukraine* (Philadelphia, PA: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4), pp. 2-3.

5) Denys Yurchenko (2024), p. 2.

6) Andrew Foxwell, *Russia's Strategic culture and Worldview: Policy Implications for UK and its All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p. 14-17.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선호한다.⁷⁾ 이 지점에서 국제관계 이론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접근법, 즉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와 같은 다른 이론에서 파생된 교차 이론이다. 전략문화 이론가들에 따르면, 전쟁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식은 지리, 종교, 언어, 국가 정체성을 포함한 문화적,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의 인식, 군사력 사용 의지, 외교 및 협상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방법을 적용할 때, 2022년에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을 전략문화 이론에 입각하여 해명하고자 한 연구는 국내 외에서 일부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진척된 것은 아니다.⁸⁾ 본 논문은 러시아 전략문화의 핵심적인 내용과 러시아 군사전략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포괄적 개념인 전략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군사전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전략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와 비대칭적 전략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사전략은 전략문화와 표리를 이루는 중심 내용이다. 전략문화의 요소들만 갖고서는 전략이 실행되는 실제 국면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군사전략의 핵심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전략문화의 설명력을 보완하는 효과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군사전략, 더 나아가서 러시아 안보전략의 비대칭성과 강압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전략문화의 본 모습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가려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전략문화의 개념과 4세대에 걸친 전략문화 이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 전략문화의 기본적 사고와 역사적 맥락 및 실제 개념인 '포위된 요새'론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러시아

7)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글로벌 안보 구도에서 러시아 이외의 행위자들이 약화되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더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제임스 닉시(James Nixey)는 "크렘린궁은 '협력(cooperation)'을 단순히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서방이 약화되거나 양보할 때 모스크바가 어떻게 개입하고 전술적 이득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예시가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습관적으로 서방의 협력 제안을 함정(trap)으로 간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협력 제안을 함정의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James Nixey, "Expert Comment: Address Russian Rule-breaking," Chatham House, June 12, 2019, <https://www.chathamhouse.org/2019/06/address-russian-rule-breaking> (검색일: 2024.11.5.).

8) 김광현·서주영, "러시아와 북한의 공격적 전략문화에 관한 연구: 전략문화 형성의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8권 1호(2024), pp. 265-290; 백자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략문화의 양상," 『월간군사』 제10호(2022), pp. 24-27; 전혜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전략문화: 위협 인식 변화와 방위 협력 진전』(서울: 국립외교원, 2023).

군사전략의 특성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군사전략의 특성을 비대칭성, 전략적 억제, 강압 이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 러시아의 다영역 강압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러시아의 다영역 강압이 지속될 것임을 전망할 것이다.

II. 전략문화 개념과 이론의 전개 과정

전략문화라는 용어는 1977년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잭 스나이더(Jack Snyder)가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오늘날까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나이더는 전략문화를 “국가 전략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시나 모방을 통해 습득하고 서로 공유하는 아이디어, 조건부 감정 반응, 습관적인 행동 패턴의 총합”으로 정의했다.⁹⁾ 또한, 전략문화는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와 엘리트가 공유하는 안보·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담론적 표현과 서술의 집합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담론적 표현과 서술은 역사, 지리 및 국내 전통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가는 국제적 압력과 기회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국가마다 고유한 전략문화의 프리즘(Prism)을 통해 외부 자극을 평가하고 행동한다.

스나이더의 연구에 이어 1980년대 초부터 전략문화에 관한 많은 중요한 연구가 등장했으며, 연구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세대(generations)별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는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에 기초하여 전략의 문화적 측면과 핵전략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한 콜린 그레이(Colin Gry)와 케네스 부스(kenneth Booth)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레이는 미국의 전략 문화를 연구하면서 합리적 행위자 이론(rational actor theory)으로는 중동에서의 대리전쟁과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패배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¹¹⁾

9) Jack Snyder,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77), p. 8.

10) T. Libel, “Rethinking strategic culture: A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discursive-institutionalist approach,”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3, No. 5 (2018), pp. 686-709; Elias Götz and Jørgen Staun, “Why Russia attacked Ukraine: Strategic culture and radicalized narratives,”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43, No. 3 (2022), pp. 482-483.

11) Collin S. Gray, *Out of the Wilderness: Prime-time for Strategic Culture* (Washington D. C.: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2006), pp. 1-20.

전략문화는 “시민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열망 뿐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에서 유래하는...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힘에 대한 생각과 행동 방식”으로 정의되었다. 동시에 전략문화 연구는 전략이 논의되는 환경을 분석하였고,¹²⁾ 전략 정책 패턴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¹³⁾

전략문화 연구 2세대는 이전의 전략문화 모델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명확한 분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타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1990년대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략문화와 행동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전략문화가 안보 정책의 독립적인 결정 요인인지 아니면 개입변수인 ‘맥락(context)’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규명 작업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궁극적으로 문화에 의해 주도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정책이 문화적 기반이 깊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했다.¹⁴⁾ 또한 연구자들은 전략문화가 “지식을 갖춘 관행(knowledgeable practice)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¹⁵⁾ 구조적 구성주의자들(structural constructivists: 로버트 키오헨(Robert Keohane), 피터 카첸스타인(Peter Katzenstein), 스티븐 크라스너(Stephen Krasner),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 등)는 규범, 문화, 정체성 및 아이디어와 같은 상호 연관된 주제가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반영된다고 믿었다.¹⁶⁾

전략문화의 제3세대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전략문화 연구가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서 영감을 받기 시작한 시기에 비롯되었다. 알리스테어 존스톤(Alistair Johnston)은 중국 전략문화의 성격과 외부 위협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존스톤은 ‘인지 상징(cognitive symbolism)’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간 정치 문제에서 군사력의 역할과 효능에 대한 개념을 공식화하여 오래 지속되는 대전략에 대한 선호를 확립하고, 전략적 선호가 독특하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일 정도로 사실에 입각한 구조를 가진 이러한 개념

12) Colin S. Gray, “National Style in Strategy: The American Examp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2 (1981), pp. 21-47.

13) J. S. Lantis, “Strategic Culture: From Clausewitz to Constructivism,” in J. Johnson, J. A. Larson & K. Kartchner (eds.), *Strategic Cultur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ulturally Based Insights into comparative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p. 33-52.

14) Yitzhak Klein, “A theory of Strategic Culture,” *Contemporary Strategy* 10-1 (1991), pp. 3-23; Richard W. Wilson, *Compliance Ideologies: Rethinking Political Cul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Charles A. Kupchan, *The Vulnerability of Empir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15) A.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pp. 391-426.

16) Anna Antczak, “Russia’s Strategic Culture: Prisoner of Imperial History?” *Polish Political Science Studies*, No. 60 (2018), pp. 225-226.

을 채택한다”고 보았다.¹⁷⁾ 그는 또한 전략문화가 행동 선택의 경계를 결정한다고 믿으며, 이는 “사회적, 조직적 또는 정치적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인식에 어느 정도 질서를 부여하는 공유된 가정 및 결정 규칙”에 의해 달성된다고 규정했다. 결국 전략문화는 “공유된 신념, 가정 및 행동 방식, 공통된 경험과 수용된 내러티브(narrative, 구술 및 서면 모두)에서 파생된다. 이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그룹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집합체로 정의한다.¹⁸⁾

존스톤은 전략문화와 국가 행동을 분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콜린 그레이는 국가 행동은 전략문화와 분리될 수 없으며, 전략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⁹⁾ 전략문화의 실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행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존스톤은 전략문화는 ‘맥락’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 행동은 사실상 탐지, 관찰, 측정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기도 하다. 존스톤과 그레이 간의 치열한 논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략문화 이론의 핵심 쟁점의 하나가 되었으며, 양 자에 대한 비판 논거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대부터 2020년대인 현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4세대 전략문화 연구에서는 이론의 진화와 더불어 학자들은 이론의 분석적 가치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전략문화 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들, 즉 불충분한 변수, 명제의 허구성, 사례 선택 편향(부족한 사례 연구 및 문화 간 비교 감소), 다양한 하위 문화의 경쟁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연구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데이터와 사회과학을 결합한 엄격한 방법론을 추구하거나 전략문화의 통합과 분리, 비교 문화 분석 등이 이에 해당된다.²¹⁾

전략문화의 이론적 위상과 관련하여 전략문화 이론이 문화적 요소와 행위자의 인식을 강

17) A. I. Johnston,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pp. 32-64.

18) Kerry M. Kartchn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Crucible of Strategic Culture* (Washington D.C.: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2006), pp. 1-20.

19) Colin Gray, “Strategic Culture as Context: The First Generation of Theory Strikes Back,”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5, No. 1 (January 1999), pp. 49-69.

20) Michael Raska, *Security Strategy and military Change in the 21st Century* (London: Routledge, 2015), pp. 15-17.

21) Tamir Libel, “Rethinking Strategic Culture: A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Discursive Institutional Approach,”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3, No. 5 (2020), pp. 686-709; Jordan Becker and Edmund Malesky, “The Continent of the Grand Large? Strategic Culture and Operational Burden Sharing in NATO,”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1, No. 1 (2017), pp. 163-180.

조하는 구성주의 이론의 하나의 조류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구조적 현실주의의 틀 내에서 전략문화를 해석함으로써 현실주의 이론을 확장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월츠가 국제관계의 세 가지 이미지를 1) 인간 본성 2) 국가의 구조 3) 국제 체제에 근거하여 제시했는데,²²⁾ 현실주의자들은 전략문화는 두 번째 국가의 구조라는 틀 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²³⁾ 존 글렌(John Glenn)은 신현실주의와 전략문화가 ‘경쟁하는 접근법’이라고 주장하지만,²⁴⁾ 사실상 전략문화는 국가 인식의 이해를 보완하는 접근법에 가깝다. 전략문화는 결국 국가가 위협을 인식하고 외부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매카니즘이다. 순수하게 구조론적인 접근법은 러시아 주변의 ‘근외지역(near abroad)’에서의 러시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모스크바는 스스로 선언한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내의 외부 영향에 특히 민감하고, 동시에 크렘린은 도전을 받으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접근법을 추가로 적용할 때 전략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III. 러시아 전략문화의 기본 사고와 역사적 맥락 및 실재 개념

1. 기본 사고

전략문화는 협의로 볼 때, 한 국가의 안보 태세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경험의 조합이다. 또한 국가가 위협을 인식하는 방식, 적국의 성격 파악, 정치 지도자가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전쟁을 기꺼이 수행하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준다.²⁵⁾ 괴츠(Elias Götz)와 스타운(Jørgen Staun)은 러시아 전략문화의 핵심은 ‘외부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과 ‘강대국 지위에 대한 집착’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외부 공격에 대한 취약성은 네 가지 연관된 서술로 구성되어 있는

22)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2010).

23) Eugene Rumer and Richard Sokolsky, *Etched in Stone: Russian Strategic Culture and the Future of Transatlantic Secur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0), p. 3.

24) John Glenn, “Realism versus Strategic Culture: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1, No. 3 (2009), p. 545.

25) Emiliano Di Loreto, “Know Your Neighbors: Russian Strategic Culture Toward External Threats,” *Istituto Analisi Relazioni Internazionali*, October 21, 2023, <https://iari.site/2023/10/21/know-your-neighbours-russian-strategic-culture-toward-external-threats> (검색일: 2024.10.20.).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⁶⁾

- 1) 러시아는 방대한 영토와 긴 국경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곳에서 동시에 국가를 방어하기 어렵다.
- 2) 러시아의 전략문화는 '완충지대(buffer zones)'의 구성과 '전략적 중심(strategic depth)'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러시아는 평야 지대의 나라로써 전략적 중심을 강화하는 것이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3) 서방세계(the West)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 러시아 현대사에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나폴레옹 전쟁(1803-1815)과 나치 독일과의 전쟁(1941-1945)으로부터 연유하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냉전 기간과 탈냉전기 동안 나토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담론을 유지해왔다.
- 4) 내부와 외부의 위협 사이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지아(Georgia, 2003), 우크라이나(2004),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2005)에서 발생한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에 대한 러시아의 해석은 구소련 공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러시아에서 정권 교체를 시도하려는 외부 조직(서구)의 쿠데타로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 전략문화에 깃들어 있는 두 번째 사고는 러시아는 '강대국이 될 운명'이라는 믿음을 지배 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고는 수 세기 동안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소련 붕괴 후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왔다고 보여 진다. 학자에 따라 전략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수 세기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지리적인 특성에서 연유하는 방어 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외부로 팽창하기 시작했던 러시아는 16세기 중반 이후 유럽, 시베리아(Siberia), 코카서스(Caucasus)와 중앙아시아(Central Asia)로 영토 확장을 추구해 온 역사를 갖고 있기에 전략문화 형성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확실한 점은 푸틴 집권 이후 현재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 있다.²⁷⁾

오늘날 러시아는 스스로를 세계 문제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는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 역사, 지리학에서 비롯되며,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중심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위대한 힘 혹은 권력(great powerness)'을 의미하는 '제르자브노스치(derzhavnosti, державность)'에 대한 믿음은 러시아 외교정책 이념의 하나로

26) Elias Götz and Jørgen Staun (2022), pp. 484-485.

27) A. Reshentikov, "Great projects' politics in Russian History's hardly victorious end," *Demokratizatsia*, Vol. 19, No. 2 (2011), pp. 151-175.

써 엘친(Boris Yeltsin) 대통령 집권기부터 각광을 받아 왔다. 또한, ‘강대국 러시아(Great Russia)’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서 군사력을 매우 강조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와 국가의 크기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 러시아가 군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²⁸⁾ 특히 푸틴 집권 이후 그가 중용한 엘리트 집단인 ‘실로비키(Siloviki, 군, 경찰, 정보기관 등 제복을 입은 집단 출신 권력층)’의 등장은 러시아 외교정책을 ‘군사주의(militarism)’로 제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²⁹⁾ 군사력 사용에 대한 믿음은 러시아 전략문화의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군대는 완충 지대를 만들고 주변 공간과 국가를 통제하는 데 주요 수단이었다. 러시아 당국의 내러티브에서 군대는 침략을 막아주는 장벽이자 ‘포위된 요새(Besieged Fortress)’의 수호자이다.³⁰⁾ 전략문화이론의 선구자인 스나이더 역시 1970년대 말에 선제공격과 공세적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소련군의 성향은 러시아 역사에서 나타나는 안보 불안과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³¹⁾

러시아의 전략문화 형성에 작용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사고는 러시아 역사의 중요성, 국가 주권(national sovereignty) 및 러시아성(Russianess), 전략적 중심, 강대국 지위(great power status), 군사력 및 통제된 정보(controlled information)와 같은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환기시켜 준다. 러시아 전략문화의 배후에는 힘(power)의 논리가 이성(reason)의 논리보다 앞서 있다. 그 결과, 러시아인들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수용하며, 부패가 일반화된 체제 역시 받아들이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화되었다.

2. 역사적 맥락

전략문화는 한 국가의 국내 정치적 전통과 역사, 지리의 산물이며, 외교안보 정책의 지속적인 틀을 제공한다. 전략문화가 영구적이며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정치적 변화로 인해 변화할 가능성은 낮는데, 러시아의 경우 변화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에밀리아노 디 로레토(Emiliano Di Loreto)는 러시아 전략문화를 정의

28) Combined Strategic Analysis Group (CSAG), United States Central Command, “A Look into the Origins of Russian Strategic Culture,” *CSAG STRATEGY PAPER*, July 11, 2023, p. 2.

29) Evan Kerrane, *Moscow’s Strategic Culture: Russian Militarism in 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Quantico, VI: Marine Corps University, 2022), pp. 1-10.

30) Martti J. Kari and Katri Pynnöniemi, “Theory of Strategic Cultur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Russian cyber threat perception,” *Journal of Strategy Studies*, Vol. 46, No. 1 (2023), p. 75.

31) Jack Snyder (1979), pp. 25-26.

하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세 개의 순간(moments)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1853년 크림 전쟁(Crimean War)이다. 러시아는 몇 십년 전 나폴레옹(B. Napoleon)이 대표하는 프랑스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전쟁에서 영국이 이끄는 유럽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을 지원하여 러시아의 성장을 막거나 러시아의 힘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유럽 대륙에서는 강력한 러시아를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러시아가 갖게 만들었다. 두 번째 순간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Bolshevik Revolution) 이후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철수했던 때이다. 러시아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Treaty of Brest-Litovsk)에 서명하면서 현재의 핀란드(Finland), 발트해 연안국(Baltic States), 벨라루스(Belarus), 우크라이나(Ukraine), 폴란드(Poland) 일부, 몰도바(Moldova) 등 상당한 영토를 상실했다. 세 번째 순간은 소련의 붕괴와 나토의 동유럽 확장으로 간주된다.³²⁾ 1991년에 발트 3국,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코카서스 지역의 3국(Armenia, Azerbaijan, Georgia)과 중앙아시아 5개국(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과 함께 독립함으로써 소련의 분열을 경험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러시아 현대사를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략문화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 시기는 1985년 고르바초프(M. Gorbachev)의 공산당 서기장 취임 이후 외교정책의 신사고를 주창하면서 변화를 시도했던 시점부터 1990년대 중반 옐친(B. Yeltsin) 집권 기 프리마코프(E. Primakov)의 총리 등장 이후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유라시아 벡터(Eurasian Vector)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시기까지 고작 10년 정도로 짧았다. 1990년대 말부터 서방과의 적대적 관계가 점차 재개되었다. 푸틴 집권 이후 구소련 지역 내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볼셰비키 혁명 후 1918년 독일과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체결로 위기를 극복하고 내전 승리 후 다시 소련의 실지(失地)를 힘으로 회복했던 경험과 유사하다. 1917년 혁명 이후 10년 만에 볼셰비키는 중앙아시아 정복과 합병을 시작했고, 소련 붕괴 10년 후 푸틴의 러시아는 복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볼셰비키와 푸틴 정권 모두 자국의 안정성과 국경 너머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일부라도 되찾자 과거의 영향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³³⁾

러시아 전략문화의 기원이 20세기의 산물인지 혹은 수 세기 동안 축적된 역사적 유산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견해차 라기 보다는 전략문화의 형성 과정과 전략문화가 갖는 효과

32) Emiliano Di Loreto (2023).

33) Eugene Rumer and Richard Sokolsky (2020), pp. 19-20.

를 광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다 축소해서 볼 것인가로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 학계의 알렉산드르 베르시닌(Aleksandr A. Vershinin)과 알렉세이 크리보팔로프(Alexei A. Krivopalov)는 18세기 말부터 짜르체제 붕괴 시까지 러시아는 유럽의 일원이었으며, 범유럽 표준과 조화를 이루었으나 20세기 볼셰비키 혁명 결과 탄생한 소비에트 권력이 러시아 국가의 전략문화를 ‘재발명’했고 외교정책에서 일부 현실 정치적 측면을 채택했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제2차 세계대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서 소련의 전략문화에 강대국 사고를 불어넣은 중심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위기와 소련 붕괴는 엘리트들의 전략적 사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이데올로기의 쇠퇴를 촉발했지만, 소연방 붕괴 후 한 세대가 흐른 현 시점에서 소련 전략문화의 일부 핵심 범주가 여전히 러시아 엘리트의 전략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³⁴⁾

반면에 푸틴 러시아 정부의 이념적 대변자 역할을 해 온 블라디슬라르 수르코프(Vladislav Surkov)는 “백년(또는 200년 또는 아마도 300년)의 지정학적 외로움(geopolitical loneliness)”을 예측하면서 “쌍두 지향의 국가성(double-headed statehood), 혼종 정신(hybrid mentality), 대륙적 영토(intercontinental territory) 및 양극화 역사(bipolar history)”로 특징지어지는 러시아가 오직 자신과 동맹을 맺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수르코프는 지정학적 외로움으로의 전환이 지난 400년 동안 러시아의 유럽 중심적인 전략적 지향과의 급격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³⁵⁾ 러시아 역사의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연속성은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을 제공했다. 그 결과 “러시아가 어디서나 항상 모든 상황에서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시점에서의 러시아의 실제 상태나 힘은 이러한 권리 의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³⁶⁾ 이것은 러시아가 국가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믿는 것(또는 때로는 확립된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러시아 전략문화의 요소는 앞서 기본 사고에서 언급한 지리 및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정치 문화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러시아는 서구와 비교할 때, 단일 독재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³⁷⁾ 독재는 러시

34) Aleksandr A. Vershinin, Alexei A. Krivopalov, “Russian Strategic Culture in Retrospect,”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22, No. 2 (April-June 2024), pp. 28-49.

35) V. Surkov, “The Loneliness of the Half-Breed,” *Russia in Global Affairs*, May 28, 2018, <https://eng.globalaffairs.ru/articles/the-loneliness-of-the-half-breed> (검색일: 2024.11.15.).

36) Keir Giles, *Moscow Rules: What Drives Russia to Confront the Wes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9), p. 19.

아 정치사의 핵심 요소로써, 짜르체제와 공산당 지배 체제를 거쳐 소련 붕괴 이후에도 보리스 옐친과 푸틴은 모두 러시아에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해왔다. 옐친은 1990년대 러시아가 직면한 상황으로 인해 방해받았지만, 푸틴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새로운 러시아 국가는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목표를 우선시함으로써 독재 전통을 이어왔다.

3. '포위된 요새'론

러시아 전략 담론은 오랫동안 지정학적 취약성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특징지어져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포위되었다는 정신(Siege Mentality)'은 러시아의 상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세한 방어력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포위된 요새론은 현재(顯在)화된 전략문화 사고로써, 러시아에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쟁을 자연 현상으로 보는 관점과 전략을 총체적, 계획상으로 완벽한 구상으로 만들려는 러시아인들의 성향은 러시아 전략가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더 많은 포위망을 선점하기 위해 '방어적 반격(defensive counterattack)'의 한 형태로 무력을 사용하도록 고무시키는 데 기여했다.³⁸⁾ 반복되는 외국의 침략과 국가 붕괴라는 충격적인 집단 경험을 고려할 때, 러시아 내러티브는 모스크바를 "주변 국가들의 침략적인 제국주의적 욕망"의 영구적인 영향을 받는 분쟁의 피해자로 포지셔닝하는 경향이 있다.³⁹⁾

2014년 크림반도 점령과 돈바스 지역에서의 분쟁이 시작되면서 크렘린궁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러시아가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영구 전쟁(permanent war)' 개념을 유포했다. 포위된 요새(Besieged Fortress, Осаждения Крепость) 논리는 포위된 요새로서 러시아는 보호되어야 하며, 요새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해 감행하는 러시아의 외부에 대한 침략은 방어 전쟁의 일부이며, 이는 확고한 군사작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포위된 요새는 러시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요새

37) Andrei p. Tsygankov, *The Strong State in Russia: Development and Cri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7.

38) Nicholas H. Vidal, "Enemy at the Gates: A Strategic Cultural Analysis of Russian Approaches to Conflict in the Information Domain," *Journa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Vol. 14, No. 2 (2023), pp. 49-76.

39) Norbert Eitelhuber, "The Russian Bear: Russian Strategic Culture and What It Implies for the West," *Connections*, Vol. 9, No. 1 (2009), pp. 1-28.

로써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 대항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러시아의 적들은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존재한다. 포위된 요새론은 20세기 초반 볼셰비키들이 짜르 정권에 맞서 혁명운동을 하던 시기에 레닌(V. Lenin)이 처음 언급한 데에서 유래했다. 소련 시대에는 자본주의 제국으로부터 포위된 소련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활용되었고, 소련방 붕괴 후 푸틴 집권기에 이 논리가 다시 부활하여 러시아 지도부의 대국민 내러티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⁴⁰⁾ 푸틴은 현재 러시아는 물론이고 과거 소련도 서방의 공격 위협을 계속 받았던 포위된 요새였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⁴¹⁾ 소련 행동의 기원을 밝혔던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포위된 요새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소련 당국의 권위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⁴²⁾ 이를 통해, 현재의 크렘린 지도부 역시 과거 소련과 동일한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대통령실 대변인 드미트리 페쉬코프(Dmitri Peshkov)가 언급했듯이, 이른바 ‘성문의 적(enemy at the gate)’ 내러티브는 서방의 대리 공격의 지속적인 위협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⁴³⁾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강조는 크렘린의 권위주의 통치, 중앙집중식 명령 및 통제 시스템, 러시아 보안 기관의 광범위한 임무를 정당화하는 위협으로 인식된다.

러시아의 자원과 영토가 호전적인 적국의 표적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러시아의 지리적, 전략적, 기술적 취약성 인식은 적대적 세계에 대한 러시아의 뿌리 깊은 경계심과 결합하여 포위된 요새에 대한 러시아 집권층의 논리를 강화했다.⁴⁴⁾ 이 요새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인근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해왔다. 러시아 지도부의 KGB 문화 전통에서 비롯된 외부 및 내부 위협의 과장과 러시아 주변국가들에서의 색깔 혁명을 중심으로 한 위협 인식이 이러한 취약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⁴⁵⁾

외부의 적에 대해 완전히 방어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러시아의 두려움은 내부의 적을 포

40) Maria Lipman, “Putin’s ‘Besieged Fortress’ and its ideological Arms,” in Maria Lipman, Nikolay Petrov (eds.), *The State of Russia: what Comes Next?* (London: Palgrave Pivot London, 2015), pp. 110-136.

41) Leon Aron, “The Problematic Pages. In Memory of Alexander Solzhenitsyn,” *The New Republic*, Sept 24, 2008. <https://newrepublic.com/article/62070/the-pronlematic-pages> (검색일: 2024.11.10.).

42) George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No. 25 (1947), pp. 566-582.

43) Andrew Monaghan, ““An enemy at the gates” or “from victory to victory?”” *Rus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84, No. 4 (2008), pp. 717-733.

44) Mette Skak, “Russia’s Strategic Culture: the role of today’s chekisty,” *Contemporary Politics*, Vol. 22, No. 3 (2016), pp. 314-341.

45) Lyudmila Igumova, “Russia’s Strategic Culture Between American and European Worldview,”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24, No. 2 (2011), pp. 253-273.

함하도록 확장되었다. 수 세기 동안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만연해 있던 내부 혼란에 대한 두려움은 2010년 튀니지(Tunisia)에서 시작된 이른바 “아랍의 봄(Arab Spring)”으로 인해 더욱 커졌다. 푸틴 집권 기간 동안 러시아 국내 문제에 대한 서방의 간섭을 우려하는 크렘린은 두려움이 커졌고, 러시아는 중요한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의 안보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⁴⁶⁾ 러시아 지도부는 아랍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대중 소요를 서방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면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 그들은 러시아에서도 유사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러시아가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내부 혼란을 부추기는 적들의 공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할 수 있다는 인식은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에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실제로 이들이 소련 붕괴가 자본주의의 적들에 의한 공작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 데에서 비롯된다.

IV. 러시아 군사전략의 특성과 우크라이나 침공

1. 러시아 군사전략의 특성

1) 비대칭성

러시아 수뇌부는 안보는 한정된 재화(limited commodity)이므로 상대가 덜 안전할 때,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안보에 대한 이러한 제로섬 접근 방식은 강대국으로서의 인식 및 지속적인 불안감과 함께 러시아 군대의 실제 동원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유인 요소가 작용한다. 첫째, 러시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 국경 너머의 분쟁 가능성. 둘째,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수 세기 동안 러시아에 묶여 있거나 지배되어 온 지역에 대한 책임감. 셋째, 주변 국가 또는 ‘근외지역(near abroad)’에 있는 ‘러시안 디아스포라(Russian diaspora)’에 대한 우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⁴⁷⁾

러시아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강압적인(coersive) 군사력 사용에 대해 많은 서방 국가들보다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실제 분쟁 사례를

46) Martti J. Kari and Katri Pynnöniemi (2023), pp. 74-75.

47) Ivor Wiltenburg,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Russian Strategic Culture,” *Atlantisch perspectief*, Vol. 44, No. 1 (2020), p. 9.

통해 다소 이례적인 학습(learning), 변형(transformation) 및 즉응성(improvisation)을 보여주었다. 서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접근 방식에 대해 평화와 전쟁을 구분하지 않고, 하이브리드(hybrid), 비대칭적(asymmetrical)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러시아 접근 방식의 혁신성을 인정해왔다. 이같은 러시아의 방식은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아니며, 러시아 전략문화의 기준으로 혁신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러한 특성은 변화라기보다는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대칭(asymmetry)’과 ‘간접적 접근 방식(indirect approach)’은 러시아의 군사적 전통에 깊고 독특한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러시아에서 비대칭 전쟁 방식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 붕괴까지의 시점에 중점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시기에 소련 정치 및 군사엘리트들이 몰두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전쟁의 첫 번째 단계, 즉 “초기”에 결정적인 기습공격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었다.⁴⁸⁾ 이는 1941년 6월 나치 독일의 러시아 침공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러시아가 당했던 비참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소련의 군사 이론가들은 냉전기에 전쟁 초기에 패배를 하지 않고 승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몰두했으며, 냉전 하에서 미국과 소련 공히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피하는 대신에 대리전쟁(proxy war)과 간접적인 비대칭 전쟁 방법을 사용했다. 소련이 개발한 전쟁 접근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이 “중심 작전(Deep Operation, operation in depth), 또는 비선형 전쟁(non-linear warfare) 및 반전 이론(munity warfare theories)이 있다.⁴⁹⁾ 중심 이론은 화력, 기동성, 기습의 효과에 대한 질적 개선을 활용하여 공격과 반격의 주요 축에서 필요한 전력의 우월성을 달성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강력하고 집중적인 공중 및 포격공격이 수반되는 기습은 지상 부대, 공중 공격 병력 및 기타 특수 훈련된 병력을 상대 영토 깊숙이 신속하게 전개하는 동시에 장거리 사격으로 자신의 측면을 커버할 수 있게 해준다. 항공 및 장거리 및 고정밀 사격은 예비군과 지원 기지를 공격하여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⁵⁰⁾ 전쟁 초기에 정면 공격을 피하고 작전 기동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군대가 광범위한 급습 작전을 실현하고 적의 측면과 후방에 도달할 수 있다. 즉 공격과 방어 작전을 융합적으로 수행하는데 핵심이 있으며, 전진 부대의 돌격 및 충돌이 아니라 멀리서 발사하는 방법으로 적을 물리치게 된다. 이러한 작전에서 심리 및 정보 작전의 역할이 중요하다.⁵¹⁾

48) Stephen J. Cimbala, “Russian Threat perceptions and Security Policies: Soviet Shadow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The Journal of Power Institutions in Post-Soviet Societies* 14-15 (2013), <https://journals.openedition.org/pipss/4000> (검색일: 2024.11.15.).

49) Nurlan Aliyev, *Reassessing Russia's Security Poli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4), pp. 12-13.

50) Lester W. Grau, *Soviet Non-Linear Combat: The Challenge of the 90s* (Leavenworth, KS: U.S. Army Compound Arms Center, 1990), p. 1.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규모 비대칭 전쟁 작전 수행에 적합하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군사 및 정치 엘리트들은 이 이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해 연구하였다. 러시아의 군사전략가들은 더 강한 적과의 가능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정밀 타격(high-precision strikes)과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데 관심을 집중했다. 2013년에 발표된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 러시아 총참모장의 글은 비전통적인 방법 사용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비전형 전쟁 접근 방식을 주로 강조했다. 게라시모프는 더 강한 적도 취약점이 있으므로 취약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 간 갈등 해결에서 "비군사적인" 방법의 역할을 중시했다.⁵²⁾ 게라시모프는 2018년 보고서에서도 앞서 자신이 제시했던 논지를 계속 이어가면서 정치, 외교, 경제, 정보, 사이버, 심리 및 기타 비군사적 형태의 대결 방법과 같은 러시아 안보 위협의 다각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⁵³⁾ 러시아의 군사 전략가들이 비대칭적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적, 즉 미국과 나토의 기술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전략과 전술을 구현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약한 상대가 더 강한 쪽의 군사 기술적 이점을 줄이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때, 비대칭적 방식을 주로 구사하더라도 군사력 자체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최후 수단으로서 군사력은 전쟁의 기본적인 전력이며, 전쟁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비대칭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분야가 확대되어 러시아에서 군사 뿐 아니라 외교 및 안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내부 및 외부 정책 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지정학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 공간 내의 CIS 국가들,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UE), 또는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회원국에 대한 접근 방식도 차별화하고 있다. 더 강력한 경쟁자에 직면했을 때, 러시아의 외교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주로 위협(threat)과 소모적(attrition) 접근 방식에 의존한다.⁵⁴⁾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해 온 일은 주로 비대칭적 접근 방식에 기반하였다. 대표적으

51) Махмут Ахметович Гареев, "Характер будущих войн," *Право и безопасность*, No. 1-2 (2003 June), pp. 1-7.

52) В Герасимов, "Ценность науки в предвидени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урьер*, February 26, 2013, <https://i.twirpx.link/file/1297916> (검색일: 2024.11.15.).

53) Ольга Балашова, "Герасимов рассказал, какую современную технику используют на мневрах 'Восток-2018'," *TASS*, September 9, 2018, <https://tass.ru/armiya-i-opk/5530438> (검색일: 2024.11.15.).

54) Andrey Tsygankov, *Russia'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6), p. 214.

로 2015년 시리아(Syria)에서의 활동은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성과를 낸 성공 사례로 자체 평가했다.

2) 전략적 억제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는 러시아에 고유한 개념으로, 서구에서 러시아에 대해 ‘하이브리드 전쟁 교리’, 러시아의 ‘다영역 강압 능력’, 러시아의 ‘핵 벼랑끝 전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⁵⁵⁾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전략적 억제 개념은 서구에서 주로 핵억제를 의미하면서 전통적으로 묘사해 온 ‘억제(deterrence)’ 개념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사상가 가레예프(Makmud Garrev)는 전략적 억제를 다른 국가(동맹)의 위협과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 감소, 예방하는 동시에 공격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거나 적대자(공격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협을 통해 진행되는 정치, 외교, 정보, 경제, 군사 및 기타 상호 연관된 조치의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⁵⁶⁾ 전략적 억제는 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노력과 방어력에 의해 수행된다. 이 점에서 비대칭 또는 비군사적 조치는 군사적 행동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략적 억제는 순수하게 방어적이지는 않은데, 여기에는 공격적이면서 방어적인 핵, 비핵 및 비군사적 억제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서구의 시각으로는 억제와 강압의 결합 전략으로 평화와 전쟁의 모든 시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분쟁을 억제하거나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적인 특유성을 갖고 있다.⁵⁷⁾

러시아 군사사상(military thoughts)은 전쟁과 평화, 내부 및 외부 위협, 핵 및 재래식 무력, 군사 및 비군사적 수단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왔다. 현대 러시아의 군사적 사고에서 전략적 억제는 군사 및 비군사적 구성 요소를 모두 통합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 개념은 여전히 핵 억제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외교, 평화 회담,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및 정치와 같은 기존 군사력 및 비군사 전술의 사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략적 억제에서 비군사 전술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구사하는 전쟁에 대한 특징적인 총체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구에서 흔히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개념화하는 내용과 사실상 일치한다. “비선형.” “점

55) Ivor Wiltenburg (2020), pp. 9-10.

56) Махмут Ахметович Гареев, “Проблем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Krasnaya Zvezda*, October 8, 2008, pp. 1-8.

57) Ven Bruusgard,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Survival*, Vol. 58, No. 4 (2016), p. 7.

진주의(gradualist), “다영역 혹은 크로스 도메인(Cross Domain),” “복합전략(complex strategic),” “다차원 강압(multi-dimensional coercion)”이라는 용어는 러시아가 군사력 투사 능력이 우수한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대결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대칭 전술을 지칭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한가지 분명히 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밝혔듯이, 러시아가 비대칭성과 전략적 억제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도 군사력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분명하게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힘의 균형을 확립하려는 오랜 러시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3) 러시아의 강압 이론과 관행

전략문화를 탐구하는 작업은 강압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맞춤형 억지력(tailored deterrence)’이라고 불리는 특정 맥락에서 주어진 상대의 전략문화에 따라 강압 프로그램(coercion program)을 만들게 된다.⁵⁸⁾ 전략문화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강압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전략문화의 렌즈를 통해 관찰하는 작업 역시 진행하게 된다. 강압은 다른 전략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강압 이론(theory of coercion)’은 서구의 전략 이론의 가정과 다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전략적 억제’ 개념은 러시아에서 만들어 자신들이 고유하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서구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다영역 강압(cross-domain coercion, 핵, 재래식, 정보)”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러시아어 용어에서 전략적 억지는 일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으며, 평시의 억지력과 전시 중 무력을 사용하여 군사(핵 및 비핵) 및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전장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모든 경우 이것은 무차별 무력 전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을 조작하고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강압이기 때문에 다영역 강압 개념이 러시아 용어의 다각적인 논리를 포착한다고 본다.⁵⁹⁾

러시아의 다영역 강압은 하나의 억지 체계 내에서 핵, 재래식 및 비동적(nonkinetic) 수단⁶⁰⁾을 포함하여 주로 정보 강압의 영향력을 종합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구조를 일컫는다.

58) Colin Gray (2006), pp.1-20; Jeffrey Lantis, “Strategic Culture and Tailored Deterrence,”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30, No. 3 (December 2009), pp. 467-485.

59) Kristine Ven Bruusgard,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Survival*, Vol. 58, No. 4 (2016), pp. 7-26.

60) ‘동적(kinetic)’, ‘비동적(non-kinetic)’이라는 개념은 군사력 사용 방식이나 작전의 효과를 창출하는 수단을 구분할 때 사용된다. 무기, 직접 교전, 특수부대의 직접 공격 등 동적 수단은 물리적 힘 또는 폭력을 수반하는 작전 및 무기 체계를 의미하며, 실제로 적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반면, 사이버 공격, 전자전,

다영역 강압은 전시 및 병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시간적 범위가 넓으며, 군사 및 비군사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 대상 역시 단일 영역 보다 더욱 넓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강압 체제에서 강력하거나 비강력한 작전 모드를 병합하는 경향과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교한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

핵과 재래식 역지에 대한 개념화는 비교적 정교하게 진행되었지만, 비동적 유형의 영향력을 대표하는 ‘정보 강압(information coercion)’은 비교적 최근에 개념이 형성되고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이다. 러시아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일어나는 모든 영역인 정보 공간, 인식과 의사 결정을 형성하는 콘텐츠인 정보, 디지털 및 아날로그 기술 표현인 정보 인프라를 구분한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정보 작전을 통합된 전체로 지정하며, 이는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기반이 되는 정보 영역을 구성하는 위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¹⁾ 서구에서는 정보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사이버 중심적’으로 보면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방어와 공격은 물리적 및 심리적 영역의 대립 활동과 구별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사고는 사이버 문제(즉, 컴퓨터 네트워크 지원 위협)를 허위 정보 및 악의적인 외부 영향력 캠페인과 같은 “다른” 문제와 개념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는 본질적인 이해에 머물게 한다. 반면, 러시아의 사고는 현대 러시아 군사교리에 따라 “사이버 안보(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о)”를 “정보 공간”의 하위 구성 요소로 보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보의 “형성(formation), 생성(creation), 변환(conversion)과 관련된 활동 영역”으로 이해된다.⁶²⁾ 즉, 정보의 전송(transfer), 사용(use) 및 저장(storage)과 “개인 및 사회의식, 정보 인프라 및 정보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 러시아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기술 시스템 모두에 대항하는 무기로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⁶³⁾

심리전, 정보전, 외교적 압력, 경제 제재 등 비동적 수단은 물리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효과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적의 의사결정, 정보 체계, 사기, 경제 등에 영향을 주는 전략이다. Thomas D. Torkeson, *Ideas in Arms: The relationship of Kinetic and Ideological Means in America's Global War on Terror: Drew paper No. 2* (Maxwell Air Force bas,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2012), pp. 25-55.

61) Виктор Иванович Кузнецов, Юрий Ефимович Донсков, Олег Геннадьевич Никитин, “К вопросу о роли и месте 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ы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оенная мысль*, No.3 (2014), pp. 13-17; С. Г. чекинов, С. А. Вогданов, “Влияние непрямых действий на характер современной войны ЛА КОХ-О конфликте глоб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Военная мысль*, No. 6 (2011), pp. 3-13.

62) Scott Jasper, *Russian Cyber Operations: Coding the Boundaries of Conflict*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20), pp. 5-7.

63)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взгляды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Москва

러시아의 정보 강압은 ‘누적 강압(cumulative coercion)’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2단계 노력으로 정보 억제제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첫째, ‘억제 잠재력(detering potential)’의 생성이 시작되며, 이는 상대와의 지속적이지만 낮은 강도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 이 운영상의 마찰은 전략적 현실, 그 경계, 위험 및 기회를 탐구한다. 즉, 상대, 환경, 자신을 검토한다.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역량과 해결책에 대한 평판을 높이고 필요성에 의한 억제 잠재력을 생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의 필요에 따라 사전에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이다.⁶⁴⁾ 이와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춘 정보 강압 형식은 2015년 시리아에서 작전 동안 인지심리 영역에서 정보 공간을 러시아에 유리한 콘텐츠로 채운 다음 작전 운영상 필요한 시점에 이 잠재력을 활용하여 최적의 정보 환경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마찰 요소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보 강압의 단계가 시간에 따라 압축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 유사한 역학 관계가 디지털 기술 영역(사이버 및 무선 전자 투쟁 운영 라인)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무선전자 무기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적대 세력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다.⁶⁵⁾

이처럼 정보 영역에서 러시아는 서구와 달리 강압을 사실상 억지 혹은 전략의 차원에서 사용함으로써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서구 학계에서는 ‘통제 전략(strategy of control)’과 ‘강압’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상대방에게 의지를 강제로 강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후자는 위협을 수반하는 외교(diplomacy)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정보 강압은 정보 영역에서 무차별 무력(즉 통제 전략)과 이를 사용하려는 의지(즉, 강압 전략)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보 억제는 핵이나 재래식 영역보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핵이나 재래식 전력에서는 교전을 통해 해결하거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효과가 분명해지지만, 정보 영역 마찰에서는 피해를 견딜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 강압의 본질인 누적 강압에서는 영향력이 어디에서 끝나고 언제 통제가 시작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⁶⁶⁾ 일반적으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만드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러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론에 능숙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극도로 서투른 측면이 있다. 정보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1), p. 5

64) Dmitry Adamsky, *The Russian Way of Deterrence: Strategic Culture, Coercion, and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4), pp. 51-52.

65) Dmitry Adamsky, “Christ-loving Diplomats: Russian Ecclesiastical Diplomacy in Syria,” *Survival*, Vol. 61, No. 6 (2019), pp. 49-68.

66) Dmitry Adamsky (2024), pp. 53-54.

강압 이론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접근 방법은 강제력과 전쟁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방어적 마찰을 통해 상대방의 잠재력 확대를 저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2. 우크라이나 문제 인식과 우크라이나 침공

1)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

러시아 자신의 ‘위대한 권력’에 대한 믿음의 결과는 강대국 경쟁의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스티븐 월트(Stephen Walt)가 표현했듯이 “19세기 외교 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 데, 이것은 세계가 ‘영향력의 영역(sphere of influence)’으로 나뉘고 더 큰 국가가 작은 국가의 대외(그리고 종종 대내) 관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⁶⁷⁾ 세르게이 라브로프(S.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19세기 ‘유럽체제(Concert of Europe)’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으며,⁶⁸⁾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되어 유럽 대륙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눈 얄타 협정(Yalta Agreement)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푸틴은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뉴 얄타(New Yalta)’를 요구하기도 했다.⁶⁹⁾ 이같은 관점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푸틴과 크렘린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략문화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21년 7월 12~13일 일련의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실상의 ‘제한 주권 원칙(doctrine of limited sovereignty)’⁷⁰⁾을 성문화했다. 푸틴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현대 우크라이나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은 불법이며, 반러시아 플랫폼(anti-Russia Platform, 러시아에 대한 문제나 위협을 만드는 국가)은 외국의 통제나 영향

67) Stephen M. Walt, “Back to the Future: World Politics Edition,” *Foreign Policy* 94-7 (2015), <https://foreignpolicy.com/2015/07/08/back-to-the-future-world-politics-edition-russia-isis-europe-china> (검색일: 2024.11.16.).

68) The Kremlin, “Address at the 7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September 28, 2015, <http://en.special.kremlin.ru/events/president/news/50385> (검색일: 2024.11.16.).

69) Fiona Hill and Clifford G. Gaddy, *Mr Putin: Operative in the Kremli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5) p. 393.

70) 제한 주권 원칙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도 알려져있다. 제한 주권 원칙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소련이 주장한 외교 정책 원칙으로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공산주의 정부가 위협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 원칙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소련과 동구권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Stephen G. Glazer, “The Brezhnev Doctrine,” *International Lawyer*, Vol. 5, No. 1 (1971), pp. 169-179.

을 받지 않는 한 외국 기지를 유지하거나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권력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그들은 독립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쥔 소수의 집단이 급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집단은 현재 누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⁷¹⁾

푸틴의 시각에서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 국가로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동슬라브족의 일원인 벨라루스 까지 포함하여 이 두 나라는 전략적으로 모스크바에 종속되어 있을 때만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정당화되는 인위적이고(artificial) 열등한(inferior) 국가이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서방으로 표류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한 도전으로 인식된다.⁷²⁾ 더 나아가서 유럽 역시 전략적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전략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유럽의 기능은 러시아라는 ‘포위된 요새’ 및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로서 러시아의 탁월한 문명 정체성을 검증해 주는 지역일 뿐이다.⁷³⁾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시각은 지정학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에 토대를 둔 전략문화의 산물이지만, 지식인을 포함한 러시아의 모든 지도층이 갖고 있는 인식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초민족주의자(ultra-nationalists), 국수주의자들, 일부 파시스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인사들의 견해 중에서 극단적인 러시아 우월주의의 성향을 대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가 알렉산드르 두긴(Alexandr Dygin)이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완충 지대 역할을 못 한다면, 독립 국가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⁴⁾ 두긴의 견해 일부,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앞서 제시한 푸틴의 견해

71)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ext of Report ”Valdai Discussion Club Meeting,“ October 25, 2021, <https://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6975> (검색일: 2024.11.10.).

72) Valeriy Solovey, “The True Story of How Russia’s Foreign Policy Process Evolved,” *The National Interes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February 28, 2019,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true-story-how-russias-foreign-policy-process-evolved-45812> (검색일: 2024.11.15.).

73) Graeme p. Herd, *Understanding Russian Strategic Behavior: Imperial Strategic Culture and Putin’s Operational Cod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2), pp. 32-33.

74) Александр Дугин, *Проблемы уголовных правоотношений вины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наказания* (Londo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5), pp. 25-30.

와 일치한다. 이같은 인식은 오랜 전략문화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소연방 붕괴 이후 생겨난 사고이며, 푸틴과 같은 생각을 가진 지배 엘리트 그룹이 정권 내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 이후에 다른 지도자가 현 지배 엘리트 집단 내에서 등장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향 및 지정학적 목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⁷⁵⁾

2) 러시아의 다영역 강압과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장기간의 강압 캠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이다. 침공 결정에는 지역, 국제체제, 이념 등 여러 가지 동인이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도 수십 년 동안 갈망해 온 안보 이익과 지정학적 좌절감이 러시아의 전쟁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 러시아는 2021년 가을에 위기를 고조시켰다. 12월에 제출한 최후통첩은 우크라이나의 중립성, 나토 가입 불가 서약, 미국의 안전 보장, 현재 나토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위기의 확대 국면으로 상황을 유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에 추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범위 내에 머물도록 하며, 미국이 요구 사항 중 적어도 일부를 수용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크렘린은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지위와 관련하여 서방 측의 최소한의 양보를-나토 가입 포기 문서화-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크렘린이 보기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성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찾고, 유럽 안보 구조의 조정을 논의할 때 명목상이라도 참여하는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 무력 사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토의 대응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제시한 최후통첩의 일부조차 수용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다.⁷⁶⁾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크림 합병과 돈바스 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시도한 다영역 강압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강압의 강도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진행되었다. 재래식 전력의 경우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는 회색 지대(Grey zone) 갈등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우크라이나가 학습 경험이 축적되면서 대처 방법을 익히는 등 러시아는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회색지대 갈등 전략은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피하면서 다양한 국가역량을 동원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하는

75) 글렐 파블로프스키(Gleb Pavlovsky)는 푸틴 주변 내부 인사 100여 명이 크렘린궁의 결정에 대한 '집단 푸틴(collective Putin)' 라벨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푸틴 같은 사람이 적어도 현재 집권 수뇌부 내에 100명은 있다는 의미로서 푸틴이 없더라도 또 다른 대표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David Lewis, *Russia's New Authoritarianism: Putin and the Politics of Order*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0); Mikhail Zygar, *All the Kremlin's Men: Inside the Court of Vladimir Putin* (New York: Public Affairs, 2016).

76) Dmitry Adamsky (2024), p 102.

대안적 전략이다.⁷⁷⁾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군과 일상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러시아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 시스템과 여론을 겨냥해 공격적인 사이버·공격 작전을 펼쳤다.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 용병 배치, 에너지 제한 위협 등을 통해 강압의 강도를 높였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러시아가 구상한 다영역 강압 구조에서 핵을 제외한 재래식 강압과 정보 강압을 동시에 실시했던 것이다. 초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술적으로는 크림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통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전략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등 서구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기존의 회색지대 전략을 포기하고 최대 강압인 전쟁을 선택했다.⁷⁸⁾ 반면에 랜드연구소의 사무엘 샤랍(Samuel Charap)은 2015년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조정된 강압(calibrated coercion)’으로 표현하면서, 돈바스에 있는 대리군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영향력의 레버 역할을 하는 지속적으로 “끓어오르는(simmering)” 갈등을 유지했다고 보았다. 러시아 정부는 갈등의 획기적인 확대를 추구하지 않았고 안정적인 휴전을 허용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강압의 정도를 일정 수준에서 조정하였다고 보았다.⁷⁹⁾ 그러나 러시아가 더욱 광범위한 목표와 수단을 사용하거나 우크라이나 정부를 거부하는 선에서가 아니라 키이우에서의 의사 결정을 통제하는 도구를 직접 장악하려는 의도(정권교체)로 전환했기 때문에 전면 침공을 감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최대치로 강압의 수준을 높인 결과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었다.

러시아의 전쟁으로의 강압 강도 상향 조절은 2014년 크림 합병과 돈바스 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익명의 개입과는 완전히 다른 직접 전투 참여 형식의 전쟁으로 수직 상승하였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직접 무력 공격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왜 직접 공격하는 최고 수준의 강압을 하였는가? 2014년 당시에는 전투 없이 익명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우크라이나를 모스크바의 영향권에 가두어 두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만일 러시아군이 위장하지 않고 직접 개입했다면 핵무장한 나토 동맹 세력이 확장된 러시아의 국경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면서 극도의 대립적인 대응책을 모색했을 것이다. 직접 개입 대신 러시아는 나토의 보복 위협을 줄이기 위해

77) Michael J. Mazarr, *Mastering the Gre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Carlisle, PA: US Army College, 2015), p. 58.

78) 우평균, “러시아의 회색지대 갈등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 『한국군사』, 제11호 (2022.6), pp. 14-15.

79) Samuel Charap, “Moscow’s Calibrated Coercion in Ukraine and Russian Strategic Culture September 2020,” George C. Marshall European Center for Security Studies, September 20, 2020, <https://www.marshallcenter.org/en/publications/security-insights/moscows-calibrated-coercion-ukraine-and-russian-strategic-culture-0> (검색일: 2024.11.20.).

제한된 수단과 익명성에 의존했다. 2022년 2월에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미국과 나토가 군사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가혹하게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데에 고무되었다.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압도적 제재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미 지상군이 대량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였다. 이 때 푸틴은 나토의 동쪽 확장을 막는다는 구실 하에 경제 보복과 우크라이나와의 1:1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을 갖게 되었다.⁸⁰⁾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가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정교하게 구축하려고 노력해 온 전략적 억제 및 다영역 강압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강압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실패하면서 동시에 성공이기도 하다. 고전적인 이론적 지표로 판단할 때, 러시아가 보여준 무력에의 의지는 강압적인 영향력의 무용성을 드러내 준다. 반면에 러시아의 규범으로 판단할 경우 침공은 강압적인 압력의 강력한 단계로의 전환에 불과하다. 러시아에게 억지는 수사적 위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쟁자에게 전략적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개입에 대한 내용이다. 이 때 사전적인 노력과 선제적인 행동은 필수적이다. 러시아는 강제력이 없는 강압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서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러시아는 강력한 영향력 행사로 이행했다. 따라서 2021년 가을 이후 러시아의 행동은 비강요적이고 무력적인 단일 강압 캠페인으로 보일 수 있다.⁸¹⁾

러시아는 침공 수개월이 지나면서 전선이 안정화되자 핵 부문에 대한 강압을 구사하면서 기존의 전장에서의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정보 강압과 더불어 다영역 강압 이론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내의 핵 시설을 점거하고 코돈(cordon) 위생 시설을 생산하는 등 핵조작을 진행함으로써 교차 영역 강제, 다영역 강압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서구의 대응력을 마비시키려 했다. 러시아의 핵 강압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앞둔 2024년 말의 시점에서도 재연되었다. 2024년 10월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북한군의 참전과 뒤이어 미국이 지원해 준 에이태킴스(Atacms)와 영국의 스톰 섀도우(Strom Shadow)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발사를 허용하자 푸틴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핵보유국 및 비핵국가 모두에 대해 러시아가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사용 교리를 바꾸었다.⁸²⁾ 교리 변경 직후 11월 21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인 드니프로(Dnipro)에 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장거리 핵 공격을 위해

80) 우평균 (2022), pp. 20-23.

81) Dmitry Adamsky (2024), p 103.

82) Maia Davies, "Putin approves changes to Russia's nuclear doctrine," BBC, November 19, 20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j4v0rey0jzo> (검색일: 2024.11.20.).

설계되었으며 전쟁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했다.⁸³⁾ 핵을 탑재하지 않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발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이면서 동시에 집권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전에 전세를 장악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의 위협에 대처하고 전쟁 성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강압의 강도를 높이면서 핵 강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러시아는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제공이 아닌 직접 개입하려고 생각한다면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서방이 깨닫게 하기 위해 국지적인 전장 수준에서 비전략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를 사용할 수 있다.⁸⁴⁾ 결국, 러시아의 다영역 강압은 전쟁의 전체 국면을 통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 러시아의 점령지 유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당분간 포기 등, 설사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끝내더라도 향후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다영역 강압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사태를 전개시킬 수 있다.

V. 결론

모든 국가에는 고유한 전략 문화가 있다.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러시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전략 및 군사 작전의 지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라는 변수의 영향력 측정에 난점이 있었던 전략문화 연구는 과학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 ‘전략 문화’의 개념이 부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전의 분석 구조가 현재 부적절하거나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과 크게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대량살상무기를 획득, 증식, 사용하는 이유, 인센티브, 합리성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⁸⁵⁾

83) Anastasiia Malenko, Tom Balmforth and Max Hunder, “Russia fired new ballistic missile at Ukraine, Putin says,” *Reuters*, November 22, 202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launches-intercontinental-ballistic-missile-attack-ukraine-kyiv-says-2024-11-21> (검색일: 2024.11.22.).

84) William Alberque, *Russian Military Thought and Doctrine Related to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Change and continuity* (Washington D.C.: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4), pp. 18-19.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는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략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 가능한 러시아 전략문화의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리더쉽과 고도의 능력을 갖춘 군대가 해결자로 나서는데 동의하며 이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전략문화는 국경을 넘어 분쟁에 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군대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

전략문화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 특정 사건이나 국면에서의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큰 제약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전략문화가 독립변수인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답하기에는 여러 모로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전략이라는 개념과 그 주요 구성요소를 종속변수로 삼아 군사전략이 전략문화에 미치는 영향 혹은 반대로 전략문화가 군사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전략문화 이론을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2014년 이후 이론 정립 노력을 가속화하기 시작한 시기에 나타난 주요 개념들 즉, 비대칭성, 전략적 억제, 다영역 강압이론 등에 기초하여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군사전략의 새 이론 틀인 다영역 강압의 구도를 일단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러시아는 침공 수개월이 지나면서 전선이 안정화되자 핵 부문에 대한 강압을 구사하면서 기존의 전장에서의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정보 강압과 더불어 다영역 강압 이론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 핵무기, 정보 영역의 중층적인 다영역 강압을 전쟁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구의 기준으로는 실패 요소가 많이 있지만, 러시아의 자체 기준으로는 충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짜르 알렉산더(Alexander) 3세는 “러시아가 가진 유일한 친구는 러시아의 육군과 해군”이라고 언급했고, 푸틴 역시 이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유럽에서 동맹은 고사하고 단 한 나라라도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는 고립된 환경에 놓였다. 그 결과, 북한과 동맹에 준하는 신조약을 체결하고 북한 무기의 도입과 군대 파견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이같은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유한 전략문화의 지향을 고수할 것이다. 동시에 군사전략의 일원화된 체계 및 철저한 계획화를 지향하는 러시아 군사사상과 군사문화의 특성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향후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구축한 지배 엘리트 계층

85) Jennie L. Johnson, Kerry M. Kartchner, and Jeffrey A. Larson, *Strategic Cultur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 7.

의 집단 정서를 감안할 때 국내적으로 ‘포위된 요새론’을 계속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다영역 강압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강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전혜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전략문화: 위협 인식 변화와 방위 협력 진전』, 서울: 국립외교원, 2023.
- 김광현·서주영. “러시아와 북한의 공격적 전략문화에 관한 연구: 전략문화 형성의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8권 1호 (2024).
- 백자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략문화의 양상.” 『월간 군사』 제10호 (2022).
- 우평균. “러시아의 회색지대 갈등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 『한국 군사』 제11호 (2022).
- Adamsky, Dmitry. *The Russian Way of Deterrence: Strategic Culture, Coercion, and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4.
- Alberque, William. *Russian Military Thought and Doctrine Related to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Change and continuity*. Washington D.C.: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4.
- Aliyev, Nurlan, *Reassessing Russia's Security Poli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4.
- Foxwell, Andrew. *Russia's Strategic culture and Worldview: Policy Implications for UK and its All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Giles, Keir. *Moscow Rules: What Drives Russia to Confront the Wes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9.
- Grau, Lester W. *Soviet Non-Linear Combat: The Challenge of the 90s*. Leavenworth, KA: U.S. Army Compound Arms Center, 1990.
- Gray, Collin S. *Out of the Wilderness: Prime-time for Strategic Culture*. Washington D. C.: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2006. Herd, Graeme p. Understanding Russian Strategic Behavior: Imperial Strategic Culture and Putin's Operational Cod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2.
- Hil, Fional and Clifford G. Gaddy. *Mr Putin: Operative in the Kremli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5.
- Jasper, Scott. *Russian Cyber Operations: Coding the Boundaries of Conflict*.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20.

- Johnson, Jennie L. Kerry M. Kartchner, and Jeffrey A. Larson. *Strategic Cultur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 Kartchner, Kerry 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Crucible of Strategic Culture*. Washington D.C.: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2006.
- Kerrane, Evan. *Moscow's Strategic Culture: Russian Militarism in 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Quantico, VI: Marine Corps University, 2022.
- Kupchan, Charles A. *The Vulnerability of Empir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Lantis, J. S. "Strategic Culture: From Clausewitz to Constructivism." in J. Johnson, J. A. Larson & K. Kartchner (eds.). *Strategic Cultur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ulturally Based Insights into comparative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 Lewis, David. *Russia's New Authoritarianism: Putin and the Politics of Order*.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0.
- Lipman, Maria. "Putin's 'Besieged Fortress' and its ideological Arms." in Maria Lipman, Nikolay Petrov (eds.). *The State of Russia: what Comes Next?* London: Palgrave Pivot London, 2015.
- Mazarr, Michael J. *Mastering the Gre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Carlise, PA: US Army College, 2015.
- Raska, Michael. *Security Strategy and military Change in the 21st Century*. London: Routledge, 2015.
- Rumer, Eugene and Richard Sokolsky. *Etched in Stone: Russian Strategic Culture and the Future of Transatlantic Secur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0.
- Snyder, Jack.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77.
- Torkeson, Thomas D. *Ideas in Arms: The relationship of Kinetic and Ideological Means in America's Global War on Trror: Drew paper No. 2*. Maxwell Air Force bas,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2012.
- Tsygankov, Andrei p. *The Strong State in Russia: Development and Cri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Tsygankov, Andrey p. *Russia'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 Identity*.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6.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2010.
- Wilson, Richard W. *Compliance Ideologies: Rethinking Political Cul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Yurchenko, Denys. *Russian Strategic Culture and the War in Ukraine*. Philadelphia, PA: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4.
- Zygar, Mikhail, *All the Kremlin's Men: Inside the Court of Vladimir Putin*. New York: Public Affairs, 2016.
- Дугин, Александр. *ПРОБЛЕМЫ УГОЛОВНЫХ ПРАВООТНОШЕНИЙ ВИН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НАКАЗАНИЯ*. Londo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5.
-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взгляды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оск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1,
- Adamsky, Dmitry. "Christ-loving Diplomats: Russian Ecclesiastical Diplomacy in Syria." *Survival*, Vol. 61, No. 6 (2019).
- Antczak, Anna. "Russia's Strategic Culture: Prisoner of Imperial History?" *Polish Political Science Studies*, No. 60 (2018).
- Ashford, E. "In Praise of Lesser Evils. Can Realism Repair U.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101, No. 5 (2022).
- Becker, Jordan and Edmund Malesky. "The Continent of the Grand Large? Strategic Culture and Operational Burden Sharing in NATO."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1, No. 1 (2017).
- Bruusgard, Kristine Ven.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Survival*, Vol. 58, No. 4 (2016).
- Bruusgard, Ven.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Survival*, Vol. 58, No. 4 (2016).
- Cimbala, Stephen J. "Russian Threat perceptions and Security Policies: Soviet Shadow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The Journal of Power Institutions in Post-Soviet Societies*, No. 14-15 (2013).
- Combined Strategic Analysis Group (CSAG), United States Central Command. "A Look into the Origins of Russian Strategic Culture." *CSAG STRATEGY*

PAPER. (July 11, 2023).

- Eitelhuber, Norbert. "The Russian Bear: Russian Strategic Culture and What It Implies for the West." *Connections*, Vol. 9, No. 1 (2009).
- Glenn, John, "Realism versus Strategic Culture: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1, No. 3 (2009).
- Götz, Elias and Jørgen Staun. "Why Russia attacked Ukraine: Strategic culture and radicalized narratives."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43, No. 3 (2022).
- Gray, Colin S. "National Style in Strategy: The American Examp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2 (1981).
- Gray, Colin S. "Strategic Culture as Context: The First Generation of Theory Strikes Back."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5, No. 1 (January 1999).
- Glazer, Stephen G. "The Brezhnev Doctrine." *International Lawyer*, Vol. 5, No. 1 (1971).
- Igumova, Lyudmila. "Russia's Strategic Culture Between American and European Worldview."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24, No. 2 (2011).
- Johnston, A. I.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 Kari, Martti J. and Katri Pynnöniemi. "Theory of Strategic Cultur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Russian cyber threat perception." *Journal of Strategy Studies*, Vol. 46, No. 1 (2023).
- Kennan, George.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No. 25 (1947).
- Klein, Yitzhak. "A theory of Strategic Culture." *Contemporary Strategy*, Vol. 10, No. 1 (1991).
- Lantis, Jeffrey. "Strategic Culture and Tailored Deterrence."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30, No. 3 (December 2009).
- Libel, T. "Rethinking strategic culture: A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discursive-institutionalist approach."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3, No. 5 (2018).
- Libel, Tamir. "Rethinking Strategic Culture: A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Discursive Institutional Approach,"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 43, No. 5 (2020).
- Mearsheimer, J. J.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Foreign Affairs*, Vol. 93, No. 5 (2014).
- Monaghan, Andrew, " "An enemy at the gates" or "from victory to victory"?" Rus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84, No. 4 (2008).
- Reshentikov, A. "Great projects' politics in Russian History's hardly victorious end." *Demokratizatsia*, Vol. 19, No. 2 (2011).
- Skak, Mette. "Russia's Strategic Culture: the role of today's chekisty." *Contemporary Politics*, Vol. 22, No. 3 (2016).
- Vershinin, Aleksandr A., Alexei A. Krivopalov. "Russian Strategic Culture in Retrospect."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22, No. 2 (April-June 2024).
- Vidal, Nicholas H. "Enemy at the Gates: A Strategic Cultural Analysis of Russian Approaches to Conflict in the Information Domain." *Journa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Vol. 14, No. 2 (2023).
- Walt, Stephen M. "Back to the Future: World Politics Edition." *Foreign Policy*, Vol. 94, No. 7 (2015).
- Wendt, A.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 Wiltenburg, Ivor.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Russian Strategic Culture." *Atlantisch perspectief*, Vol. 44, No. 1 (2020).
- Гареев Махмут Ахметович. "Проблем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Krasnaya Zvezda*. October 8, 2008.
- Гареев Махмут Ахметович. "Характер будущих войн" *Право и безопасность*, No. 1-2 (2003 June).
- Кузнецов, Виктор Иванович, Юрий Ефимович Донсков, Олег Геннадьевич Никитин "К вопросу о роли и месте 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ы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оенная мысль*, No. 3 (2014).
- Чекинов, С. Г., С. А. Вогданов "Влияние непрямых действий на характер современной войны ЛА КОХ - О конфликте глоб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Военная мысль*, No. 6 (2011).
- Aron, Leon, "The Problematic Pages. In Memory of Alexander Solzhenitsyn." *The*

- New Republic*. Sept 24, 2008. <https://newrepublic.com/article/62070/the-pronlematic-pages> (검색일: 2024.11.10.).
- Charap, Samuel. "Moscow's Calibrated Coercion in Ukraine and Russian Strategic Culture September 2020." George C. Marshall European Center for Security Studies. September 20, 2020. <https://www.marshallcenter.org/en/publications/security-insights/moscows-calibrated-coercion-ukraine-and-russian-strategic-culture-0> (검색일: 2024.11.20).
- Loreto, Emiliano Di. "Know Your Neighbors: Russian Strategic Culture Toward External Threats." *Istituto Analisi Relazioni Internazionali*. October 21, 2023, <https://iari.site/2023/10/21/know-your-neighbors-russian-strategic-culture-toward-external-threats> (검색일: 2024.10.20).
- Nixey, James. "Expert Comment: Address Russian Rule-breaking." *Chatham House*. June 12, 2019. <https://www.chathamhouse.org/2019/06/address-russian-rule-breaking> (검색일: 2024.11.5).
- Malenko, Anastasiia, Tom Balmforth and Max Hunder. "Russia fired new ballistic missile at Ukraine, Putin says." *Reuters*. November 22, 202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launches-intercontinental-ballistic-missile-attack-ukraine-kyiv-says-2024-11-21> (검색일: 2024.11.22).
-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ext of Report 'Valdai Discussion Club Meeting,'" October 25, 2021. <https://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6975> (검색일: 2024.11.10).
-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NATO Says It won't Send Troops To Ukraine If Russia Invades." <https://www.rferl.org/a/ukraine-nato-troops-russia-invasion/31678264.html> (검색일: 2024.10.15).
- Solovey, Valeriy. "The True Story of How Russia's Foreign Policy Process Evolved." *The national Interes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February 28, 2019.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true-story-how-russias-foreign-policy-process-evolved-45812> (검색일: 2024.11.15).
- Surkov, V. "The Loneliness of the Half-Breed." *Russia in Global Affairs*. May 28, 2018. <https://eng.globalaffairs.ru/articles/the-loneliness-of-the-half-breed> (검색일: 2024.11.15).

The Kremlin. "Address at the 7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September 28, 2015, <http://en.special.kremlin.ru/events/president/news/50385> (검색일: 2024.11.16).

Балашова, Ольга "Герасимов рассказал, какую современную технику используют на маневрах 'Восток-2018'," *TASS*. September 9, 2018, <https://tass.ru/armiya-i-opk/5530438> (검색일: 2024.11.15).

Герасимов, В "Ценность науки в предвидени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урьер*. February 26, 2013. <https://i.twirpx.link/file/1297916> (검색일: 2024.11.15).

Characteristics of Russia's Strategic Culture and Military Strategy, and its Invasion of Ukraine

Woo, Pyung Kyun

Keywords

Russian strategic culture, asymmetric strategy, besieged fortress, cross domain coercion, War in Ukrain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re aspects of Russia's strategic culture and military strateg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order to explain the strategic culture, which is a comprehensive concept, it is examined through the prism of military strategy, and the outbreak of the war in Ukraine is an example. To this end, the paper explores the central elements of Russia's strategic culture, the key components of asymmetric strategies, and the characteristics that emerged during the invasion of Ukraine. Russia's strategic culture is shaped by two central factors: its vulnerability to external threats and its obsession with maintaining the status of a powerful state. This strategic culture is deeply rooted in history. The nature of centralized state governance and authoritarian rule can be traced back to Imperial Russia, the Soviet Union, and modern Russia. Additionally, the theory of a "besieged fortress" emerged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in response to the regime's crisis. This narrative raised awareness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enemies, and it has since become a key element of Russia's national narrative under President Putin in the 21st century. In the 21st century, Russia's military strategy has been doctrinally focused on asymmetry, strategic deterrence, and cross-domain coercion. Cross-domain coercion, in particular, is a comprehensive deterrence system that integrates nuclear, conventional, and informational power within a unified framework.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as part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applying this logic of cross-domain coercion, which forms a central component of its future military strategies. While the invasion of Ukraine is viewed as a failed coercion strateg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been

successful from the perspective of Russia's internal logic. Russia will likely continue to employ cross-domain coercion not only in the ongoing war in Ukraine but also in future conflicts, drawing on the lessons and experiences gained during this war.

[논문투고일: 2025. 4. 25.]

[심사의뢰일: 2025. 5. 21.]

[게재확정일: 2025. 6. 23.]

러-우 전쟁 해양작전 교훈과 한국 해군의 전략/전력 발전에 대한 함의

한종환*

- I. 서론
- II. 러-우 전쟁 주요 해양작전
- III. 해군전략/전력 발전 측면에서 교훈
- IV. 한국 해군의 전략/전력 발전에 대한 함의
- V. 결론

요약

이번 연구는 흑해에서 해양작전 분석을 통해 해군전략/전력발전 측면에서 교훈과 함의를 도출했다. 해군전략 발전 측면에서는 첫째, 우크라이나 해군의 사례처럼 해군전략의 수단이 목표와 방법을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이익 달성을 위한 해군전략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적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해군전략의 완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전시/위기시 적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거부하고, 해양우세 달성을 위해 해군/해병대 전력을 통합할 수 있는 전략 발전이 필요하다. 전력건설 측면에서는 첫째, 무인전력은 전체적인 전력구조의 틀 내에서 기존전력들과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우세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대형함정을 포함한 균형있는 해군력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핵심어 : 러-우 전쟁, 해양작전, 해군전략, 해군력 건설

* 대한민국해군 중령, 국제정치학 박사, 본 논문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임.

I. 서론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 3년을 경과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규모의 전쟁으로, 냉전 종식 후 국가 간 전쟁(interstate wars) 발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반전시킨 사건이다.¹⁾ 또한 그동안 개념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던 무인전(Unmanned Warfare), 사이버전(Cyber Warfare), 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 미래전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러-우 전쟁을 미래전장으로 진화를 이끄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²⁾

러-우 전쟁은 지상 중심의 전쟁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에서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이하 UAV)의 공격에 의해 파괴된 러시아의 탱크, 도로를 이동하고 있는 지상군의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의 이유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기인한 NATO의 동진, 크림반도/돈바스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 확보 등 영토와 관련된 것이다.³⁾ 전쟁의 시작도 러시아의 전차부대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진격한 영토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고,⁴⁾ 현재 주요 전선도 지상의 동부전선에서 교착상태를 유지 중이다.

자연스럽게 러-우 전쟁에 대한 군이나 학계의 관심과 연구, 전쟁교훈 분석은 지상작전에 집중되어 있다.⁵⁾ 또한 러-우 전쟁이 진화하고 있는 미래전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전⁶⁾, 사이버전⁷⁾, 하이브리드전⁸⁾, 우주전⁹⁾ 등의 측면에서 교훈을 도출한 연구도 많다.¹⁰⁾

1) 전재성, “세계 안보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포커스』 제2023권 제3호(2023), p. 3.

2) 김상배, “미래전의 시각으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제173호(2022), p. 1.

3) 김강녕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전개/시사점』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3), pp. 89-99.

4) 김상배(2022), p. 1.

5) 김홍철 등, 『세번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를 말하다』 (서울: 북코리아, 2024); 전재성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3), Hal Brands, *War in Ukraine: Conflict, Strategy, and the Return of a Fractured World* (New York: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24) 등

6) 강신욱, “인지전 개념과 한국 국방에 대한 함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9권 1호(2023), pp. 179-212.

7) 신범식·양정운,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영향에 대한 고찰,” 『러시아 연구』 제34권 1호(2024), pp. 129-165.

8) 최근대·나호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대응: 하이브리드전의 이론과 적용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54집(2022), pp. 1-31.

9) 최성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우주전 분석 및 양상, 그리고 우주기술 개발 시 고려사항,” 『우주기술과 응용』 제2권 2호(2022), pp. 169-186.

10) 설인효·배학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 지역에서 함의,” 『국방연구』 제66권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out of sight, out of mind)는 말이 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unoccupied), 소유할 수 없는(ownable) 공간인 해양은 육지에 비해 영토성(territoriality)¹¹⁾이 낮다. 따라서 해양에서 활동은 육지의 활동에 비해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해군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의미하는 해양맹목성(Sea Blindness)¹²⁾은 필연적이다. 러-우 전쟁에서도 해양맹목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¹³⁾ 덜 알려졌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러-우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활동이 흑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작전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지상작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다.

흑해를 포함한 해양도 중요한 전쟁영역이며, 해군력과 해양 관련 요소들은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¹⁴⁾ 특히, 모스크바함 침몰,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 이하 USV)과 같은 무인전력의 활약 등이 계속되면서 러-우 전쟁에서 해군력의 역할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해양에서 무인전력의 활약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 주목하여 무인전력 확보 등과 같은 단편적인 내용을 결론으로 도출하거나, 해군의 주요작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¹⁵⁾ 또한 작전적 수준에서 해상봉쇄, 지상목표 타격, 기뢰전 등과 같은 해군이 수행한 주요작전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¹⁶⁾

제2호(2023), pp. 75-109.

- 11)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으로, 주권과도 직접 연결되어 국가 성립의 기본이 된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전쟁(interstate wars)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 12)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과 해군력의 임무/역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 해양맹목성을 겪고 있고, 해양맹목성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과 정책수립은 미래 국가의 번영과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자세한 내용은 Christian Bueger and Timothy Edmunds, “Beyond Seabindness: A New Agenda for Maritime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Affairs*, Vol. 93, No. 6(2017), pp. 1293-1311. 참고.
- 13) B.J. Armstrong, “The Russo-Ukraine War at Sea: Retrospect and Prospect,” *War on the Rock*, April 21, 2022.
- 14) Seth Cropsey, “Naval Consideration in the Russo-Ukrainian War,”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5, No. 4(2022), p. 11.
- 15) Seth Cropsey(2022); Igor Delanoë, “Russia's Black Sea Fleet in the “Special Military Operation” in Ukrain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Report*, February 2024.
- 16) Abhijit Singh, “Geography, Technology, and Circumstance in the Use of Naval Power,” in Kartik Bommakanti(eds.), “The Military Lessons of the Russia-Ukraine War,” *ORF Special Report*, No. 220(2024); 홍성준·박성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50일간 해양전과 기뢰,” 『The Journal of KNST』 Vol. 7, No. 2(2024); 최영찬, “해군력 운용 관점, 『세번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를 말한다』(성남: 북코리아, 2024), pp. 351-388.

이번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단편적인 무기체계 확보와 작전적 수준의 분석을 넘어 광의의 차원에서 해군전략 발전과 전력건설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러-우 전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러-우 전쟁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한국 해군의 전략발전과 전력건설에 있어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러-우 전쟁 분석을 통해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속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성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쟁교훈을 분석하기 위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자국의 성과를 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했다. 따라서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미 랜드연구소(RAND),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 해군연구소(USNI) 등 외부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러-우 전쟁에서 주요 해양작전을 살펴보고, 전략발전과 전력건설 측면에서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러-우 전쟁의 교훈을 한국 해군에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해군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러-우 전쟁 주요 해양작전

1. 러시아 해군함정 증원, SLOC 봉쇄 등을 통한 유리한 전쟁 여건조성

개전 이전과 개전 초 러시아 해군은 함정의 기동성을 활용하여 흑해함대 전력증원,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s, 이하 SLOC) 봉쇄, 지상 핵심목표 타격 등을 통해 전쟁수행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전 당시 러시아 흑해함대는 대형함정 12척(순양함 1척, 호위함 5척, 잠수함 6척) 등을 포함하여 총 68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우크라이나 해군은 대형함정 1척(호위함)과 소형 경비함정 위주로 총 16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흑해함대 전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 해군을 압도했지만, 개전 이전 잠수함 1척, 상륙함 6척 등을 지중해에서 흑해로 이동시키면서 흑해함대 전력을 보강했다.¹⁷⁾ 개전 이후 러시아 해군의 작전수행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러시아 해

17) Covert Shores, "Timeline of 2022 Ukraine Invasion: War in the Black Sea(2025)," <http://www.hisutton.com/Timeline-2022-Ukraine-Invasion-At-Sea.html>.

군은 전쟁 개시 전 함정의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양식/질석 측면 우크라이나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쟁여건을 조성했다.

〈표 1〉 러-우 전쟁 당시 러시아(흑해함대)와 우크라이나 해군력 비교¹⁸⁾

구분	러시아(흑해함대)	우크라이나
순양함	1척	.
호위함	5척	1척
초계함, 소형경비정	36척	12척
상륙함	10척(증원 6척)	2척
소해함	10척	1척
잠수함	6척(증원 1척)	.
계	68척	16척

둘째, 개전 초 러시아 해군의 SLOC 봉쇄는 전쟁지속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략적 수준에서 전쟁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작전이었다. 12척의 대형함정을 포함하여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한 흑해함대는 개전 초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대부분의 SLOC을 봉쇄하여 해상무역을 통제했다.¹⁹⁾ 전쟁 개시와 동시에 러시아는 흑해 북서부 지역을 통항금지구역으로 설정했고,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이동을 제한하는 해상봉쇄로 흑해를 통한 국제무역을 차단했다. 또한 흑해와 아조브해를 연결하는 케르치해협을 봉쇄했고, 오데사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주요항구와 해군기지 근처에 함정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흑해를 통한 무역과 전쟁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물자·장비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었다.²⁰⁾

셋째, 러시아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의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으로 지상작전을 지원했다. 러시아는 지상 핵심표적 타격에 있어 지상 발사대를 이용한 공격을 선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상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의해 탐지되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상함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은밀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원거리 지상목표 타격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되었다.²¹⁾ 개전 당시 러시아 흑해함대는 사거리 약 2,000km의 칼리브르(Kalibr) 지상타격 미사일을 탑재한 다수의 신형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함정별 미사일 탑재 능력을 고려하면 흑해함대는 92발의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고, 러시아는 이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내륙의 주요 표적에

18) IISS, *Military Balance 2022*(London: Routledge, 2022), p. 205, 212.

19) Seth Cropsey(2022), p. 24.

20) B.J. Armstrong(2022).

21) Abhijit Singh(2024), p. 12.

대한 원거리 정밀공격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우크라이나의 육상 표적으로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 중 12.5%가 수상함과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해군함정에 의해 발사된 것으로 나타났다.²²⁾

2. 모스크바함 침몰

흑해함대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 오데사 남쪽 약 120km 해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상 발사 미사일(Neptune, 넵툰) 2발에 피격되어 예인 중 침몰했다.²³⁾ 일부에서는 모스크바함의 침몰에 대해 대형함정 시대의 종말, 해전에서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다.²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다.

미 해군연구소(USNI)에서는 피격 당시 모스크바함이 대함미사일 방어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스크바함을 “장님(blind)”으로 표현했다.²⁵⁾ 모스크바함을 공격한 넵툰 미사일도 방어가 불가능한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넵툰 미사일은 미국이 1970년대 개발한 하푼(Harpoon) 미사일 기반이며, 최대속도는 약 900km/h(마하 0.8)로 초음속도 아닌 비교적 느린 미사일이다. 모스크바함이 보유한 축차적 대공방어수단인 장거리/단거리 대공미사일과 근접방어무기체계, 기만체계 등을 이용하여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스크바함은 1980년대 초반 함정 건조 당시 탑재했던 회전식 구형 대공레이더를 그대로 장착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공방어체계가 노후되었고 적절한 성능개량도 부족했다. 또한 피격 당시 모스크바함은 장거리/단거리 대공미사일과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레이더가 평상시와 동일한 함미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모스크바함이 넵툰 미사일을 탐지하지도 못했고, 대공방어체계를 운용할 준비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스크바함은 대형함정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기보다 대형함정 도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적시적인 성능개량의 필요성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2) Igor Delanoë(2024), p. 8.

23) Heather Mongilio, “Updated: Russia Says Damaged Cruiser Moskva Sank Under Tow Headed to Black Sea Homeport,” *USNI NEWS*, April 23, 2022.

24) Sidharth Kaushal, “The Death of Gorshkov’s Navy: The Future of the Russian Surface Fleet,” *RUSI Commentary*, June 1, 2022.; John Grady, “Battles in the Black Sea Changing the Character of Naval Warfare, Experts Say,” *USNI News*, June 13, 2024.

25) Sam Lagrone, “Warship Moskva was Blind to Ukrainian Missile Attack, Analysis Shows,” *USNI News*, May 6, 2022.

모스크바함 침몰은 상징적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해양에서 작전/전술적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이 컸다. 모스크바함 침몰 후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 해군의 지상 발사 유도탄 위협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최신 호위함 등을 포함한 대형함정을 흑해 연안 외곽으로 이동시켰고, 소형경비정 일부만 흑해 서부지역에 배치하여 해상경계를 담당하게 했다. 러시아 대형함정들이 흑해 연안에서 멀어지면서 개전 초 러시아가 확보했던 스네이크섬(the Snake Island)에 대한 대공방어가 어려워졌고, 이는 2022년 6월 30일 우크라이나가 스네이크섬을 탈환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⁶⁾ 따라서 모스크바함 침몰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제한했고, 러시아 해군의 해양우세 약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 것이다.

3. 무인전력(USV/UAV 등)의 활약

러-우 전쟁에서 USV/UAV와 같은 무인전력은 함정, 항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육상 지휘시설과 같은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러-우 전쟁을 최초의 드론 전면전("the First Full-Scale Drone War")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²⁷⁾ USV는 러-우 전쟁 이전부터 군사적 수단으로 운용되었지만, 대규모 USV가 운용된 것은 러-우 전쟁이 최초이다.²⁸⁾ <표 2>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침몰 또는 손상된 러시아 해군 함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러시아 해군함정 피해('25. 3월 기준)²⁹⁾

수 단	손 상	격 침	계
USV	7척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상륙함 1척, 기뢰전함 1척, 상륙정 1척)	5척 (초계함 2척, 상륙함 1척, 기뢰전함 1척, 경비정 1척)	12척
UAV	2척 (경비정 2척)	1척 (상륙정 1척)	3척
미사일	11척 (호위함 2척, 초계함 1척, 상륙함 6척, 잠수함 1척, 정보함 1척)	3척 (순양함 1척, 초계함 1척, 상륙함 1척)	14척
기 타	2척 (초계함 1척, 상륙정 1척)	-	2척
계	22척	9척	31척

26) Seth Cropsey(2022), p. 27.

27) "Russia and Ukraine are Fighting the First Full-Scale Drone War," *Washington Post*, December 22, 2022.

28) Jared Malsin, "Ukraine's Sea Drones Alter Balance of Power in the Black Sea," *Wallstreet Journal*, August 11, 2023.

29) Covert Shores(20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임.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의해 격침 또는 손상을 입은 러시아 해군함정의 약 50%(15척)가 USV/UAV와 같은 무인전력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5월 우크라이나 UAV의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 소형경비정(20톤급)이 피해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USV/UAV는 해상표적에 대한 공격/정찰뿐만 아니라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22년 10월에는 7척의 USV와 9대의 UAV가 러시아 함정이 정박한 항구에 침투하여 공격하기도 했다.³⁰⁾

대형함정이 거의 없었던 우크라이나 해군은 무인전력의 활약으로 러시아 해군에게 수세적인 상황을 강요했고, 러시아 해군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제한하는 해양거부를 달성했다. 우크라이나는 소형·저비용의 무인전력을 활용하여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흑해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고, 흑해에서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킨 것이다.³¹⁾ 약한 국가가 강한 상대방에게 비대칭 수단으로써 무인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³²⁾

III. 해군전략/전력 발전 측면에서 교훈

1. 해군전략 발전 측면

가. 전략의 3요소 간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해군전략 수립·시행 필요

목표(ends), 방법(ways), 수단(means)은 전략을 정의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들이다.³³⁾ 목표(ends)는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 또는 최종상태이며, 방법(ways)은 목표달성을 위해 가용자산을 운용하는 술(art)과 과학(science)이다. 수단(means)은 목표달성을 위해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유·무형 자산을 의미한다.³⁴⁾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기획의

30) Elio Calcagno, "The Naval Domain," in Alessandro Marrone(eds.), *Russia-Ukraine War's Strategic Implications*(Roma: IAI, 2024), p. 38.

31) Jared Malsin(2023).

32) HI Sutton, "Uncrewed Platforms Have Been Critical to Ukraine's Success in the Black Sea," *RUSI Commentary*, August 20, 2024.

33) Arthur Lykke,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in Joseph Cerami and James Holcomb(eds.),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Pennsylvania: US Army War College Press, 2001), pp. 179-184.

34) 박창희, 『군사전략론』(서울: 플래닛미디어, 2023), p. 101.

일반적인 절차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선행되고, 이후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수단의 한계가 목표와 방법의 설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적용이 전쟁 수행 개념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최근의 상황은 더욱 그러하다.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단을 기반으로 목표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전/전술적 측면은 단기적 차원이고, 수단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구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군사전략은 군사력 운용(용병)뿐만 아니라 군사력(수단)의 확보와 같은 양병까지 포함한다.³⁵⁾ 따라서 전략기획의 본질적 측면에 집중한다면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는 지향점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단이 목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선행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한 후 그에 상응하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흑해에서 해양작전 상황을 보면 다수 대형함정을 바탕으로 압도적 우세를 유지했던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의 약 50%가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은 일부 소형경비정의 활동이 전부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해양작전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전적 수준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해양작전을 수행한 것과 우크라이나 해군이 해군전략의 관점에서 목표-방법-수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양전략을 수립·시행했는가는 별개라는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러-우 전쟁 발생 당시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 흑해 함대에 비해 함정 총 척수뿐만 아니라 대형함정의 보유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열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이 추구할 수 있는 해군전략의 목표와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의 해군전략 수행은 전략의 목표에 따라 해군력을 건설하고 운용한 결과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휘부의 해양맹목성(Sea Blindness)으로 인해 소형함정들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거부 추구가 불가피한 결과였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물의 주요 생산지이며, 러-우 전쟁 발생 직전 우크라이나 전체 무역의 40% 정도가 농산물이었다고,³⁶⁾ 농산물의 90% 이상이 흑해 SLOC을 통해 수출되었다. 따

35) 드루(Drew)와 스노우(Snow)는 군사전략을 군사력 건설, 배치, 운용,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조율로 정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Dennis Drew and Donald Snow, *Making Twenty-First-Century Strategy: An Introduction to Modern National Security Processes and Problems*(Maxwell: Air University Press, 2006), p. 103.

36) European Parliamentary, "Ukrainian Agriculture from Russian Invasion to EU Integration,"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Briefing*, April 2024, p. 1.

라서 흑해 SLOC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해군력 건설과 대형함정 확보는 우크라이나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1991년 소련에서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 해군 지도부는 이러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시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의 50%를 인수할 수 있었으나 지휘부의 안일한 판단과 예산부족, 육군 중심의 정책 등으로 약 20%의 함정만 인수했고,³⁷⁾ 신규 건조 중이었던 대형함정의 인수도 거부했다. 결국 우크라이나 해군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해양과 해군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해군은 소형함정들만 보유한 해군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의 목표와 방법도 제한하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러시아에 대해 소형 무인전력(수단)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해상 게릴라전(방법)을 통해 해양거부(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 해군이 해양거부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구상한 결과가 아니다. 반대로 과거 우크라이나 해군 지휘부의 무지함으로 소형함정들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해양거부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러-우 전쟁은 수단이 목표와 방법을 제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크라이나 해군의 작전적 성공과 전략적 실패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나. 해양거부 달성 등 해양작전에 기여하는 해병대의 역할 확인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해안방어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러-우 전쟁 시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지대함 미사일, 다연장 로켓 등을 이용하여 러시아 해군함정을 공격했고, 흑해함대 함정의 자유로운 해양사용과 기동을 거부했다. 미 해병대 부사령관 마호니(Christopher Mahoney) 대장은 “러-우 전쟁의 흑해 사례를 보면 장거리 정밀타격수단을 갖춘 소형의 분산된 해병부대가 다수의 러시아 해군함정을 공격하여 흑해 연안의 기동로를 개방했고, 이것이 러-우 전쟁에서 미 해병대의 가장 큰 교훈”이라고 언급했다.³⁸⁾ 미 해군 참모차장 킬비(James Kilby) 대장도 해병대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해병대가 항상 단방향(해양 → 해안)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러-우 전쟁을 통해 연안에서 해양우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해병대의 역할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³⁹⁾

37) Jared Malsin(2023).

38) 미 CSIS 미래전 토론회 발언(24.4월). <https://www.youtube.com/watch?v=cLmcqy5vJv4&list=Wl&index=15&t=1184s>.

39) 미 CSIS 미래전 토론회 발언(24.4월). <https://www.youtube.com/watch?v=cLmcqy5vJv4&list=Wl&index=15&t=1184s>.

그동안 해병대는 해군이 확보한 해양우세를 바탕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생각되었지만, 흑해에서 해양작전은 해군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해양우세와 해양거부 달성에 있어 해병대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병대는 해군이 확보한 해양우세를 바탕으로 단방향(해양 → 해안)으로 이동하는 부대가 아니라, 육지에서 해군의 해양우세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양방향(해양 ↔ 해안)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2. 전력건설 측면

가. 무인전력 발전의 가속화는 전체적인 전력구조의 틀 내에서 추진

1990년 걸프전에서 감시/정찰과 같은 군사적 임무에 UAV가 본격적으로 투입된 후 무인전력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 임무를 수행했고, 2020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는 UAV가 정찰-기만-공격의 연속된 작전을 수행했다. 무인전력이 전쟁 수행의 보조가 아닌 핵심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⁴⁰⁾ 하지만 지금까지 UAV가 투입되어 효과를 거둔 전쟁은 군사력이 강한 국가(미국 등)가 약소국(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해 운용하거나 군사력이 유사한 국가 간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러-우 전쟁은 다르다. 군사력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 현저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UAV와 같은 무인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했다. 러시아 지상군의 주력 탱크를 파괴했고, 해군의 주력이었던 모스크바함에 대한 감시/정찰 및 교란 등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했다. 그동안 강대국이 전쟁 수행의 보조수단으로 운용했던 무인전력이 약소국의 입장에서 군사력이 강한 국가에 대해 효과적인 비대칭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러-우 전쟁을 계기로 수직적(임무와 능력 등 질적 발전)·수평적(운용국가의 확대 등) 측면에서 무인전력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해양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러-우 전쟁의 해전에서 USV/UAV의 혼합공격과 특히, USV의 “자살공격”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흑해에서 무인전력을 활용한 해전의 양상은 대형 수상함정의 취약성 증가 등 미래 해전의 양상 변화를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며,⁴¹⁾

ex=15&t=1184s.

40) 김문국, “우크라이나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드론 역할분석 및 발전방향 고찰,” 『KRIT Issue Paper』 Vol. 8(2023), pp. 1-9.

41) Scott Savitz and William Courtney, “The Black Sea and the Changing Face of Naval Warfare,” *Rand Corporations Commentary*, October 31, 2023.

해군 드론전 시대(the Age of Naval Drone Warfare)가 도래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⁴²⁾ 러-우 전쟁에서 USV/UAV가 보여준 가시적인 성과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주장은 방어무기체계의 개발 가능성, 무인전력의 공격 실패사례, 작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보면 해양에서 새로운 공격무기의 등장으로 당시에는 기존의 전력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경우가 많았지만, 결국 방어무기체계의 개발 등으로 이러한 주장이 정당성을 잃어버린 사례가 많다. 19세기 말 프랑스 해군은 어뢰정(어뢰를 탑재한 소형함정)과 잠수함의 등장으로 기존 해전에서 주력함정으로 운용되던 대형함정의 취약성은 증가되어 해전의 전개 양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명 어뢰정과 잠수함의 등장은 해전의 전개 양상을 바꾸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해군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과대평가했다. 또한 어뢰정과 같은 소형함정의 제한사항(특히 내구성 등)과 무엇보다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어뢰정의 전술적 이점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들을 과소 평가했다. 대함미사일의 등장도 유사한 경우이다. 1966년 소련제 스틱스(Styx) 미사일에 의해 이스라엘 해군함정인 엘리엇함(Eilat)이 침몰한 후 대함미사일은 해군함정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구축함, 근접방어무기체계 및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대공미사일의 발전과 전자전 체계 등 대함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축차적 대응수단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공격과 방어의 상호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⁴³⁾ 결국 특정 무기체계의 등장 당시에는 기존의 전력을 무력화시킬 만큼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격과 방어무기체계 개발의 역학(dynamics)에 따라 대항책과 전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흑해에서 무인전력의 성공적인 활약도 중요하지만, 무인전력의 공격이 실패한 경우도 살펴보아야 한다.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USV에 의해 공격을 받은 함정은 대부분 소형경비정, 상륙함, 상륙정 등 방어능력이 부족한 함정들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해군의 USV 공격이 실패한 사례도 10회 이상이다. '23년 5월에는 러시아 정보함 이반 후르스(Ivan Khurs)가 14.5mm 기관총 등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USV 3척의 공격을 격퇴했고, 같은 해 6월에도 러시아 정보함 프리아조프(Priazovye)가 근접방어무기체계 및 14.5mm 기관총을 이용하여 USV 6척의 공격을 방어하고 전부 격침시켰다.⁴⁴⁾ 또한 '23년 9월에는 우크라이

42) HI Sutton(2024).

43) Sidharth Kaushal, "Ukraine's Uncrewed Raid on Sevastopol and the Future of War at Sea," *RUSI Commentary*, February 2, 2023.

44) Covert Shores(2025).

나 USV 11척이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했으나 경계 중이었던 러시아 해군의 경비함, 헬기에 의해 격퇴되었다. USV의 공격은 방어능력이 덜 갖추어진 상륙함, 상륙정, 소형경비정 등에는 효과적이지만 대함/대공 방어능력이 갖추어진 함정에 대한 작전효과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셋째, 무인전력의 작전효과에 대해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무인전력은 분명히 전술적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지만, 현대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다. 흑해에서 USV/UAV의 많은 활약이 있었지만 여전히 러-우 전쟁은 지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유하고 있고 전쟁은 고착되어 있다.⁴⁵⁾ 역사적으로도 러-일 전쟁 당시 신무기였던 어뢰정이 아서항(Port Arthur)과 같은 잘 방어된 항구에 대해 기습공격을 수행하여 전술적 효과를 거두었지만, 러-일 전쟁에서 해양작전의 승패는 어뢰정이 아니라 전통적인 형태의 해전에 의해 결정되었다.⁴⁶⁾

해양에서 무인전력의 위협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러-우 전쟁이 무인전력에 의한 해전의 양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하지만 무인전력의 가시적 성과에만 주목하지 않고, 대응책의 개발 가능성, 작전효과 등을 고민하고 전체적인 전력발전의 틀에서 무인전력 발전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무인전력을 기존전력과 효과적으로 통합, High-Low Mix 효과 극대화

무인전력의 활용 측면에서 러-우 전쟁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인전력이 기존 유인전력과 통합되면서 작전효과가 극대화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무인전력의 작전효과가 단지 무인전력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미사일/상용위성 등 기존의 전력들과 효과적으로 통합되면서 작전효과가 극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미 해군 유럽/아프리카사령부 전략효과 부장 매티스(Michael Mattis) 준장은 미 CSIS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USV/UAV와 장거리 순항/대함미사일의 복합적 사용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고(changed the game), 이러한 측면에서 러-우 전쟁의 해양작전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시험할 수 있는 흑해 연구소(the Black Sea Laboratory)라고 언급했다.⁴⁷⁾

45) Steven Pifer, "Russia-Ukraine after Three Years of Large-Scale War," *The Brookings Institutions Commentary*, February 19, 2025.

46) Sidharth Kaushal(2023).

47) John Grady, "Black Sea Conflict Informing U.S. Navy Unmanned Systems, Says Admirals," *USNI News*, February 28, 2025.

우크라이나는 UAV를 이용하여 모스크바함의 위치를 확인했고, UAV를 지속적(의도적)으로 노출하여 모스크바함의 대공 피로도를 강요하였으며 집중도를 분산한 후 지대함 미사일(넵튠)을 이용하여 모스크바함을 공격하여 격침시켰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UAV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우크라이나의 UAV 운용개념은 '23년 미 CSBA에서 제시한 “의도적 피탐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tection)”와 유사하다. 무인전력이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비용의 무인전력을 의도적으로 적에게 노출시켜 적을 억제하고, 피로도를 강요하며 집중도를 분산하는 개념이다.⁴⁸⁾

또한 우크라이나는 다수/다종의 무인전력을 상용위성(스타링크 등)과 통합하여 신속한 지휘통제를 통해 OODA(Observe 관찰, Orient 판단, Decide 결심, Act 행동) 루프를 단축함으로써 무인전력의 분산성과 치명성을 극대화했다. 우크라이나 USV/UAV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한 가능자(enablers)는 바로 스타링크와 같은 대용량, 양방향 위성통신 체계였다. 만약 러-우 전쟁이 수년 일찍 발발하여 스타링크와 같은 상용 위성통신체계가 없었다면 러-우 전쟁에서 무인전력이 지금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⁴⁹⁾ 실제로 '23년 10월 Space X는 스타링크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인전력에 대한 스타링크 위성통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스타링크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스타링크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⁵⁰⁾ Space X의 스타링크 운용 중단 발표 후 우크라이나 USV들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러시아 해군의 크림반도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¹⁾ 무인전력이 위성통신 등 지휘통제체계와 단절될 경우 작전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결국 러-우 전쟁에서 무인전력의 활약은 기존의 유인전력들과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전력의 승수효과(synergy)를 창출한 것이다. 무인전력이 미래전을 수행하는 주요 핵심전력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무인전력은 만능(萬能)한 전력이 아니라 유능(有能)한 전력으로 기존의 전력구조(유인전력, 지휘통제체계 등)와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야 작전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무인전력은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결정적 전력(a force decider)이라기 보다는 기존 유인전력의 작전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력 증폭자(a force multiplier)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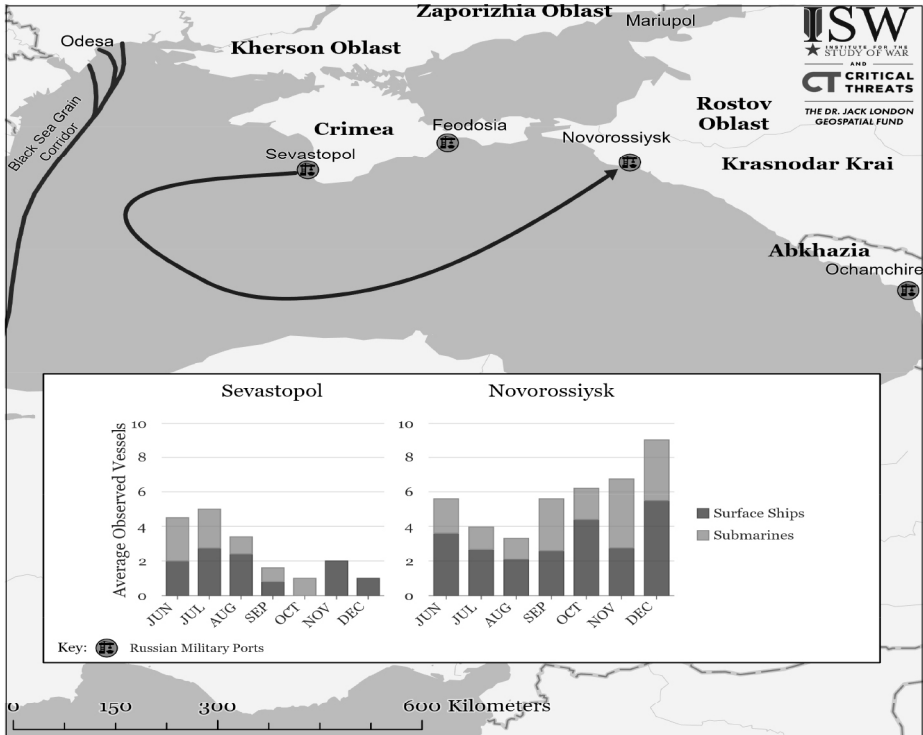
48) Thomas Mahnken, Travis Sharp, Grace Kim, *Deterrence by Detection: A Key Role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in Great Power Competition*(Washington, D.C.: CSBA, 2020), pp. 1-41.

49) HI Sutton(2024).

50) 임상수,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크라 스타링크 군사목적 활용 제한,” 『연합뉴스』 2023.2.9.

51) Covert Shores(2025).

다. 해양우세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대형함정 확보

〈그림 1〉 '23.6 ~ 12월 러시아 흑해함대 함정 이동⁵²⁾

개전 초 러시아는 모스크바함을 포함한 대형함정을 흑해에 사전 배치한 후 해양우세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흑해 SLOC을 봉쇄했다. 이후 러시아는 흑해에서 해양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모스크바함과 동일한 슬라브급 순양함 2척(마샤 유스티노프함[Marshall Ustinov], 바라야그함[Varyag])을 포함하여 지중해에 전개 중이던 대형함정을 흑해로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튀르키예의 해협차단으로 실패했다.⁵³⁾ 또한 우크라이나 해군의 USV/UAV 통합운용, 연안방어 미사일 등의 활약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력들은 흑해 서부에서 활동이 제한되자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철수하여 동쪽의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하면서 흑해에서

52)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Ukraine Strike Have Changed Russian Naval Operations in the Black Sea,"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ukrainian-strikes-have-changed-russian-naval-operations-black-sea>.

53) 러-우 전쟁 개전 3일 후인 2월 27일 튀르키예는 몽트뢰 협약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함정의 보스포루스 및 다르다넬스 해협 통항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해군이 지중해를 통해 흑해로 함정을 증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러시아의 해양우세가 약화되었다.⁵⁴⁾ 이후 '23년 6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까지 공격하자 흑해함대 전력들은 흑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고, 해양우세 약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23년 흑해함대 기지 세바스토폴에 전개된 러시아 해군함정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흑해 북동부의 노보로스스크에 전개된 함정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러시아 해군은 흑해의 주요 전장이었던 흑해 북서부의 크림반도 근처에서 대형함정을 이탈시키면서 해양우세가 약화되었고, SLOC이 개방되면서 흑해에서 힘의 균형이 변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 흑해함대 함정 대부분이 흑해 북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해양우세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흑해 SLOC을 통한 곡물 수출량은 매달 약 600만톤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해군의 활약으로 러시아 해군이 흑해 북서부에서 이탈한 상황에서도 '24년 9월 기준 곡물 수출량은 매달 약 300만톤으로 50% 정도 감소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⁵⁵⁾ 즉 현재도 제한적으로 SLOC이 개방된 상태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효과적인 게릴라전 수행으로 흑해함대 대형함정을 흑해 북서부에서 이탈시켰지만, 우크라이나 해군도 연안방어 위주의 소형함정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흑해에서 해양우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SLOC 개방이 제한되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현재 흑해의 상황은 콜벳(Corbett)이 언급한 것처럼 해양우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SLOC 보호할 수 있는 전개 가능한 대형함정이 없는 상태로 어느 한쪽도 완벽하게 해양우세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uncommanded sea)⁵⁶⁾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안전하고 자유로운 SLOC 사용 보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양에 전개하여 전력을 현시하고 해양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형함정이 필요한 것이다.

IV. 한국 해군의 전략/전력 발전에 대한 함의

러-우 전쟁 해양작전 교훈은 한국 해군의 전략/전력 발전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한국 해군과 우크라이나 해군은 작전환경, 위협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54) Stavros Atlamazoglou, "The Russian Navy Is 'Slowly Sinking' in the Black Sea," *The National Interest*, November 20, 2024.

55) "Russia's Renewed Attacks on Ukraine's Grain Infrastructure: Why Now? What Next?" *the CSIS Critical Question*, November 25,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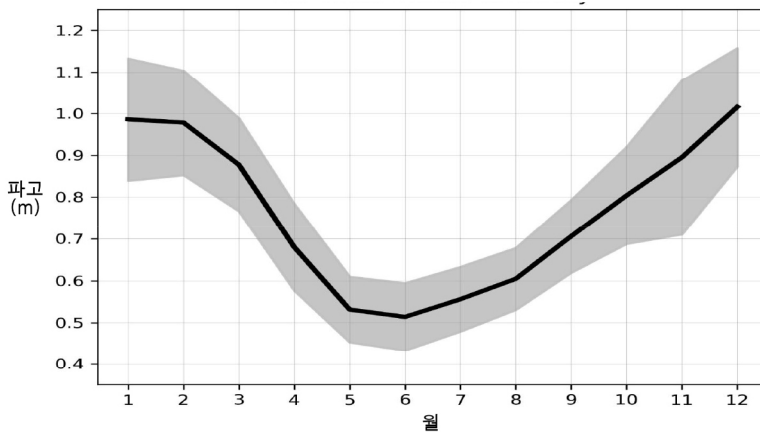
56) Geoffre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4th edition*(London: Routledge, 2017), p. 196.

러-우 전쟁의 해양작전 교훈을 참고하되, 한국 해군에 적합하도록 아래 조건들을 고려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1. 한국 해군에 적용 시 고려사항

첫째, 해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해역의 지리적 환경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러-우 전쟁의 해양작전 주요 전장이었던 흑해는 내해형(landlocked)의 폐쇄된 해양이다. 흑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남쪽 접경에 있는 내해의 형태로 보스포러스 해협이 대양(지중해)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다. 따라서 전시 및 위기시 우크라이나 해군의 입장에서는 SLOC 보호를 위해 보스포러스 해협 근처만 중점적으로 보호하면 된다. 또한 흑해는 폐쇄된 해역의 특징으로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겨울철(12월~2월)에 평균 파고가 1m로 가장 높았다가 6월에는 평균 파고가 0.5m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흑해는 개방된 해양 대비 상대적으로 파고가 낮은 내해형 해양으로,⁵⁷⁾ 소형 무인전력이 작전하기 용이한 환경이다.

<그림 2> 흑해의 연평균 파고⁵⁸⁾



반면 한국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나아가 한국 국민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해양을 포함하는 광활한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만 보더라도

57) Salvatore Causio, et al., "The Black Sea Near-Past Wave Climate and Its Variability: a Hindcast Study," *Frontiers in Maritime Science*, Vol. 11(2024), p. 7.

58) Salvatore Causio, et al.(2024), p. 7.

라도 겨울철(12월 ~ 2월)에는 평균 파고가 2m 정도 높았다가 6월까지 다소 낮아지지만 여름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다시 1.5m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⁵⁹⁾ 단적으로 흑해에 대비해서 파고가 거의 2배 이상이고, 인도-태평양까지 고려하면 한국 해군의 작전환경은 흑해와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파고는 해군함정의 임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고, 이러한 작전환경의 차이는 임무해역에서 운용 가능한 함정의 규모(size)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러-우 전쟁 간 흑해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한 USV/UAV와 같은 소형 무인전력이 한국 해군의 작전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흑해에서 무인전력의 활약은 상대적으로 파고가 낮은 폐쇄된 해양(confined water)에서는 가능했지만, 개방된 대양에서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되는 것이다.⁶⁰⁾

둘째는 위협수준 측면에서 한국 해군은 다수의 최신 대형함정을 보유한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다. 러-우 전쟁 시작 당시 우크라이나는 1척, 러시아 흑해함대는 12척의 대형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해군과 인접한 주변국 해군의 상황은 다르다. 2023년 기준으로 잠수함과 호위함 이상 주요 대형 전투함정의 척수를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약 160척, 일본 해상자위대는 약 70척이며 한국 해군은 약 40척으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약 25%, 일본 해상자위대의 약 57%의 대형 전투함정을 보유했다.⁶¹⁾ 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강화 추세를 고려하면 최신 대형함정 보유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과학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공격과 방어무기체계 발전 역학(dynamics)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어뢰정과 대함미사일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위협의 등장은 결국 방어체계가 개발되어 위협이 상쇄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해양에서 USV/UAV와 같은 무인전력의 활약은 주목해야 하지만 결국 그것이 기존의 전력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전력구조에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러-우 전쟁의 해양작전 주요 교훈을 고려하되, 전장환경, 위협, 과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한국 해군에 적합하도록 적용시켜야 한다.

59) Ho-Sik Eum, et al., "Wave Energy in Korean Seas from 12-Year Wave Hindcasting,"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8(2020), p. 19.

60) John Grady(2025).

61) IISS, *Military Balance 2023*(London: Routledge, 2023), pp. 237-268.

2. 해군전략 발전 측면에서 함의

가. 해군전략의 완전성 제고를 위한 목표, 방법, 수단의 균형적 추구

한국 해군은 우크라이나 해군처럼 해군전략의 수단이 목표와 방법을 제한하지 않도록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수단을 적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2021년 한국 해군은 22년 만에 해군의 목표를 개정했다. 해군의 목표는 국가안보 및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의 정책/전략/군사활동의 기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 해군전략도 해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 개정된 해군의 목표에서 한국 해군은 국가를 방위하고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군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해양전에서 승리하며,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⁶²⁾ 위기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생시 승리하며, 평시에는 국가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의 해양사용 거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해양거부로는 개정된 해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해군전략은 전시 또는 위기시 적의 해양사용 거부를 넘어 전 세계 해양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해양권을 보장하고, 평시 국가번영 및 전시 전쟁지속능력 유지의 생명선과 같은 SLOC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해양우세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해양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한국 해군은 해양우세를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 적과 교전과 같은 직접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 전체의 수준에서 전쟁지속능력과 직결되는 SLOC 보호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함 침몰, USV/UAV 활약과 같은 성과에만 주목하다 보면 해군은 해양에서 적과 결전이나 전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러-우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유롭고 안전한 SLOC 사용의 제한은 전쟁지원물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이다. 한국의 무역 수출입 물동량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99.7%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SLOC 보호 임무는 특히 중요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해군 전략가들은 해군의 존재 이유를 적과 교전보다 해양에서 통상 보호를 통해 국가번영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한(Alfred Mahan)은 해군의 필요성은 안전한 통상보호(국가번영)에서 출발하고, 통상보호가 없으면 해군의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언급했다.⁶³⁾ 모스크바함 침몰, USV/UAV의 해상계열라전과 같은 가시적/자극적 성과에만 주목하지 않고 해양우세에 기반한 SLOC 보호 등 적과의 교전을 넘어 평시

62) 노성수, “해군은 국가방위, 번영 뒷받침하는 핵심군,” 『국방일보』 2021.8.20.

63) Kevin McCranie, *Mahan, Corbett, and the Foundations of Naval Strategic Thought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21), p. 177.

해군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컨대, 2021년 한국 해군이 개정한 해군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 해군은 해양거부가 아닌 해양우세를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의 적시적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러-우 전쟁에서 모스크바함 침몰, 소형 무인전력의 활약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형함정/유인전력 무용론에 대해 해군전략은 한국 해군과 우크라이나 해군은 목표가 다르고, 한국 해군의 목표인 해양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대형함정과 유인전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해군전략은 위협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sensible) 반응하여 혁신적인 전력건설을 선도하되(lead), 쉽게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 해군력 운용개념(목표)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나. 해양거부/해양우세 조기 달성을 위한 해군/해병대 전략/작전수행개념 발전

러-우 전쟁에서 확인된 해양거부 달성을 위한 해병대의 역할은 한국 해군과 해병대의 전략 및 작전 수행개념 발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해양우세/해양거부 달성을 위한 해군과 해병대의 협력은 미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해군과 해병대는 심화되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전략 및 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전략적 수준에서는 해군과 해병대가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 대비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통합전략을 수립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2007년 미 해군/해병대/해경이 “21세기 해양력을 위한 협력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과 2020년에는 “해양에서 우위: 통합 전영역 해군력을 통한 지배(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작전적 수준에서도 통합전략에 기반하여 미 해군은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DMO)과 미 해병대는 원정전방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EABO)을 발전시키고 있다. DMO와 EABO는 미 해군과 해병대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개념이 아니라, 해양거부/해양우세 달성을 통해 적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⁶⁴⁾ 미 해병대사령관 버거(David Berger) 대장은 미 해병대는 미래전을 준비함에 있어 과거 해군이 제공하던 해양통제에 기반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부대가 아니라 증가하는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의 해양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⁶⁵⁾

64) US Marine Corps, *Tentative Manual for EABO, 2nd Edition*(Washington D.C: US Marine Corps, 2023), p. 1-1 ~ 1-6.

65) Steven Stashwick, “US Marine Corps Unveils Transformation Plan Focused on China,” *The*

한국 해군과 해병대도 증가하는 적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을 고려하여 위기시 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전시 적의 자유로운 해양활동 거부 및 해양우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전략과 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군과 해병대가 공동 또는 고유의 영역에서 해양우세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전략과 작전 수행개념, 전력발전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2. 해군전력 건설 측면에서 함의

가. 전체적인 전력구조의 틀(frame)에서 무인전력의 통합과 발전 추진

저비용/고효율의 무인전력 전투효과는 극대화되, 전체적인 전력구조의 틀 내에서 무인전력을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흑해에서 USV/UAV 등을 비롯하여 새로운 무기체제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작전효과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⁶⁶⁾ 미 해군 유럽/아프리카사령부 전략효과부장 매티스 준장은 2024년 초에 비해 현재는 러시아의 대응수단 발전으로 우크라이나의 무인전력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10배 이상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⁶⁷⁾

지리적 환경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은 흑해에서 USV/UAV, 지대함미사일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혼합)하여 협소한 해역에서 우세한 해군력을 보유한 상대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방된 해역이나 대양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의 USV/UAV가 보여주었던 혁신적인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해에서는 대형함정이 적의 지상 발사 미사일이나 USV/UAV의 위협으로부터 원거리 이격하여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⁸⁾ 해양에서 무인전력의 혁신적 효과는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uneven),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⁶⁹⁾ 따라서 USV/UAV와 같은 무인전력들이 기존의 전력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전력구조에 빈틈없이(seamlessly) 통합되도록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⁷⁰⁾

무인전력을 기존전력과 통합할 때 무인전력이 가지는 장점은, 특히 러-우 전쟁의 사례에

Diplomat, March 25, 2020.

66) Stephen Biddle, "Back in the Trenches: Why New Technology Hasn't Revolutionized Warfare in Ukraine," *The 3rd World Congress of Security Studies*, September 6, 2023, p. 8.

67) John Grady(2025).

68) Scott Savitz and William Courtney(2023).

69) Sidharth Kaushal(2023).

70) Elio Calcagno(2024), p. 43.

서도 알 수 있듯이 무인전력이 해양에서 양적 우세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저가의 다수 USV/UAV를 운용하여 양적 우세를 달성했다.⁷¹⁾ 역사적으로 28번의 해전 중 25번의 해전에서 양적으로 우세한 해군이 승리했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quantity)은 그 자체로 질(quality)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 간 전투능력이 유사한 경우 거의 모든 해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⁷²⁾ 따라서 무인전력을 기존의 유인전력 및 지휘통제체계와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작전효과는 극대화하고, 무인전력을 해양에서 양적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 해양우세 유지를 위한 균형있는 전력 확보 필요

소형 무인전력 또는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만으로 해양우세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제한된다. 해양에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전력을 현시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대형함정을 포함한 균형있는 해군력 건설이 필요하다. 육·공군의 전력 규모는 적의 위협수준과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해군전력의 규모는 해양에서 국가이익에 따라 결정된다.⁷³⁾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해양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전력확보가 필요하며, 해양거부 위주의 전력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USV/UAV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가시적인 작전 성과로 대형 유인함정 확보 축소 등 장기 해군력 건설계획의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 함정확보는 기획부터 건조까지 15년 이상이 필요하다. 잘못된 결정은 즉각 식별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⁷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함정을 확보하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함정도 2개의 전장에 동시 투입될 수 없다.⁷⁵⁾ 한국 해군의 광활한 임무 영역을 고려할 때, 적과 교전만 국한하지 않고 SLOC 보호

71) 김문국(2023), pp. 10-14.

72) 해양에서 양적우세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적의 선제공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화력의 증가, 다수의 공격으로 적의 방어를 어렵게 하는 것, 전력 손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예비의 보유, 다수의 표적으로 적의 공격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Sam Tangredi, "Bigger Fleets Win: In Naval Warfare, a Small Fleet of Superior Quality Is Not a Way to Victory. The Side with the Most Ships Almost Always Win," *Proceeding*, Vol 149, No. 1(January 2023).

73) Geoffrey Till(2017), p. 17.

74) Basil Germond, *Seapower in the Post-Modern World* (Lond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24), p. 57.

75) Geoffrey Till, *How to Grow a Navy: the Development of Maritime Power*(London: Routledge,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양(합성 숫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우크라이나 해군과 같이 소형 무인전력/미사일 위주의 해양거부 달성을 위한 비대칭 전력이 아니라 해양우세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균형있는 해군력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V. 결론

러-우 전쟁이 3년을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흑해에서 주요 해양작전 분석을 통해 해군전략과 전력발전 측면에서 한국 해군에 대한 함의를 도출했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한국 해군은 우크라이나 해군과 목표가 다름을 인식하고, 한국 해군은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적시에 확보하여 우크라이나 해군과 같이 해군전략의 수단이 목표와 방법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군은 단지 적과 교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무역) 보호가 해군의 존재 이유이므로 전쟁지속능력 유지 및 국가변영을 위한 SLOC 보호 임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시 및 위기시 적의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거부하고, 조기 해양우세 달성을 위해 해군/해병대 전력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전략과 작전 수행개념의 발전이 필요하다.

전력건설 측면에서는 소형 무인전력의 가시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무인전력이 기존의 전력 구조와 통합하여 작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인전력을 전체적인 전력 구조의 틀 내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해양우세 확보를 위해 소형 무인전력 위주의 비대칭 수단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대형함정을 보유한 균형 있는 해군력 건설이 필요하다.

해군의 활동영역인 해양의 특성상 해양에서 활동들이 국민들의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relative isolated)있기 때문에, 해양맹목성은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해군은 해양맹목성이라는 근원적인 제한사항을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양맹목성은 전·평시 해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해군의 전략과 전력발전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신 대형함정 1척 건조에 1조원이 넘는 시대이다. 국민(납세자)들이 해양의 중요성과 해군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고가의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군함정 확보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⁷⁶⁾ 다시 말해서 해양맹목성에 대한 극복 없이는 해군전략 및 전력발전도 이루어질

2023), p. 242.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연구도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해양맹목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해양 작전 중심의 교훈을 분석했다. 향후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해양맹목성(Sea Blindness)을 넘어 항상 바다를 생각하고,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해양인지성(Sea Awareness)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이번 연구를 마친다.

76) Nicholas Lambert, "What Is a Navy For? Strategic Purpose Is Not the Same Thing as Operational Necessities," *Proceeding*, Vol. 147, No. 4(April 2021).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강녕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전개/시사점』.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23).
- 김홍철 등. 『세번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를 말하다』. 서울: 북코리아(2024).
-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2023).
- 전재성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23).
- Arthur Lykke.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in Joseph Cerami and James Holcomb(eds.).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Pennsylvania: US Army War College Press(2001).
- Basil Germond. *Seapower in the Post-Modern World*. Lond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2024).
- Dennis Drew and Donald Snow. *Making Twenty-First-Century Strategy: An Introduction to Modern National Security Processes and Problems*. Maxwell: Air University Press(2006).
- Elio Calcagno. "The Naval Domain." in Alessandro Marrone(eds.). *Russia-Ukraine War's Strategic Implications*. Roma: IAI(2024).
- European Parliamentary. "Ukrainian Agriculture from Russian Invasion to EU Integration."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Briefing*. April 2024.
- Geoffrey Till. *How to Grow a Navy: the Development of Maritime Power*. London: Routledge(2023).
- Geoffre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4th edition*. London: Routledge(2017).
- Hal Brands. *War in Ukraine: Conflict, Strategy, and the Return of a Fractured World*. New York: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2024).
- IISS. *Military Balance 2022*. London: Routledge(2022).
- IISS. *Military Balance 2023*. London: Routledge(2023).
- Kevin McCranie. *Mahan, Corbett, and the Foundations of Naval Strategic Thought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2021).
- Thomas Mahnken, Travis Sharp, Grace Kim. *Deterrence by Detection: A Key*

Role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in Great Power Competition.
Washington, D.C.: CSBA(2020).

US Marine Corps. *Tentative Manual for EABO, 2nd Edition.* Washington D.C: US Marine Corps(2023).

2. 논문/논평

강신욱. “인지전 개념과 한국 국방에 대한 함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9권 1호(2023), pp. 179-212.

김문국. “우크라이나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드론 역할분석 및 발전방향 고찰.” 『KRIT Issue Paper』, Vol. 8(2023), pp. 1-9.

김상배. “미래전의 시각으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제173호 (2022), pp. 1-11.

설인효, 배학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 지역에서 함의.” 『국방연구 제66권』, 제2호(2023), pp. 75-109.

신범식, 양정윤.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영향에 대한 고찰.” 『러시아 연구』, 제34권 1호(2024), pp. 129-165.

전재성. “세계안보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포커스』, 제2023권 제3호 (2023), pp. 2-14.

최근대, 나호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대응: 하이브리드전의 이론과 적용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54집(2022), pp. 1-31.

최성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우주전 분석 및 양상, 그리고 우주기술 개발시 고려사항.” 『우주기술과 응용』, 제2권 2호(2022), pp. 169-186.

홍성준·박성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50일간 해양전과 기뢰.” 『The Journal of KNST』, Vol. 7, No. 2(2024), pp. 246-261.

Abhijit Singh. “Geography, Technology, and Circumstance in the Use of Naval Power.” in Kartik Bommakanti(eds.). “The Military Lessons of the Russia-Ukraine War.” *ORF Special Report*, No. 220(2024), pp. 12-16.

B.J. Armstrong. “The Russo-Ukraine War at Sea: Retrospect and Prospect.” *War on the Rock*, April 21, 2022.

Christian Bueger and Timothy Edmunds. “Beyond Seablindness: A New Agenda for Maritime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Affairs*, Vol. 93, No. 6(2017), pp. 1293-1311.

- HI Sutton. "Uncrewed Platforms Have Been Critical to Ukraine's Success in the Black Sea." *RUSI Commentary*, August 20, 2024.
- Ho-Sik Eum, et al. "Wave Energy in Korean Seas from 12-Year Wave Hindcasting."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8(2020).
- Igor Delanoë. "Russia's Black Sea Fleet in the "Special Military Operation" in Ukrain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Report*, February 2024.
- Nicholas Lambert. "What Is a Navy For? Strategic Purpose Is Not the Same Thing as Operational Necessities." *Proceeding*, Vol. 147, No. 4.(April 2021).
- Salvatore Causio, et al. "The Black Sea Near-Past Wave Climate and Its Variability: a Hindcast Study." *Frontiers in Maritime Science*, Vol. 11(2024).
- Sam Tangredi. "Bigger Fleets Win: In Naval Warfare, a Small Fleet of Superior Quality Is Not a Way to Victory. The Side with the Most Ships Almost Always Win." *Proceeding*, Vol 149, No. 1(January 2023).
- Scott Savitz and William Courtney. "The Black Sea and the Changing Face of Naval Warfare." *Rand Corporations Commentary*, October 31, 2023.
- Seth Cropsey. "Naval Consideration in the Russo-Ukrainian War."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5, No. 4(2022).
- Sidharth Kaushal. "The Death of Gorshkov's Navy: The Future of the Russian Surface Fleet." *RUSI Commentary*, June 1, 2022.
- Sidharth Kaushal. "Ukraine's Uncrewed Raid on Sevastopol and the Future of War at Sea." *RUSI Commentary*, February 2, 2023.
- Stephen Biddle. "Back in the Trenches: Why New Technology Hasn't Revolutionized Warfare in Ukraine." *The 3rd World Congress of Security Studies*, September 6, 2023.
- Steven Pifer. "Russia-Ukraine after Three Years of Large-Scale War." *The Brookings Institutions Commentary*, February 19, 2025.
- "Russia's Renewed Attacks on Ukraine's Grain Infrastructure: Why Now? What Next?" *the CSIS Critical Question*, November 25, 2024.

3. 신문기사

노성수. "해군은 국가방위, 변영 뒷받침하는 핵심군." 『국방일보』, 2021.8.20.

- 임상수.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크라 스타링크 군사목적 활용 제한.” 『연합뉴스』, 2023. 2. 9.
- Heather Mongilio. “Updated: Russia Says Damaged Cruiser Moskva Sank Under Tow Headed to Black Sea Homeport.” *USNI NEWS*, April 23, 2022.
- Jared Malsin. “Ukraine's Sea Drones Alter Balance of Power in the Black Sea.” *Wallstreet Journal*, August 11, 2023.
- John Grady. “Battles in the Black Sea Changing the Character of Naval Warfare, Experts Say.” *USNI News*, June 13, 2024.
- John Grady. “Black Sea Conflict Informing U.S. Navy Unmanned Systems, Says Admirals.” *USNI News*, February 28, 2025.
- Sam Lagrone. “Warship Moskva was Blind to Ukrainian Missile Attack, Analysis Shows.” *USNI News*, May 6, 2022.
- Stavros Atlamazoglou. “The Russian Navy Is ‘Slowly Sinking’ in the Black Sea.” *The National Interest*, November 20, 2024.
- Steven Stashwick. “US Marine Corps Unveils Transformation Plan Focused on China.” *The Diplomat*, March 25, 2020.
- “Russia and Ukraine Are Fighting the First Full-Scale Drone War,” *Washington Post*, December 22, 2022.

4. 인터넷 자료

- 미 CSIS 미래전 토론회 발언(24. 4월). <https://www.youtube.com/watch?v=cLmcqy5vJv4&list=W&index=15&t=1184s>.
- Covert Shores. “Timeline of 2022 Ukraine Invasion: War in the Black Sea.” <http://www.hisutton.com/Timeline-2022-Ukraine-Invasion-At-Sea.html>.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Ukraine Strike Have Changed Russian Naval Operations in the Black Sea.”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ukrainian-strikes-have-changed-russian-naval-operations-black-sea>.

Lessons from the Russia-Ukraine War at Sea a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val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

Han, Jonghwan

Keywords

the Russia-Ukraine War, Maritime Operations, Naval Strategy, Naval Force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s maritime operations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and draws important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naval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 Strategically, the ROKN should obtain the timely capabilities to achieve objectives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available means and develop integrated Navy-Marine Corps strategies to deny the free movement of enemy ships and secure maritime superiority during a crisis or war. In terms of force development, unmanned systems should be effectively integrated within the broader force structure, and a balanced fleet that includes large surface combatants is essential to maintain maritime superiority.

[논문투고일: 2025. 4. 27.]

[심사의뢰일: 2025. 5. 21.]

[게재확정일: 2025. 6. 23.]

[서평]

핵비확산과 안보: 한국 핵정책의 역사적 궤적과 함의*

강창우**

1. 격변하는 시대, 핵 문제의 재조명

2020년대 들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의 격랑 속에 놓여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시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실존적 도전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와 평화적 핵 이용의 조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핵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과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중성은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인류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서, 핵 문제가 곧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1975년 비준한 이래 핵의 평화적 원자력 발전에 전념하여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후 2003년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였으며, 지금까지 6번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등 한국과 국제사회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면서도 NPT 체제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계 각층이 협력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용섭 전 국방대학교 부총장이자 명예교수(이하 한용섭 교수 또는 저자)가 집필한 『핵비

* 원전: 한용섭,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박영사, 2022).

**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조교수

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박영사, 2022)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작품이다. 저자는 핵 비확산의 국제정치 역학부터 한국의 독자적인 핵정책 수립 과정, 그리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국가전략적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저자의 표현대로, 한국이 NPT 모범 준수국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국제적, 과학기술적 권리를 찾고,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군사안보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그의 오랜 문제의식과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서평에서는 먼저 저자의 학문적, 정책적 이력을 살펴봄으로써, 이 책이 단순히 이론적 저술을 넘어 핵 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이라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깊이로 다루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책에 담겨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저자의 오랜 학문적 여정과 정책적 고민

한용섭 교수는 한국 핵 정책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국제정치학의 기초를 다진 그는,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와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학위를 통해 핵과 안보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시켰다. 특히 랜드대학원은 군사 전략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세계적인 산실로서, 이곳에서의 학위 과정은 저자에게 핵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과 분석적 틀을 제공했을 것이다.

저자의 학문적 이력은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방부에 몸담으면서 현실 정책 분야와 밀접하게 결합하기 시작한다. 저자는 국방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담당, 국방부 핵정책담당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전략수행위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핵 관련 정책 현안들을 직접 다루는 귀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1991년 12월부터 1년간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의 남측 전략수행요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현장에서의 경험은 핵 문제의 이론적 분석에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적 함의를 온전히 담고자 하는 저자의 학문적 지향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국방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학교 부총장을 지내며

학문적 연구를 지속하면서도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한국병화학회 회장, 한국핵정책학회 초대회장 역임을 통해 국내 학계의 핵 및 안보 정책 연구를 선도하고 관련 학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한국핵정책학회는 저자가 지난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자문단의 일원으로서 임무수행할 당시 한국의 행정책공동체와 핵공학공동체 간의 융합학문적 네트워크의 재건 필요성을 강조하여 출범된 바 있다. 이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 학문적 접근이 핵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그의 오랜 신념을 보여준다. 한편, 한용섭 교수는 지난 2025년 5월에 한국국가전략학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여전히 학계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저자는 국제적인 학술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중국 외교학원과 상하이 푸단대학교,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의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 미국 몬테레이 비확산연구소, 랜드연구소, 유엔군축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핵 비확산 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층적인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이 책이 단순한 국내적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핵 비확산 레짐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폭넓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한용섭 교수의 풍부한 저서 목록은 그의 전문성과 학문적 깊이를 다시금 입증한다. 『우리 국방의 논리』(2019), 『북한 핵의 운명』(2018),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2015), 『국방정책론』(2012, 2016), 『동북아시아의 핵무기와 핵군축』(2001) 등 다수의 저술은 핵 및 안보 분야에서 정설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연구가 단순히 현안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깊이 있는 이론적,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은 이론과 실무, 국내와 국제적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저자의 오랜 학문적 경험과 정책적 고민이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자가 이 책을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자 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군사안보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NPT 모범 준수국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국제적 과학기술적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집필했음을 밝힌 부분은, 이 책이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책의 구성과 핵심 내용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은 서론, 3개의 장,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핵의 본질적 이해부터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작동 원리, 한국 핵정책의 역사적 전개, 그리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도전과 응전에 이르기까지 핵 문제의 전반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서론은 우라늄탄, 플루토늄탄, 수소탄 등 핵무기의 기술적 측면과 가압경수로, 비등경수로 등 원자력 발전의 기술적 측면을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의 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인다. 또한 한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책이 단순히 기존 연구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관점과 해법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다.

제1장의 핵비확산체제는 핵 비확산 레짐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저자는 NPT 체제의 기원과 5대 핵보유국의 역할을 설명하며, 이후 핵 확산 방지와 확산 시도라는 국제정치적 ‘게임’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인(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사례)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동인(남아프리카 공화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사례)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부분은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성이 크다. 다양한 핵 포기 사례를 통해 동맹을 통한 안보 위협 해소, 경제 제재, 핵비확산조약체제의 존재 등 핵 비확산의 성공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한다. 저자는 기존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효과〉 이론을 확장하여 ‘자주-핵확산’ 대 ‘동맹-핵비확산’의 분석틀을 통해 핵국과 비핵국의 전략적 선택을 4분면으로 나누어 비교 분포도를 제시하는 등 핵 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NPT 평가회의의 역사와 핵무기금지조약(TPNW), IAEA와 같은 NPT 체제를 보조할 수 있는 조약과 기구들에 대한 설명은 핵 비확산 레짐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명확히 보여줌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의 한계와 도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제2장의 한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비핵정책의 선택은 한국 핵정책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추적한다. 저자는 6.25 전쟁 당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논쟁, 그리고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배경 등 한국 핵정책의 뿌리가 되는 사건들을 설명한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시도와 미국의 핵 포기 압력 간의 긴장 관계를 기술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핵 개발의 유혹과 국제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왔는지를 보여준다. 저자가 박정희 시대의 핵 개발 시도를 미화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며,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불신 가중과 평화적 핵 이용 정책 면에

서의 국익 손실을 초래했음을 지적하는 부분은 한국 핵 정책사 해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탈냉전과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한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정책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제3장의 한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과정: 도전과 응전은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역사를 다룬다. 박정희 시대의 원자력 건설과 제1차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 장기계획 수립, 그리고 고리 1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립화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한다. 특히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추진과 원자력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은 한국이 에너지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한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한편, 저자는 원자력 발전의 국가적 중요성과 핵공학 연구 생태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편견과 획일화된 사고보다는 탄소 중립 시대에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대체에너지에 대해 일정량의 탄소를 줄이는데 한계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비교하고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출 성공 사례(UAE, 요르단)와 한미 원자력 협력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의 평화적 핵 주권 확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한미 원자력 협력, 비핵정책 채택과 농축 재처리 문제, 그리고 2010년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에 대한 설명은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결론에서 저자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국의 핵 개발 시도와 포기, 그리고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도출된 교훈을 담고자 한다. 저자는 핵 문제의 국제정치적, 군사전략적, 과학기술적 세부 분야에서는 한미 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을 확보하면서도 제 분야를 통합하는 데에는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평화적 원자력의 모범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도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저자의 제안은 한국의 미래 핵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4. 핵 비확산과 한국의 전략적 지향점, 융합과 통합

한용섭 교수의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은 단순한 학술 저서의 의미를 넘어, 핵이라는 인류의 양날의 검 앞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나

침반과 같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연코 ‘융합’과 ‘통합’이다. 핵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중성처럼, 핵 문제는 단순히 군사안보나 과학기술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그 본질을 파악하거나 효과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오랜 고민과 통찰에서 비롯된 결론이다.

저자는 한국이 NPT의 모범 준수국으로서 평화적 원자력 발전에 전념하면서도, 비핵화의 장점을 세계적으로 선양하고 국제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국익을 충분히 챙겨오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또한 핵공학 측면에서도 세부 기술 연구와 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여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핵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학제간적인 접근은 단순히 학술적 방법론을 넘어, 한국이 당면한 복합적인 핵 안보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전략적 과제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한편, 저자가 원자력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핵 비확산 체제 준수라는 대원칙 속에서 평화적 핵 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출을 통해 경제적 국익을 창출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모두 융합적 사고와 통합적 국가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각 세부 분야(군사 안보, 과학기술, 외교 등)의 부분 최적화를 넘어 전체를 통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지혜이다. 평화적 원자력의 모범 국가로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 안전보장과 확장억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용섭 교수가 이 책을 통해 제시하는 한국 행정책의 이상이자 현실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핵 비확산의 복잡한 국제정치와 한국의 역동적인 핵 정책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며,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 수립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약력(계재순)

장재규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충남대학교 군사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연구 분야는 군구조, 한미동맹, 군사혁신/미래전, 군사이론 등이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방안 연구: 공지전투와비교”(한국 군사학논집, 2021), “전작권 전환: 미래 연합사 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국방정책연구, 2021) “한국군의 합동성 문제 고찰: 인식에 기초한 평가와 해결책”(국가전략, 2022), “한국군의 용병술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군사연구,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전망: 클라우드비츠 삼위일체론 관점에서”(국방정책연구, 2023), “한국의 전략사 창설 정책 평가: 목적 적합성과 구조 효율성 중심으로”(국가안보와 전략, 2023), “군구조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한국군사, 2023) 등 30여 편의 논문이 있다.

E-mail : j10j17@naver.com

유민규

2002년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였고 2012-2016년간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에서 신소재공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역 육군 중령으로 외교부, 국방부, 합참, 전략사에서 확장억제와 북핵대응 전략 기획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유엔 레바논 임무단(UNIFIL)에서 임무 수행 중이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전술핵 운용을 통한 북한 군사전략 변화의 시사점: 부대훈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81집 2호(2025) 등 논문이 있다.

E-mail : c14015ryu@gmail.com

김태양

해군 소령이며, 2025년 국방대학교에서 무기체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대학교 무기체계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4년에 임관하였으며, 주요 군 경력으로는 해군 2함대 고속정 정장, 해군본부 정책실 성과관리담당, 해군 2함대 초계함 작전관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해군 무기체계, 시뮬레이션, 유·무인 복합체계 등이다.

E-mail : kimsun7085@gmail.com

하용훈

1994/1997년에 해군사관학교 해양지질학과와 서울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하였고, 2000년 미국 해군대학원(NPS)에서 공학음향학 석사, 2009년 서울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해군에서는 주로 해양정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아프간 전쟁(해성부대 정보참모)과 이라크 전쟁(CJTF-7 C2 정치군사분석장교) 등 2회 파병 임무를 수행하였고, 주싱가포르국방무관 등을 역임하였다.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현재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업적으로 감시정찰무기체계(소나, 레이다, 수중음향, 인공지능 탐지 등), 함정 무기체계(잠수함, 해양무인체계 등), 화력무기체계(탄도미사일, 함포, 기뢰 등), 방공무기체계(함대공유도탄, 대공탐지 등)와 무기체계 획득정책, 상륙작전, 북극정책 등의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이 있다.

E-mail : yonghoonha@korea.kr

임재강

1987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1990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안보정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2001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조직내 시민의식 행동(OCB)의 구성요인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근무 후 퇴직하였다. 현재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바스티아의 자유주의 관점으로 본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범죄수사학연구』 11집 1호(2025), 리더십, 새마을운동 등 40편의 논문과 『경찰정책학』 등 6권의 저서가 있다.

E-mail : goodman2030@hanmail.net

우평균

1990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199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고려대, 한양대 연구교수와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역임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2021)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유라시아와 유럽: 경쟁·협력·갈등』,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푸틴의 야망과 좌절』,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 우크라이나와 체코에서의 영향력 공작 비교 연구,” “북·러 신조약의 특성과 북·러 관계의 성격: 대피동맹이론의 적용.” “Russia’s Abduction of Children in Ukraine War and Applicability of UN Genocide Convention,” “Commonalities and Implications of the Ukrainian War and the 6·25 Korean War”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mail: oceans2575@hanmail.net

한중환

2005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2008-2009년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2015-2019년간 아이오와주립대(the 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A Vanguard of Foreign Policy over Maritime Claims: Naval Power rather than National Power.”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제32권, 제2호(2020) 등의 논문이 있으며, 국방연구원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2020),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논문공모 최우수상(2018) 등 다수의 논문 공모전에서 해군전략 및 해군력 발전 관련 논문으로 당선되었다. 미국의 외교정책, 해군력, 해양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E-mail : narugger@gmail.com

연구소 소식

◆ 2025 예비전력 「예비군 창설 57주년 기념」 혁신 콜로키움 개최

- ▶ 일자 : 2025. 4.1.(화)
- ▶ 장소 :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 남정세미나실
- ▶ 주제 : 2024년도 국방부 부여과제 발표
- ▶ 주요 발표자 : 예비전력연구센터 강용구 연구원, 정일성 연구원, 양승봉 연구원

◆ 2025 (국제) 아테나워재단 학술회의

- ▶ 일자 : 2025. 4.10.(목)
- ▶ 장소 :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 남정세미나실
- ▶ 주제 :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in Korea and the Region”
- ▶ 주요 발표자 : 박영준 교수(연구소장), 김태현 교수(국방대)

◆ 2025 (국제) 한미일 국방대 공동 학술회의 (인도태평양안보정책포럼)

- ▶ 일자 : 2025.4.30.(수)
- ▶ 장소 : 로카우스 호텔
- ▶ 주제 : 국제정세 변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 ▶ 주요 발표자 : 국방대학교, 미국 국방대학교, 일본 방위연구소 교수 및 학자

◆ 2025 제7차 RINSA세미나 개최

- ▶ 일자 : 2025.5.13.(화)
- ▶ 주제 : RINSA-APCSS 방위산업과 한미동맹
- ▶ 주요 발표자 : APCSS, Prof. David Aclyea, Prof. Lamy Kim

◆ 2025 學·軍·研 세미나 * 예비전력

- ▶ 일자 : 2025.5.20.(화)
- ▶ 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 ▶ 주제 :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방향
- ▶ 주요 발표자 : 국방부, 합참 등 국회의원 등 200여명

◆ 제8차 RINSA세미나 개최

- ▷ 일자 : 2025.5.27.(화)
- ▷ 주제 : Dr. Jermy Stohs 방문 세미나
“European Naval Power From Cold War to Hybrid Wars”
- ▷ 주요 발표자 : ISPK(해양전략안보센터)

◆ 2025 제1차 국내안보학술회의

- ▷ 일자 : 2025.5.28.(수)
- ▷ 장소 :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 ▷ 주제 : 6·25전쟁과 아시아: 새로운 자료와 연구
(군사편찬연구소,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동)
- ▷ 주요 발표자 : 천창광(중국군사과학원), 나가사와 유코(와세다대학),
손경호 교수(국방대)

◆ 제9차 RINSA세미나 개최

- ▷ 일자 : 2025.5.29.(목)
- ▷ 주제 : 국가안보의 새로운 영역과 정책적 과제 (연세대 ASTI, 국립외교원)
- ▷ 주요 발표자 : 정현주 박사, 송태은 교수

◆ 2025 상그릴라대화 공무출장

- ▷ 일자 / 장소 : 2025.5.29.(목) ~ 6.3.(화), 5박 6일, 싱가포르
- ▷ 출장자 : 이숙연 교수(안보정책연구센터장), 이준배 교수(국방경영연구센터장)

『국방연구』 편집 요강

■ 공모 논문의 심사

가. 공모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 논문 접수(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접수)
 - ※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 제출
- (2) 편집위원회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회부 결정
 - ※ 제목 및 내용이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함.
- (3) 논문심사 의뢰(심사는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인이 선정한 심사자 3인)
- (4)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심사 판정
- (5) 최종 판정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
- (6) 논문게재 시 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을 각 논문 후미에 게재

나. 공모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자 수, 심사방법, 심사기한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교내외 심사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투고논문의 심사자를 추천하되, 가능한 교외 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특히,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교내외의 저자일 경우에는 교외 심사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인에게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자문위원회 회의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한 후 시행하며, 심사과정 혹은 회의과정에서 편집간사는 필요한 경우 논문상 저자를 추측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
- (4) 논문의 심사는 각 호별 최종마감일 이후 시행하며, 마감일 이후 4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 투고 및 집필요령

I. 투고 안내

1.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순수 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고, 학술성과 시사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한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에 기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 귀속된다.
4. 기고논문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요약(400자 내외) 및 핵심어(5개 이상)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정보(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6.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문과 각주에는 저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8. 논문제출 시 논문유사도 검사후, 검사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이메일 rinsakj@kndu.ac.kr 로 제출해야 한다.

II.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용지 17~18매)로 한다. 분량 계산은 <한글>의 문서정보-문서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 이상일 때는 본문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1포인트 작게 한다.
-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引用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引用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1) 저서

가) 황병무. 『전쟁과 평화의 이해』 (서울: 오름, 2001). p. 302.

나) Bose, Partha. *Alexander the Great's Art of Strategy* (New York : Gotham Books, 2003), p. 98.

2) 논문

가)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4호(2003), pp. 7-30.

나) Nye, Joseph S.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 21.

3) 편저서

가) 이홍구. “마르크스와 정치이론.” 이홍구(편). 『마르크시즘 100년』(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p. 120.

나) Strange, Susan.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77.

4) 번역서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5) 학위논문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25-26.

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7)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가) 황병무(2001), p. 300.

나) Bose(2003), p. 90.

다) 남궁곤(2003), pp. 25-28.

라) Nye(1999), p. 27.

8) 인터넷 자료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www.dic.mil/jcs/core/nms.html> (검색일: 2005. 5. 4).

9)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일보』 (2003. 4. 19).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Weekly Review*. May 3, 2002, p.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3)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한다.

III.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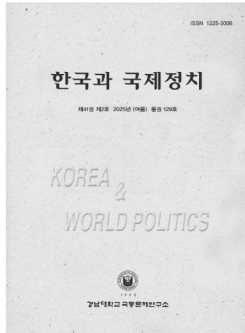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서 쓰고,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2.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I.,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3.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1985), pp.1-2.

4.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 제목 우측 상단에 별도의 각주표시로 기재할 수 있다.
6.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 심사 후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2) 저자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3)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4) 200단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5)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제2호, 2025년(여름) 통권 129호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변명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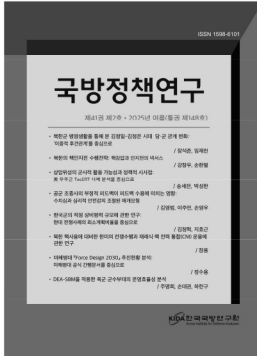


- 미국 고립주의의 두 얼굴 : 중국과 러시아 위협 인식에 따른 상반된 외교 태도
신영호(서강대학교)·하상응(서강대학교)
-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존 미어샤이머의 입장과 그의 공격적 현실주의 간의 관계: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론’과 ‘이론 체계’
백석훈(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딜레마의 이중 연쇄효과: 북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학 안정은(통일연구원)
- 김정은 시기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과 정당성 구축
이경수(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의 중위 민주주의의 함정: 정당 탈제도화와 초양극화의 정치적 귀결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발 간 일: 3/ 6/ 9/ 12월 말일 (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최대 150매 이하)
- 원고접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02) 3700-0708
온라인투고: <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 북한군 병영생활을 통해 본 김정일-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 변화: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 장석준, 임재천
- 북한의 핵인지전 수행전략: 핵강압과 인지전의 넥서스 / 강창우, 손한별
- 상업위성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美 우주군 TacSRT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송세찬, 박성환
- 공군 조종사의 부정적 피드백이 피드백 수용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된 매개모형 / 김영범, 이주연, 손영우
-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 현대 전쟁사례의 최소계획비용을 중심으로 / 김정혁, 지효근
- 북한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의 전쟁수행과 재래식·핵 전력 통합(CNI) 운용에 관한 연구 / 장용
- 미해병대 『Force Design 2030』 추진현황 분석: 미해병대 공식 간행문서를 중심으로 / 정수용
- DEA-SBM을 적용한 육군 군수부대의 운영효율성 분석 / 주명희, 손대권, 하현구

■ 『국방정책연구』 원고모집 안내 ■

『국방정책연구』는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 자료를 수록하는 전문학술지로서 2008년 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인 글은 기고할 수 없으며, 순수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 기고된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투고방법: 『국방정책연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jdpskida.co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심사용 파일 올리기
- 원고접수 마감: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 전화: (02) 961-1291 / e-mail: jdps@kida.re.kr



통일연구원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정책 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기획논문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러시아-중국 관계 / 제성훈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북러관계 / 엄구호

■ 일반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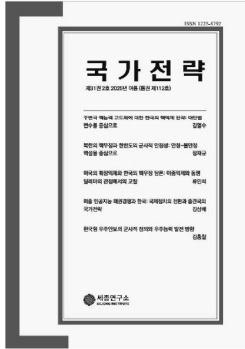
- 북한 노동당 지도체계의 구성과 운용: 시대별 변화를 중심으로 / 김인태
- 북한의 신형기술 안보 넥서스(Nexus)와 군사화: 사이버·우주·인공지능(AI) 안보를 중심으로 / 조준형
- '자력갱생' 관점으로 본 북한 전력산업 분석 / 이재석
- 『경제연구』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관련 논의 변화: 화폐, 가격, 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 양문수
- 통합이론 관점에서 본 전시(戰時) 군사통합 고찰 -신기능주의의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 장혜영·서천규

『통일정책연구』 원고 모집 안내

- ▶ 기고할 논문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원고매수는 국문 원고지 120매 내외입니다.
- ▶ 문의 및 제출처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nu.or.kr>) 및 <http://kinu.jams.or.kr> 공지사항 내 제출양식 및 기희주제 등 공지
 - 논문원고는 <http://kinu.jams.or.kr> 회원가입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 kinups@kinu.or.kr, 전화 02)2023-8072, 팩스 02)2023-8298로 연락바랍니다.
- ▶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 가 전 략

제31권 2호, 2025년 여름호 [통권 제112호]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신장 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창간되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략과 정책 및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정세 분석과 주요 국가 연구 등의 주제를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 주변국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한국의 핵억제 전략: 대안별 변수를 중심으로 / 김열수
-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 안정-불안정 역설을 중심으로 / 장재규
-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무장 담론: 이중억제와 동맹 딜레마의 관점에서의 고찰 / 류인석
- 미중 인공지능 패권경쟁과 한국: 국제정치의 전환과 중견국의 국가전략 / 김상배
- 한국형 우주안보의 군사적 정의와 우주능력 발전 방향 / 김홍철

『국가전략』 원고모집

- ◎ 보내실 글은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구소의 편집방향과 편집기준에 따라서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 상황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 보내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분량으로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원고와 더불어 '400자 내외' 한글 요약문, '200 단어'의 영문 요약문과 국·영문 핵심어 3~5개를 작성하여 투고자의 연락 주소, 전화/휴대폰,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 원고는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dbpiaone.com/sjr/index.do>)에 **회원가입** 후 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편집위원회

E-mail: nationalstrategy@sejong.org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8, Number 2, June 2025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